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현황과 중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총 괄 I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I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I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최성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김 원 예산분석관
곽보영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 원 I 강숙자 행정실무원
이예경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현황과 중점 분석】

2025. 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5. 9. 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지정된 331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4년 기준 947조 3,919억원(부설기관 포함)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의 혁신 전략을 이끌어갈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은 안전 및 노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심사 역시 발맞추어 앞으로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중점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공요금 관련 문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실시 및 면제사업의 집행 현황, 공공기관별 재정자금 관리 문제,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현황 등 주요 중점별 이슈를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권 및 3권에서는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 현황과 재무건전성, 사업부진 문제, 출자회사 관리 현황, 공공기관 자본금 미등기 문제 및 동반성장협력대출 운영 등 기관별 이슈를 정리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차 례

CONTENTS

현 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 3
2.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 14
3. 공공기관 재무 현황 ····· 22
4. 공공기관 인력 현황 ····· 27
5.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 31
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40
7.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 ····· 46
8.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 52

중점 분석

1.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63

1-1.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관리 약화 ····· 63

1-2.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을 직접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검토 필요 ····· 66

1-3.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및 개선점 분석 ····· 74



CONTENTS

2. 공공요금 현황과 주요 이슈 ····· 80

2-1.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 80

2-2. 공공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현황과 이슈 ····· 84

2-3. 공공요금 원가검증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무부처의 공공요금정산서 검토 필요 ····· 102

3. 정부 출자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세 부담 및 자본금 등기 현황 분석 ···· 107

3-1.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 111

3-2.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자본금 미등기 문제 ····· 121

3-3. 유상증자 후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 회계처리의 통일성 확보 필요 ··· 126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 현황 분석 ····· 131

4-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계획 대비 수익 저조 문제 ····· 131

4-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계획 대비 집행 저조 문제 ····· 142

4-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투자심의회 심의를 면제한 문제 ····· 146

4-4. 지침에 규정된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제도의 법률 근거 마련 필요 ····· 149

5. 공공기관 예탁 재정자금 관리 현황 분석 ····· 153

6.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의 분석 ····· 182

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 189

7-1.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 189

7-2. 경영실적평가 결과 후속조치의 변화 ····· 202



CONTENTS

8.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 분석: 경영실적평가를 중심으로 ····· 205
9.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 222
1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분석 ····· 232
1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 분석 ····· 241
12.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분석 ····· 271
13.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분석 ····· 278
14.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분석 ····· 288
15.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명 현황 및 문제점 ····· 301
16. 공공기관 주요 구매 실적 현황 분석 ····· 311
17.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 332
18.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현황 ····· 344
19. 공공기관 지침 위반 대출 제도 운영 문제 ····· 352
20. 공공기관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 361



현 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며, 기관의 규모, 정부지원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이 이루어짐

- ◦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 등 공공기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경영실적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공시, 경영혁신 등이 적용됨
- ◦ 공공기관 중 직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함
  -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그 외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1] 그 중 기금관리 및 기금관리 위탁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부업무 위탁집행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관리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운영상 자율성이 높음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2023.1.1.)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이 상향됨
(정원) 50명 이상 → 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2025년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분류기준</th><th>기관 예시</th></tr>
<tr><td rowspan="2">공기업
(31개)</td><td>시장형
(14개)</td><td rowspan="4">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td><td>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td></tr>
<tr><td>준시장형
(17개)</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d>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td></tr>
<tr><td rowspan="2">준정부 기관
(57개)</td><td>기금관리형
(12개)</td><td rowspan="2">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td><td>「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td><td>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td></tr>
<tr><td>위탁집행형
(45개)</td><td>정부업무의 위탁집행</td><td>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
(243개)</td><td colspan="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d>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td></tr>
<tr><td colspan="6">총 331개</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 2025년 4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31개로 2024년 327개 대비 4개 증가

◦ (신규지정 +4)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 (지정해제) 없음

◦ (유형변경) 대한석탄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변경

◦ 공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1개 감소(32개→31개)하였고, 준정부기관의 수는 전년 대비 2개 증가(55개→57개)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개 증가(240개→243개)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2024	2025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1	△1	-	-	-
■ 시장형	14	14	-	-	-	+1
■ 준시장형	18	17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7	+2	-	-	-
■ 기금관리형	12	12	-	-	-	+1
■ 위탁집행형	43	45	+2	-	-	△1
③ 기타공공기관	240	243	+3	+3	△23	-
합계	327	331	+4	+3	△23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2025년도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58개로 가장 많고,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7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5개 순임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2025년)]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법제사법 위원회 (3)	법무부 (3)	기타공공기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무위원회 (3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5)	기타공공기관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가보훈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2)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공정거래위원회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소비자원
		기타공공기관(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3)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획재정 위원회 (6)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조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관세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원산지정보원
	통계청(1)	기타공공기관(1)	(재)한국통계정보원
교육위원회 (22)	교육부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2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5)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1)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외교통일 위원회 (5)	외교부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1)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2)	기타공공기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외동포청(1)	기타공공기관(1)	재외동포협력센터
국방위원회 (5)	국방부 (3)	기타공공기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2)	기타공공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행정안전 위원회 (6)	행정안전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혁신처(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도로교통공단
	소방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34)	문화체육관광부 (33)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관광공사
		기타공공기관 (3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유산청(1)	기타공공기관(1)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35)	농림축산식품부 (1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마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공공기관 (8)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해양수산부 (17)	준시장형 공기업(1)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15)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58)	산업통상자원부 (41)	시장형 공기업 (11)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14)	대한석탄공사, 무역안보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한전엠씨에스(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8)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특허청(6)	기타공공기관 (6)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보건복지 위원회 (34)	보건복지부 (2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생명존중희망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5)	기타공공기관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환경노동 위원회 (26)	환경부 (11)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1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공공기관 (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APEC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토교통 위원회 (29)	국토교통부 (29)	시장형 공기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집행형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단위: 개)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명
		준정부기관(4)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타공공기관 (16)	건설기술교육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여성가족 위원회 (5)	여성가족부 (5)	기타공공기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 ( )안의 숫자는 기관 수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 331개(2025년 1월 기준)의 지출(수입)은 2024년 기준 947조 3,919억원으로 2023년 대비 32조 7,293억원 증가함(부설기관 포함)

◦ 2023년 전체 지출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27.6%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2.8%, 기타공공기관 20.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2%, 준시장형 공기업 8.7%를 차지함

◦ 2024년 지출 총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기타공공기관(25조 1,534억원, 14.6%p),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6조 2,521억원, △2.8%p)임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비중)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2,610,592 (27.6)	7,275 (0.3)
	준시장형	657,602	738,374	741,277	770,124	819,564 (8.7)	49,440 (6.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864,150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2 (22.8)	△62,521 (△2.8)
	위탁집행형	1,448,645	1,579,138	1,728,549	1,828,719	1,910,285 (20.2)	81,566 (4.5)
기타공공기관		1,605,138	1,425,240	2,100,146	1,721,303	1,972,836 (20.8)	251,534 (14.6)
합계		7,202,944	7,479,717	9,428,465	9,146,626	9,473,919 (100.0)	327,293 (3.6)

주: 1.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2.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3. 기타공공기관인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4개 공공기관의 2024년 총지출은 261조 592억원임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78.8%(2024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전력공사	652,380	765,284	1,141,126	1,096,191	1,185,288
한국가스공사	245,447	302,545	561,193	488,685	432,678
한국수력원자력(주)	125,449	121,320	140,627	151,901	168,107
한국도로공사	128,334	133,166	148,900	163,806	155,833
한국석유공사	84,135	64,182	86,260	100,799	113,965
5개 기관 계(A)	1,235,745	1,386,497	2,078,105	2,001,382	2,055,871
전체 시장형 공기업 합계(B)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2,610,592
비중(A/B)	75.9	76.1	76.2	76.9	78.8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7개 공공기관의 2024년 총지출은 81조 9,564억원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주)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86.6%(2024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입 · 지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447,907	499,534	449,236	429,392	458,576
한국철도공사	66,554	79,944	100,358	97,364	101,981
주택도시보증공사	15,046	16,510	17,757	56,109	69,519
한국수자원공사	49,308	56,689	64,395	63,497	60,299
한전KPS(주)	14,381	14,644	14,959	14,829	19,260
5개 기관 계(A)	593,196	667,321	646,705	661,191	709,635
전체 준시장형 공기업 합계(B)	657,602	738,374	741,277	770,124	819,564
비중(A/B)	90.2	90.4	87.2	85.9	86.6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12개 공공기관의 2024년 총지출은 216조 642억원임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 · 지출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 · 지출의 79.1%(2024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입 · 지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주택금융공사	657,174	511,687	371,874	677,868	510,953
국민연금공단	264,614	299,694	349,071	399,503	446,133
공무원연금공단	227,480	232,064	249,031	273,966	301,557
예금보험공사	250,038	252,517	253,156	293,759	299,1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0	169,455	164,078	157,159	151,207
5개 기관 계(A)	1,558,166	1,465,418	1,387,211	1,802,256	1,709,011
전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합계(B)	1,864,150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2
비중(A/B)	83.6	76.6	65.1	81.1	79.1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8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4년 총지출은 191조 285억원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 · 지출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 · 지출의 87.0%(2024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입 · 지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946,570	1,043,015	1,164,493	1,235,231	1,296,255
국가철도공단	92,127	103,473	102,652	110,617	120,913
한국연구재단	71,614	77,850	85,378	98,030	100,088
한국장학재단	85,793	83,195	91,823	95,854	97,292
한국농어촌공사	41,601	44,518	45,654	46,748	47,103
5개 기관 계(A)	1,237,706	1,352,052	1,490,001	1,586,480	1,661,652
전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B)	1,448,645	1,579,138	1,728,549	1,828,719	1,910,285
비중(A/B)	85.4	85.6	86.2	86.8	87.0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253개 공공기관(10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4년 총 지출은 197조 2,836억원임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해양진흥고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타공공기관 전체 수입 · 지출의 79.2%(2024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수입 · 지출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소기업은행	563,547	496,935	697,830	609,239	672,094
한국산업은행	454,827	343,707	594,541	361,713	445,212
한국수출입은행	161,272	95,121	298,069	221,426	296,99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0,529	130,755	125,161	112,713	115,650
한국해양진흥공사	11,925	8,390	15,020	18,724	33,205
5개 기관 계(A)	1,282,101	1,074,909	1,730,621	1,323,815	1,563,157
전체 기타공공기관 합계(B)	1,605,138	1,425,240	2,100,146	1,721,303	1,972,836
비중(A/B)	79.9	75.4	82.4	76.9	79.2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수입은 2024년 기준 128조 557억원, 2023년 수입(117조 9,943억원) 대비 10조 614억원(8.5%) 증가함

○ 2024년 정부순지원수입 규모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8.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3.1%), 기타공공기관(12.2%), 준시장형 공기업(4.5%), 시장형 공기업(1.8%)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 정부순지원수입의 대부분(81.6%)을 차지하고, 자체사업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공기업은 비중이 6.3%로 매우 낮음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기업	60,330 (6.5)	77,758 (8.0)	78,745 (7.4)	68,596 (5.8)	80,021 (6.2)
시장형	18,270 (2.0)	23,092 (2.4)	25,280 (2.4)	18,194 (1.5)	22,786 (1.8)
준시장형	42,060 (4.5)	54,666 (5.6)	53,465 (5.0)	50,402 (4.3)	57,235 (4.5)
준정부기관	711,812 (76.8)	757,886 (77.4)	842,880 (78.8)	954,546 (80.9)	1,044,944 (81.6)
기금관리형	372,653 (40.2)	385,774 (39.4)	445,054 (41.6)	560,003 (47.5)	620,919 (48.5)
위탁집행형	339,159 (36.6)	372,112 (38.0)	397,826 (37.2)	394,543 (33.4)	424,025 (33.1)
기타공공기관	153,905 (16.6)	142,929 (14.6)	148,204 (13.9)	156,801 (13.3)	155,592 (12.2)
합계	926,047 (100.0)	978,572 (100.0)	1,069,829 (100.0)	1,179,943 (100.0)	1,280,557 (100.0)

주: ( ) 안은 해당 연도의 총계 중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5%로 전년 대비 0.6%p 증가

- 2024년 총수입 중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8.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2.2%), 기타공공기관(7.9%), 준시장형 공기업(7.0%), 시장형 공기업(0.9%)임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기업	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18,270	23,092	25,280	18,194	22,786
		총수입(B)	1,627,409	1,822,550	2,727,812	2,603,316	2,610,592
		비중(A/B)	1.1	1.3	0.9	0.7	0.9
	준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42,060	54,666	53,465	50,402	57,235
		총수입(B)	657,602	738,374	741,277	770,124	819,564
		비중(A/B)	6.4	7.4	7.2	6.5	7.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정부순지원수입(A)	372,653	385,774	445,054	560,003	620,919
		총수입(B)	1,864,150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2
		비중(A/B)	20.0	20.2	20.9	25.2	28.7
	위탁집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339,159	372,112	397,826	394,543	424,025
		총수입(B)	1,448,645	1,579,138	1,728,549	1,828,719	1,910,285
		비중(A/B)	23.4	23.6	23.0	21.6	22.2
기타공공기관	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39,498	14,687	7,250	3,429	4,900
		총수입(B)	1,179,647	935,763	1,590,440	1,192,377	1,414,301
		비중(A/B)	3.3	1.6	0.5	0.3	0.3
	비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114,407	128,242	140,954	153,372	150,692
		총수입(B)	425,491	489,477	509,706	528,926	558,535
		비중(A/B)	26.9	26.2	27.7	29.0	27.0
	소계	정부순지원수입(A)	153,905	142,929	148,204	156,801	155,592
		총수입(B)	1,605,138	1,425,240	2,100,146	1,721,303	1,972,836
		비중(A/B)	9.6	10.0	7.1	9.1	7.9
합계		정부순지원수입(A)	926,047	978,572	1,069,829	1,179,943	1,280,557
		총수입(B)	7,202,944	7,479,717	9,428,465	9,146,626	9,473,919
		비중(A/B)	12.9	13.1	11.3	12.9	13.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공공기관 재무 현황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 공기업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함
-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함
-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결산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음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비교]

절차		정부 결산	공공기관 결산
자체 결산서 작성 및 제출·승인	중앙관서의 장(기관장) →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2월 말	3월 15일까지 제출, 4월 10일까지 승인
결산서 감사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 감사원	4월 10일	5월 15일
회계검사 결과 기획재정부 송부	감사원 → 기획재정부장관	5월 20일	7월 10일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 국회	5월 31일	7월 31일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 2024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151.9조원, 부채총액은 741.5조원, 당기순이익은 8.1조원으로 2023년 대비 자산은 54.5조원, 부채는 31.8조원, 당기순손익은 11.4조원이 증가함[1)]

◦ 2024년 부채비율은 180.6%로 나타났으며, 2023년 대비 2024년의 부채 증가율보다 자본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전년 183.0% 대비 2.3%p 하락함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20년 26.3%에서 2023년 29.6%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4년에는 29.1%로 소폭 감소함

[공공기관 자산 · 부채 · 당기순이익 현황(2020~2024)]

(단위: 조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890.2	961.9	1,048.0	1,097.5	1,151.9	54.5	5.0
부채	541.8	584.4	671.0	709.6	741.5	31.8	4.5
(부채비율)	155.5	154.8	177.9	183.0	180.6	△2.3	-
(GDP 대비 비율)	26.3	26.3	28.9	29.6	29.1	△0.5	-
당기순이익	5.2	10.8	△14.0	△3.2	8.1	11.4	-

주: 1.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기본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인용함에 따라 위 표의 수치 중 일부에서 단수 차이가 발생함
3. GDP 대비 부채비율 산정 시 GDP는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지표를 사용하였음
4. 합계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전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5.4.3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결과는 202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외된 것임

❑ 국가부채 통계는 포괄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는 1,126.8조원(GDP대비 46.9%)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3조원(GDP대비 50.7%),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3조원(GDP대비 69.7%) 수준임

◦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를 의미함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함

◦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임

[국가부채 통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유형	2023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126.8조원 (46.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217.3조원 (50.7%)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673.3조원 (69.7%)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주: 상기 GDP 대비 부채비율 산정 시 GDP는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지표를 사용하였고, 2024년의 GDP 기준연도 변경을 반영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반정부 부채(D2)는 2023년 1,217.3조원(GDP 대비 50.7%)이며, 2022년 1,157.2조원(GDP 대비 49.8%) 대비 60.1조원이 증가함

◦ 이 중 중앙정부에 속한 비영리공공기관(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 포함)의 부채는 2022년 55.0조원(GDP 대비 2.4%)에서 2023년 59.0조원(GDP 대비 2.5%)으로 4조원 증가함

◦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산출 시 포함된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중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21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임

[일반정부 부채(D2)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2022(A)	2023(B)	증감(B-A)
일반정부 부채 (=①+②+③)	1,157.2	1,217.3	60.1
중앙정부(①)	1,104.2	1,167.6	63.4
- 회계 · 기금	1,064.6	1,128.3	63.7
- 비영리공공기관	55.0	59.0	4.0
- 내부거래	△15.4	△19.7	△4.3
지방정부(②)	72.8	70.7	△2.0
- 회계 · 기금	70.6	67.5	△3.1
- 비영리공공기관	3.5	4.3	0.8
- 내부거래	△1.3	△1.0	0.3
내부거래(③)	△19.8	△21.0	△1.2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부문 부채(D3)는 2023년 1,673.3조원(GDP 대비 69.7%)이며 2022년 1,588.7조원(GDP 대비 68.4%) 대비 84.6조원이 증가함

◦ 중앙 비금융공기업(KBS, EBS,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포함)의 부채는 2023년 504조원(GDP 대비 21.0%)이며, 2022년 481.4조원(GDP 대비 20.7%) 대비 22.6조원 증가함

[공공부문 부채(D3)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2022(A)	2023(B)	증감(B-A)
공공부문 부채 (=①+②+③)	1,588.7	1,673.3	84.6
일반정부(①)	1,157.2	1,217.3	60.1
비금융공기업(②)	517.4	545.4	28.0
- 중앙 비금융공기업	481.4	504.0	22.6
- 지방 비금융공기업	50.9	54.6	3.8
- 내부거래	△14.9	△13.2	1.7
내부거래(③)	△85.9	△89.5	△3.5

자료: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4.12. 바탕으로 재작성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4년 말 부채총액은 878.2조원으로 2023년 대비 45.1조원 증가하였으며, 2024년 당기순이익은 5.8조원으로 2023년 대비 1.6조원 감소함

◦ 3개 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나타난 데 비해, 한국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함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2022	2023(a)	2024(b)	증감(b-a)	2022	2023(c)	2024(d)	증감(d-c)
한국산업은행	315.8	308.1	328.6	20.5	△7.9	4.0	2.1	△1.9
한국수출입은행	107.6	108.4	111.7	3.3	0.4	0.8	1.0	0.3
중소기업은행	401.9	416.6	438.0	21.4	2.7	2.7	2.7	0.0
합계	825.3	833.1	878.2	45.1	△4.8	7.5	5.8	△1.6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말 기준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2]은 14.60%로, 2023년 14.37% 대비 상승함

◦ 2024년 말 기준 시중 은행의 평균 BIS비율(총자본)은 15.58%[3]로, 3개 기관의 평균 BIS비율인 14.60%는 시중 은행 대비 0.98%p 낮음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BIS비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산업은행	15.01	14.47	13.36	14.18	14.86	15.26	14.80	14.05	15.96	14.88	13.40	13.68	13.71
한국수출입은행	11.61	11.60	10.50	10.04	10.77	12.90	14.42	14.56	15.09	14.84	13.38	14.57	15.41
중소기업은행	12.37	12.30	12.39	12.51	13.13	14.20	14.50	14.47	14.82	14.85	14.68	14.87	14.69
3개 은행 평균	13.00	12.79	12.08	12.24	12.92	14.12	14.57	14.36	15.29	14.86	13.82	14.37	14.6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BIS비율은 은행의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로, BIS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경영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산식〉 $\text{BIS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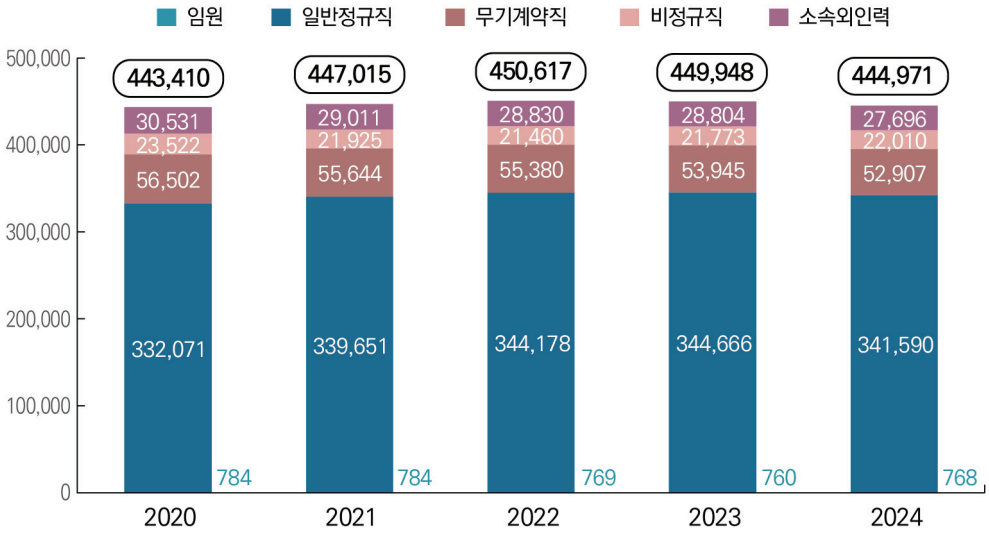
3) 금융감독원, "'24년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2025.3.31.

4 공공기관 인력 현황

❑ 2024년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과 소속외인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인력(현원기준)은 44만 4,971명임

○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2023년 대비 4,977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정규직이 전년 대비 4,106명 감소, 비정규직은 237명 증가, 소속외인력은 1,108명 감소함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정규직	임원	784 (0.2)	784 (0.2)	769 (0.2)	760 (0.2)	768 (0.2)	8	△0.5
	일반 정규직	332,071 (74.9)	339,651 (76.0)	344,178 (76.4)	344,666 (76.5)	341,590 (75.8)	△3,076	0.7
	무기 계약직	56,502 (12.7)	55,644 (12.5)	55,380 (12.3)	53,945 (12.0)	52,907 (11.7)	△1,038	△1.6
	소계	389,357 (87.8)	396,079 (88.6)	400,327 (88.8)	399,371 (88.6	395,265 (87.7)	△4,106	0.4
비정규직		23,522 (5.3)	21,925 (4.9)	21,460 (4.8)	21,773 (4.8)	22,010 (4.9)	237	△1.6
소속외인력		30,531 (6.9)	29,011 (6.5)	28,830 (6.4)	28,804 (6.4)	27,696 (6.1)	△1,108	△2.4
합계		443,410 (100.0)	447,015 (100.0)	450,617 (100.0)	449,948 (100.0)	444,971 (100.0)	△4,977	0.1

주: ( )는 비중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은 42만 3,069명 현원은 39만 5,265명

◦ 2024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1,965명 증가, 현원은 전년 대비 4,106명 감소

◦ 공공기관 임직원 정규직의 2024년 정원은 42만 3,069명이었으나 현원은 2만 7,804명 미충원된 39만 5,265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정원에 비해 2만명 이상, 정원의 5% 이상 미충원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정원의 6.6%, 총 2만 7,804명 미충원 되었음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현황(2020~2024)]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8,708	149,183	150,301	147,909	148,756	847	0.01
시장형	74,701	75,530	76,169	75,027	75,438	411	0.3
준시장형	74,007	73,653	74,132	72,882	73,318	436	△0.2
준정부기관	114,063	117,209	119,088	116,478	117,429	951	0.7
기금관리형	30,107	31,063	31,660	30,890	31,124	234	0.8
위탁집행형	83,956	86,146	87,428	85,588	86,305	717	0.7
기타공공기관	152,583	156,728	160,489	156,716	156,883	167	0.7
은행형 공공기관	18,191	18,504	18,610	18,274	18,345	71	0.2
기타	134,392	138,224	141,879	138,443	138,539	96	0.8
합계	415,353	423,120	429,878	421,104	423,069	1,965	0.5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 현황(2020~2024)]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2,912	143,214	144,135	143,162	142,739	△423	△0.0
시장형	72,596	73,054	73,677	73,017	72,925	△92	0.1
준시장형	70,316	70,160	70,457	70,145	69,814	△331	△0.2
준정부기관	108,323	111,786	112,827	112,624	112,405	△219	0.9
기금관리형	28,326	29,206	29,438	29,546	29,605	59	1.1
위탁집행형	79,997	82,580	83,389	83,077	82,800	△277	0.9
기타공공기관	138,122	141,080	143,365	143,585	140,122	△3,463	0.4
은행형 공공기관	16,868	16,963	16,914	16,794	16,866	72	0.0
기타	121,254	124,116	126,451	126,792	123,256	△3,536	0.4
합계	389,357	396,079	400,327	399,371	395,265	△4,106	0.4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대비 현원 비교(2020~2024)]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정원(C)	415,353	423,120	429,878	421,104	423,069	1,965
현원(D)	389,357	396,079	400,327	399,371	395,265	△4,106
차이(C-D)	25,996	27,041	29,551	21,733	27,804	6,071
비율[(C-D)/C]	6.3	6.4	6.9	5.2	6.6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 2024년 공공기관(2025년 지정 기준)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는 약 7,170만원으로 2023년 6,990만원에 비해 약 180만원(전년 대비 2.5%) 증가

- ○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시장형 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가장 높으며, 기타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낮음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보수가 전체 공공기관 평균 수준 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서도 높음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 현황(2020~202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82,597	81,911	83,491	84,613	86,024	1,411	1.0
시장형	87,362	86,853	88,887	89,386	91,860	2,474	1.3
준시장형	78,427	77,841	79,047	80,682	81,218	536	0.9
준정부기관	69,921	70,353	71,179	72,581	74,131	1,550	1.5
기금관리형	79,213	79,507	80,435	81,645	83,180	1,535	1.2
위탁집행형	67,598	68,065	68,865	70,315	71,868	1,553	1.5
기타공공기관	64,626	65,292	66,098	67,458	69,362	1,904	1.8
은행형 공공기관	107,879	108,885	109,299	109,822	112,890	3,068	1.1
기타	62,815	64,246	65,315	66,950	68,839	1,889	2.3
전체	67,161	67,686	68,559	69,898	71,695	1,797	1.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상위 5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순임

- 한국투자공사는 전년 대비 평균 보수액이 1,433만원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평균 보수수준(1억 2,374만원)을 보였으며,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2%이었음
- 상위 2~4위까지의 기관은 금융공공기관이며, 각 기관의 2024년 평균 보수액은 한국산업은행 1억 1,466만원, 한국수출입은행 1억 1,292만원, 중소기업은행 1억 1,109만원 등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1억 893만원이었으며,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이 2.4%로 공공기관 평균(1.6%)에 비해 높았음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한국투자공사	108,969	115,957	115,725	109,405	123,738	14,333	3.2
한국산업은행	111,999	113,703	112,890	112,999	114,659	1,660	0.6
한국수출입은행	104,514	105,231	106,157	107,862	112,924	5,062	2.0
중소기업은행	107,125	107,722	108,849	108,606	111,088	2,482	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049	99,480	101,153	104,382	108,925	4,543	2.4
전체 평균	67,161	67,686	68,559	69,898	71,695	1,797	1.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하위 5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평균 보수는 3,82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만원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5,416	36,867	37,985	41,266	38,229	△3,037	1.9
코레일관광개발(주)	33,407	39,964	39,410	40,045	40,752	707	5.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3,241	42,978	43,718	43,218	44,957	1,739	1.0
한국보육진흥원	38,495	39,147	40,713	42,965	45,478	2,513	4.3
코레일로지스(주)	43,548	45,350	46,828	46,980	46,253	△727	1.5
전체 평균	67,161	67,686	68,559	69,898	71,695	1,797	1.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2024년 1억 9,117만원으로 2023년 1억 8,638만원 대비 479만원 증가하였으며, 2020~202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5%임

◦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보수는 매년 가장 높은 수준, 기타공공기관은 동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임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보수는 2024년 기준 4억 534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보수는 2024년 2억 343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25만원이 증가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보수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218,004	206,499	202,370	189,876	194,429	4,553	△2.8
시장형	231,722	221,655	216,233	180,183	203,428	23,245	△3.2
준시장형	206,000	194,017	190,953	197,859	187,019	△10,840	△2.4
준정부기관	193,519	194,449	196,741	210,486	213,697	3,211	2.5
기금관리형	243,993	253,087	255,554	258,876	265,423	6,547	2.1
위탁집행형	180,060	178,813	181,058	197,582	199,903	2,321	2.6
기타공공기관	171,922	176,194	179,921	179,967	185,173	5,206	1.9
은행형 공공기관	397,105	419,330	390,865	383,153	405,335	22,182	0.5
기타	168,837	172,923	177,096	177,293	182,276	4,983	1.9
전체	180,380	182,500	185,174	186,383	191,169	4,786	1.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기관장 보수 상위 5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기관장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국립암센터로 2024년 4억 3,030만원임

[기관장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국립암센터	340,367	348,156	382,361	360,704	430,302	69,598	6.0
한국투자공사	455,744	471,136	424,763	380,331	429,946	49,615	△1.4
한국수출입은행	388,795	397,753	370,782	375,135	420,477	45,342	2.0
중소기업은행	413,724	423,257	431,030	399,188	410,119	10,931	△0.2
한국산업은행	388,795	436,979	370,782	375,135	385,408	10,273	△0.2
전체 평균	180,380	182,500	185,174	186,383	191,169	4,786	1.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기관장 보수 하위 5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며, 전체 공공기관 중 2024년 기관장 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방전직교육원으로 9,748만원이었음

[기관장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국방전직교육원	103,969	104,620	104,015	117,452	97,479	△19,973	△1.6
코레일로지스(주)	91,909	116,540	118,008	119,546	100,374	△19,172	2.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80,813	75,504	94,044	114,850	107,884	△6,966	7.5
한국치산기술협회	106,776	166,883	191,558	179,333	108,796	△70,537	0.5
국악방송	107,898	110,657	110,393	112,037	109,133	△2,904	0.3
전체 평균	180,380	182,500	185,174	186,383	191,169	4,786	1.5

주: 2025년 기관운영 종료 및 기관장 장기 공석인 대한석탄공사 제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보수는 2024년 1억 5,969만원으로 전년(1억 5,648만원) 대비 321만원(2.0%) 증가함

◦ 2020~2024년 동안 상임이사 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4년 기준 2억 605만원,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24년 기준 1억 4,308만원임

◦ 시장형 공기업의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2024년 1억 5,4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9만원이 증가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년 대비 619만원 감소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1억 5,648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보수와 비슷한 수준임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2024년 기준 2억 9,549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보수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63,580	156,286	151,899	144,614	148,303	3,689	△2.4
시장형	173,143	167,006	161,451	138,956	154,642	15,686	△2.8
준시장형	155,213	147,458	144,032	149,274	143,083	△6,191	△2.0
준정부기관	153,784	156,846	159,640	169,969	171,871	1,902	2.8
기금관리형	191,786	201,544	202,403	204,207	206,050	1,843	1.8
위탁집행형	141,783	142,731	146,136	159,157	161,077	1,920	3.2
기타공공기관	147,465	149,093	152,199	152,647	156,482	3,835	1.5
은행형 공공기관	296,789	308,937	284,561	283,319	295,488	12,169	△0.1
기타	143,721	145,160	149,137	149,514	153,088	3,574	1.6
전체	152,557	152,886	154,452	156,480	159,686	3,206	1.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상임이사 보수 상위 5개 기관은 한국장학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이사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투자공사로 3억 1,552만원 수준임

[상임이사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한국투자공사	324,994	336,451	306,246	300,053	315,515	15,462	△0.7
중소기업은행	314,576	321,908	310,496	300,300	308,778	8,478	△0.5
한국산업은행	295,622	318,203	278,882	282,204	290,171	7,967	△0.5
한국수출입은행	280,170	286,699	264,305	267,454	287,516	20,062	0.6
한국장학재단	222,523	220,307	225,689	259,903	257,252	△2,651	3.7
전체 평균	152,557	152,886	154,452	156,480	159,686	3,206	1.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상임이사 보수 하위 5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이사 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코레일로지스(주)로 8,030만원 수준임

[상임이사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코레일로지스(주)	73,527	93,232	94,406	95,637	80,299	△15,338	2.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71,168	75,660	76,780	82,400	90,222	7,822	6.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0,202	95,376	102,510	98,346	98,220	△126	△0.5
코레일테크(주)	90,863	102,055	103,477	95,637	98,612	2,975	2.1
재외동포협력센터	-	-	-	-	100,322	100,322	-
전체 평균	152,557	152,886	154,452	156,480	159,686	3,206	1.1

주: 2024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보수는 2024년 1억 6,720만원으로 전년(1억 6,194만원) 대비 526만원(3.2%) 증가

◦ 2020~2024년 동안 상임감사 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4년 기준 2억 1,517만원,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24년 기준 1억 4,509만원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평균보수는 2024년 1억 6,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972만원이 증가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상임감사 평균보수는 1억 6,821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보수와 비슷한 수준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보수는 2024년 기준 3억 77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높음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보수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65,000	158,525	153,671	146,134	147,909	1,775	△2.7
시장형	176,133	172,809	163,040	144,257	151,755	7,498	△3.7
준시장형	156,252	148,050	146,800	147,511	145,088	△2,423	△1.8
준정부기관	163,728	167,963	171,411	174,602	182,124	7,522	2.7
기금관리형	199,210	204,835	208,961	211,641	215,165	3,524	1.9
위탁집행형	144,213	147,683	150,759	154,230	163,952	9,722	3.3
기타공공기관	159,480	163,444	159,691	162,422	168,208	5,786	1.3
은행형 공공기관	301,940	314,207	289,420	288,236	300,774	12,538	△0.1
기타	146,910	150,142	148,571	151,938	157,160	5,223	1.7
전체	162,380	163,574	161,868	161,944	167,204	5,260	0.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상임감사 보수는 상위 5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감사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투자공사로 2024년 3억 1,781만원임

[상임감사 평균 보수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한국투자공사	326,439	337,880	306,246	297,245	317,814	20,569	△0.7
중소기업은행	314,576	321,908	310,496	300,300	308,778	8,478	△0.5
한국수출입은행	295,621	302,510	278,881	282,204	303,373	21,169	0.6
한국산업은행	295,622	318,203	278,882	282,204	290,171	7,967	△0.5
기술보증기금	239,244	246,514	250,109	246,651	270,471	23,820	3.1
전체 평균	162,380	163,574	161,868	161,944	167,204	5,260	0.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상임감사 보수 하위 5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준시장형 공기업)를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전체 공공기관 중 상임감사 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으로 9,086만원임

[상임감사 평균 보수 하위 5개 공공기관 현황(2020~2024)]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87,914	86,762	86,834	88,999	90,862	1,863	0.8
대한석탄공사	114,609	122,194	95,441	96,777	100,488	3,711	△3.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94,885	94,708	98,586	101,246	102,814	1,568	2.0
제주대학교병원	105,027	105,882	100,255	101,904	104,838	2,934	0.0
한국철도공사	126,065	141,479	129,025	118,571	106,339	△12,232	△4.2
전체 평균	162,380	163,574	161,868	161,944	167,204	5,260	0.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공공기관(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음

◦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 · 서비스),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SOC · 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사회 · 경제적 이슈에 따라 조정

◦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됨

[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지배구조 및 리더십,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 · 활동 · 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1)]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2024)]

(단위: 개, %)

구분			기관명
공기업 (32)	SOC(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12)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서비스 (12)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55)	기금관리형 (10)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5)	SOC 안전 (1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진흥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기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복리증진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1) 기관평가의 대상이 되는 87개 기관(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 중 감사평가는 58개 기관 대상(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24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

❑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탁월(S) 없음, 우수(A) 15개(17.2%), 양호(B) 28개(32.2%), 보통(C) 31개(35.6%), 미흡(D) 9개(10.3%), 아주미흡(E) 4개(4.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0~2024)]

(단위: 개)

구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공기업	2020	36	-	6	16	10	3	1
	2021	36	1	8	9	13	4	1
	2022	36	-	5	13	12	5	1
	2023	32	-	6	10	11	4	1
	2024	32	-	5	11	9	6	1
준정부기관	2020	54	-	11	18	18	6	1
	2021	57	-	10	22	17	6	2
	2022	57	-	7	23	21	4	2
	2023	55	-	9	20	18	7	1
	2024	55	-	10	17	22	3	3
공기업·준정부기관	2020	90 (100.0)	-	17 (18.9)	34 (37.8)	28 (31.1)	9 (10.0)	2 (2.2)
	2021	93 (100.0)	1 (1.1)	18 (19.4)	31 (33.3)	31 (33.3)	10 (10.8)	3 (3.2)
	2022	93 (100.0)	-	12 (12.9)	36 (38.7)	33 (35.5)	9 (9.7)	3 (3.2)
	2023	87 (100.0)	-	15 (17.2)	30 (34.5)	29 (33.3)	11 (12.6)	2 (2.3)
	2024	87 (100.0)	-	15 (17.2)	28 (32.2)	31 (35.6)	9 (10.3)	4 (4.6)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32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은 5개, 양호(B) 등급은 11개, 보통(C) 등급은 9개, 미흡(D) 등급은 6개, 아주미흡(E) 등급은 1개 기관

[2024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기업]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 (32)	탁월(S)	-
	우수(A) (5)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양호(B) (11)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보통(C) (9)	강원랜드(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미흡(D) (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아주미흡(E) (1)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55개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은 10개, 양호(B) 등급은 17개, 보통(C) 등급은 22개, 미흡(D) 기관은 3개, 아주미흡(E) 등급은 3개 기관

[2024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단위: 개)

구분		기관명
준정부 기관 (55)	탁월(S)	-
	우수(A)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양호(B) (17)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보통(C) (22)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흡(D) (3)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아주미흡(E) (3)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인사상 조치와 예산상 조치 및 개선계획 제출, 성과급 지급이 있음

○ 인사상 조치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와 경고 조치가 있음

- 해임건의 :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2] 중 재임기간 요건[3]을 충족하는 기관장 1명(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7월 23일 기관장 해임조치함

2)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E 등급 + '24년말까지 6개월 이상 재임, 또는 DD등급 + '24년말까지 1년 이상 재임

- 경영실적 미흡으로 인한 경고조치 : 미흡(D) 등급 9개 기관 중 2024년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기관장 4명에 대해 경고조치

[경영실적 미흡에 따른 후속조치]

후속 조치사항	경영실적 미흡		후속조치 대상기관
	등급	경영실적 미흡 기관	
기관장 해임건의 (1)	아주미흡(E)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년 연속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 경고 (4)	미흡(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고조치 :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후속 조치사항	추가 조치 기관
기관장 경고조치 (10)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안전관련개선계획 제출 (12)	위 10개 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랜드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 등에 대한 성과급 삭감 등 추가조치가 있음

- 재무위험기관(14개)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전년 대비 손실폭 증가 기관(한국철도공사)의 임원(기관장·감사 · 상임이사) 성과급 25% 삭감
- 2024년 당기순손실 발생한 공기업(한국공항공사)의 임원(기관장·감사 · 상임이사) 성과급 25% 자율반납 권고

7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

가. 현 황

❑ 금융공공기관[1]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으로 17개 금융공공기관[2]에서 790.3조원의 융자(대출) 잔액 및 969.7조원의 보증 잔액, 107.2조원의 보험잔액, 그리고 106.5조원의 투자잔액 등 총 1,973.7조원의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을 보유

- ◦ 금융공공기관의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은 2020년 1,484.1조원, 2021년 1,663.0조원, 2022년 1,810.7조원, 2023년 1,902.4조원 및 2024년 1,973.7조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 2024년 기준으로 총 잔액의 49.1%인 969.7조원은 보증 잔액이며, 40.0%인 790.3조원은 융자(대출) 잔액으로, 정책금융의 대부분은 보증 및 융자(대출)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별도로 금융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며,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전체 사업비의 80% 이상) 하는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함.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임

2) 19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위탁자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므로 정책금융 공급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보 예금 금액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체 예금으로, 상기의 정책금융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융자(대출)	551.4	622.0	676.1	731.2	767.6	790.3	(40.0)	238.9	43.3
(전년대비 증감률)	-	(12.8)	(8.7)	(8.1)	(5.0)	(3.0)	-	-	-
보증	628.1	712.1	815.5	900.7	933.3	969.7	(49.1)	341.6	54.4
(전년대비 증감률)	-	(13.4)	(14.5)	(10.4)	(3.6)	(3.9)	-	-	-
보험	77.6	76.4	83.3	89.5	104.2	107.2	(5.4)	29.6	38.1
(전년대비 증감률)	-	(△1.5)	(9.0)	(7.4)	(16.4)	(2.9)	-	-	-
투자	61.3	73.6	88.1	89.3	97.3	106.5	(5.4)	45.2	73.7
(전년대비 증감률)	-	(20.1)	(19.7)	(1.4)	(9.0)	(9.5)	-	-	-
합계	1,318.4	1,484.1	1,663.0	1,810.7	1,902.4	1,973.7	(100.0)	655.3	49.7
(전년대비 증감률)	-	(12.6)	(12.1)	(8.9)	(5.1)	(3.7)	-	-	-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상기 각 연도별 잔액 합계액 산정 시, 금융공공기관 대출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한 일부 중복 금액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말 금융공공기관의 융자(대출) 잔액은 790.3조원이며, 2019년 대비 238.9조원(43.3%) 증가함

◦ 동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의 증가 금액이 94.3조원(45.8%)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융자 잔액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 말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융자(대출) 잔액 300.3조원은 전체 융자(대출)잔액 790.3조원의 38.0%의 비중을 차지

◦ 2024년 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융자(대출) 잔액이 175.5조원이며, 이는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바탕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임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융자(대출)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융자(대출)잔액 합계	551.4	622.0	676.1	731.2	767.6	790.3	100.0	238.9	43.3
중소기업은행	206.0	233.5	254.0	272.9	286.8	300.3	38.0	94.3	45.8
한국주택금융공사	122.2	140.4	151.7	156.0	179.7	175.5	22.2	53.3	43.6
한국산업은행	128.6	145.7	158.6	177.3	178.7	186.9	23.6	58.3	45.3
한국수출입은행	70.7	72.4	77.6	86.6	83.6	89.4	11.3	18.7	26.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6	19.4	21.9	24.0	24.5	24.3	3.1	7.7	46.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3	9.6	11.4	13.5	13.4	12.9	1.6	6.6	104.8
서민금융진흥원	0.8	0.8	0.7	0.7	0.8	0.9	0.1	0.1	12.5
주택도시보증공사	0.2	0.2	0.2	0.2	0.1	0.1	0.0	△0.1	△50.0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융자잔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사업등록업자에게 융자한 융자금으로, 1999년 전환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융자금은 상환받고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969.7조원이며, 이 중 64.4%인 595.5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잔액임

◦ 2019~2024년간 금융공공기관의 보증 잔액은 341.6조원(54.4%) 증가하였으며, 증가금액의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210.9조원, 54.8% 증가)에서 발생[3]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24년 보증 잔액이 142.9조원으로, 대부분 주택신용보증[4]과 주택연금보증[5]의 금융성 보증 금액임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연도말 보증잔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공급된 전세대출특약보증은 통계 목적을 위해 중복계상으로 보증잔액에서 제외함. 해당 전세대출특양보증의 연도별 잔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조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세대출특약보증 보증잔액	16.1	26.2	33.0	41.7	46.4	51.9	59.0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4) 주택신용보증은 주택수요자 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구입, 임차, 건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을 말함

5) 주택연금보증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95.2조원), 한국수출입은행(49.0조원), 기술보증기금(29.2조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22.8조원) 등에서 보증을 통해 정책금융을 제공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증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증잔액 합계	628.1	712.1	815.5	900.7	933.3	969.7	100.0	341.6	54.4
주택도시보증공사	384.6	426.8	494.9	549.9	566.4	595.5	61.4	210.9	54.8
한국주택금융공사	94.2	111.0	123.3	131.5	140.7	142.9	14.7	48.7	51.7
신용보증기금	63.4	78.6	91.3	96.2	95.7	95.2	9.8	31.8	50.2
한국수출입은행	32.3	28.0	30.1	39.4	43.1	49.0	5.1	16.7	51.7
기술보증기금	22.1	25.7	26.5	26.7	28.3	29.2	3.0	7.1	32.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1.4	21.2	22.9	24.9	23.8	22.8	2.4	11.4	100.0
한국산업은행	8.8	8.3	11.4	14.2	15.8	16.9	1.7	8.1	92.0
서민금융진흥원	4.3	4.8	5.3	7.0	7.7	7.5	0.8	3.2	74.4
중소기업은행	3.8	3.6	4.3	5.2	6.2	6.1	0.6	2.3	60.5
한국해양진흥공사	1.5	2.0	3.2	3.1	3.0	1.5	0.2	0.0	0.0
한국무역보험공사	1.7	2.1	2.3	2.4	2.4	2.7	0.3	1.0	58.8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	-	-	0.2	0.2	0.4	0.0	0.4	-

주: 1. 각 연도 말의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연도말 보증잔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공급된 전세대출 특약보증은 중복계상으로 보증잔액에서 제외하였음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잔액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잔액임
4.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잔액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공급했던 상품의 보증잔액은 제외하고 있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증임

❑ 보험 업무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보험 잔액은 107.2조원으로, 이의 대부분(94.0%)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생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잔액은 2019년 72.6조원에서 2024년 100.8조원으로 28.2조원(38.8%) 증가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보험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보험잔액 합계	77.6	76.4	83.3	89.5	104.2	107.2	100.0	29.6	38.1
한국무역보험공사	72.6	71.3	78.1	84.1	98.5	100.8	94.0	28.2	38.8
신용보증기금	5.0	5.1	5.2	5.4	5.7	6.4	6.0	1.4	28.0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은 매출채권보험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말 기준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잔액은 106.5조원임

○ 이의 대부분은 한국산업은행(73.1%)에서의 투자금액으로, 한국산업은행의 2024년도 말 투자잔액은 77.9조원임[6)]

6) 상기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투자잔액 16.9조원(2024년 말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금융공공기관의 연도별 투자 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금액(b)	(비중)	(b-a)	(b-a)/a
투자잔액 합계	61.3	73.6	88.1	89.3	97.3	106.5	100.0	45.2	73.7
한국산업은행	50.4	59.8	69.8	69.9	74.1	77.9	73.1	27.5	54.6
한국벤처투자	4.5	5.8	7.3	8.2	8.9	9.9	9.3	5.4	120.0
중소기업은행	2.7	3.2	3.7	4.9	5.5	6.8	6.4	4.1	151.9
한국해양진흥공사	2.7	3.6	5.7	4.6	7.0	9.3	8.7	6.6	244.4
한국수출입은행	0.3	0.5	0.6	0.6	0.6	0.9	0.8	0.6	200.0
신용보증기금	0.2	0.2	0.3	0.3	0.3	0.4	0.4	0.2	100.0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0.2	0.2	0.3	0.5	0.5	0.7	0.7	0.5	250.0
기술보증기금	0.2	0.2	0.2	0.2	0.3	0.4	0.4	0.2	1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1	0.1	0.2	0.1	0.1	0.2	0.2	0.1	100.0

주: 1.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작성
2.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잔액은 정책펀드와 해외지점 및 사무소 등 해외 실적을 포함한 금액임
3. 한국벤처투자의 투자잔액은 각 연도 말 기준 누적 정부 출자금액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보증 관련 금융공공기관은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7)]

○ 2024년 기준으로 총 잔액의 49.1%인 969.7조원은 보증 잔액이며, 40.0%인 790.3조원은 융자(대출) 잔액

○ 보증은 자산 보유 비중이 낮아 관리 등의 부담이 적고,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우발채무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만 보유하면 되므로, 공급 가능한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큼

- 해당 레버리지로 인해 금융 위기 등으로 손실 등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 규모 또한 클 수 있음

7)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2022.6., pp.65~66

8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2024년 말 기준으로 10개 부처 35개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됨

- ◦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 ◦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 ◦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공기업 (16)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5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1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준정부기관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기타 공공기관 (13)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1)]	1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단위: 개)

구분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5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주식회사	1
합계			35

주: 1)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부터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음
1. 정부가 출자 중인 비공공기관은 한국방송공사(정부지분율 100%), 한국교육방송공사(100%), 공항철도주식회사(47.4%), 서울신문사(30.5%), 대한송유관공사(9.8%) 등 5개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말 기준으로 정부출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41조 8,256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35조 776억원), 한국산업은행(26조 3,166억원), 한국수출입은행(12조 8,878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9,976억원) 순임

[정부출자액 상위 10개 공공기관]

(단위: 억원)

순위	공공기관명	출자액	순위	공공기관명	출자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418,256	6	한국석유공사	109,089
2	한국도로공사	350,776	7	한국수자원공사	104,202
3	한국산업은행	263,166	8	주택도시보증공사	69,621
4	한국수출입은행	128,878	9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5	한국철도공사	109,97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7

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2024년 말 기준 정부 출자금은 총 183조 5,731억원이며,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기관에 103조 169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33조 4,318억원 등이 출자되었음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41조 8,256억원), 한국도로공사(35조 776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9,976억원)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10조 9,089억원)가,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 부산항만공사(2조 8,790억원)가 정부출자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

-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이 26조 3,166억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2조 8,878억원의 정부출자를 받음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 5,175억원, 환경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가 10조 4,202억원의 정부출자를 받음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공공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국가보훈부(1)	1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100.0
금융위원회 (4)	2	한국산업은행	263,166	263,166	100.0
	3	중소기업은행	42,114	23,722	59.5
	4	한국주택금융공사	27,374	17,424	63.7
	5	한국자산관리공사	33,719	30,007	89.0
	소계		366,372	334,318	91.3
기획재정부 (3)	6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7	한국수출입은행	168,733	128,878	76.4
	8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0
	소계		169,799	129,944	76.5
방송통신위원회(1)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0
문화체육관광부(1)	10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농림축산식품부 (2)	11	한국농어촌공사	15,175	15,175	100.0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	683	100.0
	소계		15,858	15,858	100.0
해양수산부 (5)	13	부산항만공사	32,975	28,790	87.3
	14	인천항만공사	20,677	16,680	80.7
	15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11,053	71.2
	16	울산항만공사	4,405	3,846	87.3
	17	한국해양진흥공사	31,339	15,923	50.8
	소계		104,919	76,291	72.7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공공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산업통상자원부 (7)	18	한국석유공사	109,089	109,089	100.0
	19	한국광해광업공단	23,378	23,351	99.9
	20	한국전력공사	32,098	5,842	18.2
	21	한국가스공사	4,616	1,207	26.2
	22	대한석탄공사	1,511	1,511	100.0
	23	한국지역난방공사	579	200	34.5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550	100.0
	소계		171,820	141,750	82.5
환경부(1)	25	한국수자원공사	110,286	104,202	94.5
국토교통부 (10)	26	한국토지주택공사	494,122	418,256	84.6
	27	한국도로공사	441,740	350,776	79.4
	28	한국철도공사	109,976	109,976	100.0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37,294	100.0
	30	한국공항공사	23,578	22,541	95.6
	31	주택도시보증공사	84,151	69,621	89.2
	32	한국부동산원	90	44	49.4
	33	새만금개발공사	14,970	14,970	100.0
	3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986	3,100	62.2
	35	주식회사 에스알	6,090	3,590	58.9
	소계		1,216,997	1,030,169	84.6
전체 합계(35)			2,159,395	1,835,731	85.0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중소기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액면미달 발행 등으로 납입자본금 대비 정부출자액 비율과 정부지분율 간 차이가 있음. 위 표의 정부출자 지분율은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함
3.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지분율 계산 시 억원 단위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가 발생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은 전년 대비 9조 7,141억원 증가함

○ 2023년 말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출자액이 4.7조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액이 2.4조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액이 2.1조원 증가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현금 0.7조원, 현물(한국도로공사 주식) 4.0조원

- 한국산업은행 현금 0.39조원, 현물(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2.0조원
- 한국수출입은행 현금 0.1조원, 현물(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2.0조원

◦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1조 8,298억원 감소함
- (+) 정부 출자금액 1조 7,667억원
- (-) 국토교통부 보유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현물출자 (3조 5,965억원, 시가 4조원)

❑ 2024년 말 기준으로 3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 183조 5,731억원 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액은 126조 567억원으로 68.7%를 차지함

◦ 은행형 공공기관,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이 51조 1,146억원(27.8%)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 구성된 준정부기관에 대한 출자액이 6조 4,018억원(3.5%)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출자 규모]

(단위: 억원, %, %p)

유형	납입자본금(A)			정부출자금액(B)			비중(B/A)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공기업	1,378,513	1,481,663 (68.6)	103,150	1,212,703	1,260,567 (68.7)	47,864	88.0	85.1	△2.9
준정부기관	73,949	77,825 (3.6)	3,876	60,142	64,018 (3.5)	3,876	81.3	82.3	1.0
기타 공공기관	554,507	599,907 (27.8)	45,400	465,746	511,146 (27.8)	45,400	84.0	85.2	1.2
합계	2,006,968	2,159,395 (100.0)	152,427	1,738,590	1,835,731 (100.0)	97,141	86.6	85.0	△1.6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 ) 안은 전체 금액 대비 공공기관 유형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출자 공공기관 35개 중 19개 기관이 2024회계연도에 대한 정부배당을 실시함. 배당액은 2조 2,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2억원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배당액은 9조 5,414억원임

◦ 최근 5년간 배당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2조 8,842억원), 중소기업은행(2조 18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조 8,345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4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16개 기관 중 12개 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은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현황(35개 기관)]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5,845	7,441	2,625	943	1,491	18,345
중소기업은행	2,208	3,701	4,555	4,668	5,053	20,185
한국산업은행	2,096	8,331	1,647	8,781	7,587	28,442
한국주택금융공사	425	451	292	-	593	1,761
한국수출입은행	277	1,315	932	1,847	2,828	7,199
한국가스공사	-	659	-	-	351	1,010
한국공항공사	-	-	-	-	-	-
부산항만공사	238	183	162	176	265	1,024
한국자산관리공사	142	159	272	362	104	1,039
울산항만공사	77	119	127	185	163	671
인천항만공사	213	-	27	-	272	5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	15	28	30	-	98
한국조폐공사	-	-	21	33	39	9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4	22	26	18	72
한국부동산원	10	16	22	37	37	122
한국농어촌공사	9	130	112	35	54	340
한국전력공사	1,421	-	-	-	249	1,670
한국관광공사	-	-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619	451	-	1,070
한국석유공사	-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새만금개발공사	-	-	-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
한국도로공사	120	134	248	519	340	1,361
인천국제공항공사	-	-	-	2,248	2,210	4,458
주택도시보증공사	616	621	-	-	-	1,237
한국투자공사	580	1,176	641	944	1,138	4,479
88관광개발주식회사	0.2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39	32	-	-	155	226
대한석탄공사	-	-	-	-	-	-
주식회사 에스알	-	-	-	-	-	-
합계	14,343	24,487	12,352	21,285	22,947	95,414

주: 1.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납입은 익년도에 발생함
2.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3년에 신규 출자함
3.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고, 위 2019~2020년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정부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회계연도에 대한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39.72%로, 전년(39.87%)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투자공사의 배당성향이 90.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항만공사 58.0%, 한국조폐공사 53.0% 순임

[최근 5년간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배당성향]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	20.00	20.00	19.90	20.00
중소기업은행	29.52	30.73	31.19	32.54	34.98
한국산업은행	43.00	33.84	35.43	35.00	37.80
한국주택금융공사	33.46	32.90	35.00	-	40.00
한국수출입은행	39.80	34.93	35.00	35.00	37.80
한국가스공사	-	39.38	-	-	16.00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공항공사	-	-	-	-	-
부산항만공사	59.80	48.90	45.90	57.90	46.00
한국자산관리공사	39.97	41.57	39.77	37.43	37.51
울산항만공사	59.90	48.90	46.00	58.00	58.00
인천항만공사	30.00	-	34.80	-	35.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0.00	39.45	27.00	23.08	-
한국조폐공사	-	-	42.00	52.38	53.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00	40.00	40.00	46.32	40.00
한국부동산원	40.02	37.71	41.44	45.14	45.14
한국농어촌공사	10.30	37.60	50.37	13.81	25.36
한국전력공사	40.00	-	-	-	16.49
한국관광공사	-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15.79	15.89	-
한국석유공사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한국철도공사	-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새만금개발공사	-	-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	-	-
한국도로공사	44.47	50.06	48.73	49.42	43.60
인천국제공항공사	-	-	-	45.75	46.00
주택도시보증공사	24.99	20.03	-	-	-
한국투자공사	60.00	70.00	80.00	100.00	90.00
88관광개발주식회사	59.65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40.00	43.00	-	-	21.37
대한석탄공사	-	-	-	-	-
주식회사 에스알	-	-	-	-	-
평균 배당성향	39.73	39.35	39.32	41.72	39.72

주: 1.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 결산 회계연도이며, 실제 배당금 납입은 익년도에 발생
2.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3년에 신규 출자함
3.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고, 위 2019~2020년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정부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점 분석

1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 공공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관리 약화

가. 현 황

❑ 2023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1]으로 다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됨

◦ 구체적으로는 2023년에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정원 기준(300명)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준정부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이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

나. 주요 쟁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2] 및 경영평가[3]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약화되는 문제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제2호[4]에 따른 국회 제출 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정원) 50명 → 300명, (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 10억원 → 30억원

2) 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②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4)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5]에 따른 국회 보고 사항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2024년 공공기관 지정시 정원이 250명으로 정원 300명 기준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정부 정책사업(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으로 인해 총자산이 2018년 2.4조원에서 2024년 5.3조원으로 증가한 상황
- 대한석탄공사도 2025년 6월 석탄사업 종료에 따라 향후 석탄 생산 등에 따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 영업활동을 통한 이자비용 상환이 어려운바, 정부의 대지급 등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역시 자산규모와 부채비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적립금의 소진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정[7]됨에 따라 사전적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함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⑥ (생 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⑩ (생 략)

6) 특히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확장 등에 자금이 금융부채 중심으로 조달되고 있고, 정부의 보증 가능 규정 하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으로 원리금 상환위험이 존재하며 국가의 우발재무가 존재하는 기관

7) 4대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중장기적으로 2029년에는 적자로 전환되며,

[공공기관별 자산 및 부채비율, 임직원 현황]

(단위: 억원,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민금융진흥원	자산	29,063	31,706	36,469	43,071	51,984	52,953
	부채비율	859	682	419	412	614	380
	임직원 현황	161	189	222	239	250	258
대한석탄공사	자산	17,544	16,981	16,523	15,813	15,151	14,589
	부채비율	2,502	2,852	3,212	3,546	3,900	4,235
	임직원 현황	958	893	841	795	748	702
부산항만공사	자산	60,978	64,780	70,365	74,839	78,586	82,515
	부채비율	56	65	78	88	97	100
	임직원 현황	230	241	257	263	253	251
인천항만공사	자산	33,199	32,761	33,494	35,348	36,403	36,920
	부채비율	53	46	52	59	67	62
	임직원 현황	248	253	261	264	253	25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산	214,495	239,038	266,769	246,342	269,486	286,430
	임직원 현황	224	232	243	249	238	237

주: 임직원 현황은 일반정규직 정원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별 감사보고서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지정 시 정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대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대상과 바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43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Ⅳ」, 2023., 및 국회예산정책처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Nabo Focus 제100호, 2025. 참조)

1-2.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을 직접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1]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2]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연간 90~100억원)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규모는 연간 각각 100억원, 90억원 내외 수준임[3]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지급되는 재원(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각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도 제출받고 있음

❑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5)을 관리하며, 이를 재원으로 택시감차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2015.2. 설립

2) 2017.9.29. 국토교통부 설립 허가
2017.12.19.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 재원 확보
2018.7.5.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업무 시작

3) 매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은 재단 정관 제6조[4]에 의거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재원을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정관 제8조 및 제9조[5]에 의거하여 재단의 수지예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결산의 경우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을 관리하며,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6]을 수행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감세액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4)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관리기관(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지급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

---

4)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정관」
제6조(재원)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② 법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재원 중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정한다.

5)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정관」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 등의 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6) 의료지원(정밀건강검진), 생계지원(생계지원 및 치료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 학업지원(자녀학자금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4항]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0조[7]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기금관리기관으로서, 법령상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제출,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가짐

-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택시발전법 제15조제1항[8]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함

7)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시·도지사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8)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지정 여부 심사대상으로 삼아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에 따르면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런데 법령에 따르면,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받고 있는 경감세액의 지급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정부지원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지원액에는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제1호)”이 포함됨
-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액 경감분 역시 해당 기관들에 대한 정부지원액으로 해석 가능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정부지원액 산정 기준]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 · 입장료 · 사용료 · 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 따라서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모두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상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와 별개로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 요건인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 복리증진 · 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제1호)”은 공공기관 지정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공공기관 지정 예외 기준]

제4조(공공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 복리증진 · 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그런데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의 예외 사유(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사업수익 대부분(98.9%)은 부가세경감세액이고,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4년도 결산 기준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사업수익 87.8억원 중 부가세 경감세액을 통한 수익이 86.8억원으로 부가세 경감세액 수익이 재단 전체 수익의 98.9%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목	2023	2024
사업수익	**7,993**	**8,780**
부가세경감세액	7,635	8,684
이자수익	358	96
사업비용	**6,098**	**6,375**
사업수행비용	5,518	5,792
경감세액 징수	7.7	0.9
정보화운영	39	40
복지사업	5,472	5,750
일반관리비용	579	583
예비비	**-**	**290**
당기운영이익	**1,930**	**2,142**

자료: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순자산은 2023년 결산 기준 105.7억원이었고, 2024년 결산 기준으로는 127.1억원으로 나타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목	2023	2024
자산	12,419	14,486
부채	1,851	1,776
순자산	10,568	12,710

자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점에서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① 재단의 모든 수익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의존하고 있고, ② 구성원들이 기관 수익 조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으며, ③ 「택시발전법 시행령」에서 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 요건의 예외를 적용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왔음[9)]

❑ 따라서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어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이들 기관을 향후 공공기관 지정 심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이에 적합한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10)]에 따라 위 기관들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분까지만 유지되는바, 위 기관은 현재 한시적 운영이 예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은 향후 해당 경감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연장 운영되는 경우에 지정 실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9)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부지원액 비율이 99.93%로(2023년도 지정 심사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1-3.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및 개선점 분석

가. 현 황

❑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심사 결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수는 총 202개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이 32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2024년 공공기관 지정 당시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취지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한 것에 기인함
- ◦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24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국토교통부 소관 22개 순임

[2025년 공공기관 지정 관련 현황조사 대상 중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 현황]

(단위: 개)

소관부처	기관명	개수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주),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2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2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단위: 개)

소관부처	기관명	개수
교육부	APEC국제교육협력원,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헬스케넥트(주), 이지케어텍(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티피에스주식회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9
국가보훈부	㈜한빛씨에스	1
방위사업청	㈜에이디디 보안환경관리단, ㈜에이디디 시설관리단	2
국토교통부	제이디씨파트너스㈜, 엘엑스파트너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택산업연구원,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엘에이치사옥관리, 알이비파트너스㈜,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재단법인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은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 KDB비즈, KDB인베스트먼트, 신보운영관리(주), ㈜IBK시스템, IBK신용정보(주), IBK연금보험(주), IBK자산운용(주), IBK투자증권(주), ㈜IBK캐피탈, IBK벤처투자, ㈜IBK저축은행, ㈜IBK서비스, 에이치에프파트너스(주), 한국회계기준원, 예울FMC(주), 캠코선박운용(주), ㈜캠코시설관리, ㈜캠코씨에스, 서울보증보험, 한국예탁결제원	23
기획재정부	(사)국제금융센터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촌희망재단,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에이플 주식회사, 한국마사회 시설관리(주), 국립농업박물관, (사)낙농진흥회	7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원	6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아가페	3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1
보건복지부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노인의료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재생의료진흥재단	9
질병관리청	(사)대한결핵협회,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4
산림청	㈜포이파트너스,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4
산업통상	㈜하이원파트너스, ㈜키즈라라, ㈜코엔서비스, KOSPO서비스(주),	24

(단위: 개)

소관부처	기관명	개수
자원부	KPS파트너스(주), 이더블유피서비스(주), 중부발전서비스(주), 카페스(주), 코웨포서비스(주), 한전CSC, 한전FMS,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지역난방안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케이엔오씨서비스(주),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키콕스 파트너스, 케이씨엘엔지테크, 케이앤에프파트너스, 한전기술서비스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새만금개발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1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식생활안전관리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3
여성가족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양육비이행관리원	3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코웍스	2
원자력안전위원회	㈜킨스파트너스	1
인사혁신처	㈜상록골프앤리조트	1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재)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에스비씨인증원,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중진공파트너스(주), 기보메이트, 한유원파트너스(주)	10
통계청	(재)한국통계진흥원	1
통일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
해양수산부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사)한국수산회,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항만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원양산업협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검수검정협회,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울산항만관리(주),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2
환경부	한국물기술인증원,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전국재해구호협회	2
합계		20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그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지정 여부의 판단에 기획재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예를 들어,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산은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인베스트먼트, KDB비즈)와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벤처투자,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제1항제5호[1]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지정의 법정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실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자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관명	설립연도	공공기관 지분율	자체수입 비율	총수입액	자산규모	정원
산은캐피탈㈜	1972	99.92	100	628,171	9,537,324	258
KDB인프라자산운용㈜	2003	84.16	100	39,006	73,868	72
KDB인베스트먼트㈜	2019	100	100	35,036	131,257	16
KDB비즈㈜	2019	100	100	26,710	7,551	579
㈜IBK캐피탈	1986	100.0	100	669,330	11,036,496	276
IBK투자증권㈜	2008	87.8	100	1,881,781	7,493,826	658
IBK연금보험㈜	2010	100.0	100	1,752,802	11,352,550	186
IBK자산운용㈜	2004	100.0	100	23,485	86,463	61
IBK저축은행	2011	100.0	100	111,075	1,737,380	136
IBK벤처투자*	2023	100.0	100	-	98,560	1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단위: %, 백만원, 명)

기관명	설립연도	공공기관 지분율	자체수입 비율	총수입액	자산규모	정원
㈜IBK시스템	1991	55.6	100	208,070	71,143	655
IBK신용정보㈜	2000	100.0	100	31,799	40,012	122
㈜IBK서비스	2018	100.0	100	70,366	20,032	2,058

주: 1.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전년도 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
2. 총수입액은 3년 평균 총수입액을 의미함
*IBK벤처투자는 설립 3년 미만 기업으로 총수입액 미작성
자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 특히 이 중, KDB인프라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주)의 경우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고,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및 IBK시스템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에 지정 해제되었는바, 이들 기관 모두 해제 당시 공공기관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사유에서 해제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지정 실익이 어떠한 측면에서 적은 것인지는 자세히 공시되지 않음[2)]
- ○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대부분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상황으로,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근거를 밝히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지정 여부 및 유형 분류 결과에 대하여 적절성 또는 타당성의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요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관련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 지정 심사 시 각 기관에서는 ① 소규모 기관이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② 법인 설립 초기로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고, ③ 정책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경쟁시장에서 영업 중인 기관이라는 점, ④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규제 적용시 시장에서 영업력과 경쟁력 유지가 어려움 등이 주요한 지정 유보 요청 사유로 제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결산 심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는바,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향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요금 현황과 주요 이슈

2-1.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가. 현 황

❑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임

◦ 위 기관들은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의 공공요금과 관련됨

❑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선정[1]한 재무위험기관 14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비중이 높은 경우,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투자보수율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는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함

[재무위험기관 중 공공요금 관련 기관]

구분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발전 자회사(남동, 동서, 남부, 서부, 중부)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재무위험기관」14개 선정”, 2022.6.30. 바탕으로 재작성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재무위험기관」14개 선정”, 2022.6.30.

나. 주요 쟁점

❑ 5개의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 자산과 부채 규모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331개)의 각각 38.6%, 44.1%를 차지함

◦ 2024년 기준으로 공공요금 관련 기관의 자산 총액은 445조 41억원임

- 전체 공공기관 자산 1,151조 9,426억원의 38.6%에 해당함

◦ 2024년 기준 부채 총액은 326조 9,117억원으로, 5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 741조 4,764억원의 44.1%를 차지함

- 특히 5개 발전자회사 등을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연결)의 부채 규모는 205조 4,450억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27.7%를 차지함

◦ 2020년 대비 2024년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5.1%p 상승한 데 비해,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8.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4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연결)의 부채비율은 496.7%, 한국가스공사는 432.7%로, 500%에 근접한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4조 7,177억원으로, 2021년 이후 3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24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됨

◦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1년 5조 305억원에서 2022년 22조 6,959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후, 2023년에는 5조 4,37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됨

- 한국전력공사(연결)는 2021~2023년 3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기요금 인상 및 전기 판매량 증가로 전기 판매수익이 증가하였고, 저원가발전 확대·세제인하·고객부하차단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구입전력비 절감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3조 6,220억원 발생함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자산	전기	한국전력공사	2,031,421	2,111,237	2,348,050	2,397,150	2,468,078	70,928
	가스	한국가스공사	359,098	436,699	624,250	572,547	576,696	4,150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229,041	234,371	232,257	229,968	240,654	10,686
	철도	한국철도공사	252,765	251,556	290,437	290,664	293,352	2,688
	도로	한국도로공사	691,876	734,021	783,082	822,418	871,260	48,843
	합계		3,564,200	3,767,884	4,278,076	4,312,747	4,450,041	137,294
	비중		40.0	39.2	40.8	39.3	38.6	25.2
	공공기관 전체		8,902,212	9,619,179	10,480,442	10,974,571	11,519,426	544,855
부채	전기	한국전력공사	1,324,753	1,457,970	1,928,047	2,024,502	2,054,450	29,947
	가스	한국가스공사	281,746	345,506	520,142	474,286	468,433	△5,853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138,349	135,473	124,436	115,838	119,365	3,528
	철도	한국철도공사	180,089	186,608	200,405	204,654	211,844	7,190
	도로	한국도로공사	311,658	332,834	358,300	383,391	415,025	31,634
	합계		2,236,596	2,458,390	3,131,330	3,202,671	3,269,117	66,446
	비중		41.3	42.1	46.7	45.1	44.1	20.9
	공공기관 전체		5,418,325	5,843,683	6,709,573	7,096,438	7,414,764	318,327
당기 순이익	전기	한국전력공사	20,925	△52,156	△244,291	△47,161	36,220	83,381
	가스	한국가스공사	△1,607	9,645	14,970	△7,474	11,490	18,964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3,186	3,421	4,074	3,593	3,499	△95
	철도	한국철도공사	△13,427	△11,552	△2,350	△4,516	△4,999	△484
	도로	한국도로공사	275	336	637	1,188	968	△219
	합계		9,352	△50,305	△226,959	△54,370	47,177	101,548
	공공기관 전체		51,671	107,769	△140,305	△32,443	81,219	113,662
부채 비율	전기	한국전력공사	187.5	223.2	459.1	543.3	496.7	△46.6
	가스	한국가스공사	364.2	378.9	499.6	482.7	432.7	△50.0
	수도	한국수자원공사	152.5	137.0	115.4	101.5	98.4	△3.1
	철도	한국철도공사	247.8	287.3	222.6	237.9	259.9	22.0
	도로	한국도로공사	82.0	83.0	84.3	87.3	91.0	3.6
	부채비율		168.5	187.7	273.1	288.5	276.8	△11.7
	공공기관 전체		155.5	154.7	177.9	183.0	180.6	△2.3

주: 1. 각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개 발전자회사 등의 재무현황을 포함함

2. 전체 공공기관 합계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제 외되어 있고, 주식회사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2023회계연도부터 별도 합산함

3. 자산=부채+자본, 부채비율=부채/자본×1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에 전기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구입단가는 하락하면서, 그 차이가 2023년 7.9원/㎾h에서 2024년 26.5원/㎾h로 확대되어 수익성이 개선됨

-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 3조 1,667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금융부채(차입금과 사채)는 87조 8,631억원으로 총자산 중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는 63.0%로 나타남[2)]
-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는 120조 831억원으로 전년 대비 981억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도 619.3%로 전년 대비 24.9%p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부채비율이 600%를 초과하는 상황임[3)]

◦ 한국가스공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 손실 감소,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 정산금액 감소, 천연가스 용도별 원료비 손실 감소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 당기순이익은 7,934억원으로 2023년 대비 1조 6,746억원 증가함
-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591.9%로 전년 대비 56.4%p 감소하였으나 차입금의존도는 73.2%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함

◦ 한국철도공사는 일반여객사업에서의 영업손실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비율도 전년(237.9%) 대비 22.0%p 증가한 259.9%를 나타냄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재정안정성 관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6.11.)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영리법인기업의 2024년 부채비율은 101.9%, 차입금의존도는 28.3%이다.

3) 통상적으로 부채비율 200%, 차입금의존도 30% 이하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함

2-2. 공공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현황과 이슈

가. 현 황

❑ 각 공공기관은 제공 서비스별로 공공요금에 관한 취약계층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주요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가스요금(한국가스공사)

❑ 가스요금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할인규모는 전반적인 할인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동절기 기준 취사난방용 요금기준으로 월 1만 8,000원~14만 8,000원 수준임

[가스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제도 현황]

(단위: 원/월)

적용대상		할인내용(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기타 기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148,000	2,470~9,90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86,000	2,470~9,900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72,000	9,900
다자녀가구		18,000	2,470

주: 그 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음
자료: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복지할인 규모는 2024년 기준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4,53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105억원 등 총 4,641억원 규모임

- 가스요금 복지할인은 지원율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가스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적배려대상자	973	1,060	1,142	4,617	4,536
사회복지시설	36	38	36	222	105
계	1,009	1,098	1,178	4,839	4,641

자료: 한국가스공사

(2)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의 경우도 장애인,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복지할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주로 주택용 또는 심야전기를 중심으로 월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지원 중임

[전기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제도 현황]

구분		할인내용
적용대상	계약종별	
장애인	주택용	월 1.6만원 한도(하계 2만원 한도)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만원 한도(하계 2만원 한도)
	주택용(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한도(하계 1.2만원 한도)
	심야	20.0~31.4%

구분		할인내용
적용대상	계약종별	
차상위계층	주택용	월 0.8만원 한도(하계 1만원 한도)
	심야	18.0~29.7%
3자녀 이상	주택용	30%(월 1.6만원 한도)
5인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주택용·일반용	30%
	심야	20.0~31.4%
생명유지장치사용	주택용	30%

자료: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390만 호, 금액 기준 6,815억원 규모임

[전기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현황]

(단위: 천호,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년(6월기준)	
	호수	할인액	호수	할인액	호수	할인액	호수	할인액	호수	할인액
장애인	686	1,224	691	1,437	680	1,256	669	1,218	662	582
상이유공	7	14	7	16	7	13	6	12	6	6
독립유공	7	12	7	15	7	13	7	13	7	6
기초수급	1,174	1,604	1,268	2,067	1,381	2,115	1,489	2,224	1,533	1,178
차상위	221	201	202	239	198	200	185	185	177	87
사회복지시설	120	842	110	946	110	1,188	109	1,240	109	666
3자녀	583	849	586	915	565	847	539	810	526	394
출산가구	561	741	603	804	586	794	577	784	581	396
대가족	269	321	281	328	289	297	294	276	296	131
생명유지장치	16	27	20	33	23	47	24	53	25	25
합계	3,644	5,835	3,775	6,800	3,846	6,770	3,899	6,815	3,922	3,471

자료: 한국전력공사

(3) 유료도로통행요금(한국도로공사)

❑ 유료도로통행요금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통행요금 감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서비스 제공 특성상 전기·가스요금과 달리 할인율을 제공하는 정률할인제로 운영되고 있음

[유료도로통행요금 복지할인제도 현황]

적용대상		할인율
독립유공자		100%(요금면제)
국가유공자	1~5급	100%(요금면제)
	6~7급	50%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100%(요금면제)
	6~14급	50%
장애인		50%
고엽제후유증 환자·의증환자		50%

자료: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도로공사의 유료도로통행요금 복지할인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2,421만 대, 금액 기준 332억원 규모임

[유료도로통행요금 복지할인 지원현황]

(단위: 만대,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1~7월)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2,513	343	2,445	342	2,421	332	1,365	183
면제	독립유공자	57	12	55	13	52	12	29	7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 운동부상자(1~5급)								

구분		2022		2023		2024		2025 (1~7월)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할인	국가유공자(6~7급)	251	34	241	33	231	31	128	17
	5·18민주화 운동부상자(6~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	2,205	297	2,149	296	2,138	289	1,208	159

자료: 한국도로공사

(4) 철도요금(한국철도공사)

❑ 철도요금의 경우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가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할인율은 할인종별·열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인 할인율은 30~50% 수준임

[철도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제도 현황]

적용대상	열차 종별		
	KTX	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누리로
장애인[1)]	30~50%		50%
국가유공자[1)]	6회 무임, 6회 초과시 5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30%		
경로할인[2)]	30%		30% (통근 50%)
다자녀가구	30~50%		-

주: 1) 중증장애인 또는 상이 1~2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2) 토·일·공휴일 제외
1. 그 외에도 어린이, 유아, 임산부, 군인,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할인제도를 운영 중임

자료: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요금 복지할인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1,335만명, 금액 기준 897억원 규모임

[철도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장애인	2,447	18,537	2,876	22,907	3,069	25,188	3,128	25,758	1,521	12,760
국가유공자	229	4,273	269	5,264	295	5,911	314	6,126	155	3,125
기초생활 수급자	113	821	170	1,316	209	1,591	232	1,768	112	836
노인	5,506	27,903	7,251	38,509	8,496	46,894	9,464	53,140	4,998	28,897
다자녀	42	497	98	1,173	113	1,360	209	2,871	135	1,931
합계	8,337	52,031	10,664	69,169	12,182	80,944	13,347	89,663	6,921	47,549

주: 어린이, 유아, 임산부, 군인, 청소년, 청년 등을 합친 전체 할인규모는 2024년 기준 1,849만명, 금액 기준 총 1,509억원 규모임
자료: 한국철도공사

❑ 한편, 각 공공기관의 전체 매출액별 취약계층 복지할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6~3.06%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주요 기관별 취약계층 복지할인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가스요금 (한국가스공사)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유료도로통행요금 (한국도로공사)	철도요금* (한국철도공사)
매출액(A)	435,902	580,009	43,681	29,340
취약계층 복지할인액(B)	4,839	5,835	332	897
비율(B/A)	1.11	1.01	0.76	3.06

주: 2024년 말 결산 기준. 단, 가스요금은 2023년 말, 전기요금은 2021년 말 결산 기준
*철도요금은 여객운송서비스 부분에 대한 자료임(전철 및 화물운송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각 공공기관은 제공 서비스별로 공공요금에 관한 취약계층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할인비용은 궁극적으로 일반 사용자의 요금부담으로 충당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각 공공요금별 복지할인 회계처리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최종 비용부담은 요금인상 또는 징수기간 증가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전가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 따라서 복지할인제도가 일반 사용자의 요금인상에 미치는 정확한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주요 기관별 공공요금 할인방식 비교]

구분	가스 (한국가스공사)	전기 (한국전력공사)	도로 (한국도로공사)	철도 (한국철도공사)
비용요인 반영 여부	○	×	×	×
국비지원 여부	×	×	×	△ (PSO에 따른 일부 국비지원)
일반 이용자에 대한 요금반영 여부	○	△[1)]	○	△[2)]

주: 1)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이후 원가 등 관련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일반이용자 요금 반영 정도는 파악하기 어려움
2) 철도요금의 경우, 2011년도 운임인상 이후 현재까지 운임동결에 따라 일반이용자 요금에 반영되지는 않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가스요금(한국가스공사)

❑ 가스요금은 기본적으로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가스요금의 에너지복지 할인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스요금에 최종 반영됨

-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원

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이 때 가스요금은 천연가스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조(요금수준) ①**가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천연가스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천연가스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천연가스 공급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천연가스 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인수기지 및 공급설비 건설을 위하여 총괄원가외에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다.

○ 그런데 가스요금의 경우, 복지할인비용을 공급비용 및 가스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0조(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하는 금액**으로, 도매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기년도 도매공급비용에 가감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총괄원가(적정원가에 한국가스공사가 받는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와 별도로 복지할인비용을 가산하여 공급비용 및 가스요금에 반영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총괄원가는 2024년 결산 원가정보공개자료 기준 51조 8,851억원이며, 그 중 적정원가는 50조 5,047억원, 적정투자보수는 1조 3,804억원임

◦ 다만, 공급비용은 위 총괄원가에 에너지복지 할인비용 등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비용의 크기 및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

[한국가스공사 총괄원가 세부내역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괄원가(1+2)	294,491	626,091	602,308	518,851	461,078
1. 적정원가(①+②+③-④)	285,436	611,819	588,696	505,047	447,922
① 영업비용	282,935	609,168	585,252	501,935	443,996
② 영업외비용	200	175	165	221	73
③ 법인세비용	3,134	4,150	5,126	4,924	4,615
④ 영업외수익	833	1,674	1,847	2,033	762
2. 적정투자보수	9,055	14,272	13,612	13,804	13,156

주: *2025년은 예산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역시 가스요금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로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나,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취약계층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괄원가 외 별도의 공급비용 개념 등을 통한 비용요인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이 때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바 가스공급의 경우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제11조(요금수준) ①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다만,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취약계층 할인 등 할인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전기요금의 경우, 가스요금과 달리 해당 할인비용을 별도로 비용요인에 반영하지는 않음

❑ 반면, 전기요금의 복지할인액은 전기요금에서 차감징수되므로 전체 판매수익의 감소요인이 됨.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함

◦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요금은 전년도 전체 수입액과 전체 총괄원가를 비교하여, 수입액 부족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액을 최종 확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급액은 수입액의 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므로 차년도 전기요금 결정시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됨

❑ 한편,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이후로는 전기요금 생산에 따르는 총괄원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전기요금 복지할인액의 전기요금 반영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운바, 향후 보완이 필요함

◦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필요한 총괄원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산정보고서 검증을 통해 원가정보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2022년도 이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가정보를 확정하지 않아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

고 있다는 설명임

○ 총괄원가 등 원가정보는 요금산정의 기초이며, 여기에 전년도 총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의 인상폭의 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원가정보 미확정에 따른 비공개는 전기요금의 적정성 분석의 제약요인이 되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전력공사 총괄원가 세부내역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괄원가(1+2)	612,193	609,427	555,358	671,873	1,048,848
1. 적정원가(①+②+③-④+⑤)	596,445	594,690	535,413	652,752	1,028,402
① 영업비용	604,138	602,038	541,267	659,761	1,024,028
② 영업외비용	41	97	192	105	60
③ 법인세비용	5,831	5,447	7,422	7,110	7,613
④ 영업외수익	13,565	12,892	13,468	14,223	15,693
⑤ 원가연계형 요금제 정산	0	0	0	0	12,395
2. 적정투자보수	15,749	14,737	19,945	19,121	20,446

주: *2022년은 예산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공사 총수입 현황]

(단위: 억원, GWh, 원/kWh)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수입	575,880	567,508	562,532	580,009	672,968
1. 판매량	526,149	520,499	509,270	533,431	547,933
2. 적용단가	109.45	109.03	110.46	108.7	122.8

주: *2022년은 예산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유료도로통행요금(한국도로공사)

❑ 유료도로통행요금 역시 기본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통행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괄원가 외 별도의 공급비용 개념 등을 통한 비용요인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유료도로통행요금의 복지할인액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수입 단계에서 징수되지 않으므로 전체 통행요금 수입의 감소요인이 됨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①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건설유지비 총액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은 대상노선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의 총괄원가는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과 기타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영업외수익, 그리고 적정투자보수비 등을 합산하여 2024년 결산 기준 5조 4,827억원 수준임

[한국도로공사 총괄원가 세부내역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괄원가(1+2)	47,411	51,412	55,038	54,827	55,109
1. 적정원가(①+②+③-④)	37,468	36,843	38,688	38,946	38,711
① 영업비용	36,009	34,495	36,297	37,332	35,953
② 영업외비용	1,358	1,792	2,034	1,223	1,912
③ 법인세비용	1,664	1,549	1,742	2,007	2,030
④ 영업외수익	1,563	993	1,385	1,616	1,184
2. 적정투자보수	9,943	14,569	16,350	15,881	16,398

주: *2025년은 예산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현행 한국도로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체계에서 할인제도 운영에 따른 전체 통행요금 감소는 통행료 수납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일반사용자의 통행요금 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됨

◦ 유료도로관리권이란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유료도로법」 제10조)

- 유료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고 있음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

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따라서 유료도로통행료는 전체 통행요금의 합이 건설유지비총액에 이르는 기간까지 징수되므로, 할인제도 운영에 따른 전체 통행요금 감소는 유료도로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됨

- 특히 법 제18조[1]에 따라 유료도로는 전체 노선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행

1)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규정하여 전체 노선의 건설유지비 총액 회수 시까지 전체 노선의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할인 제도 운영에 따른 전체 통행요금 감소는 전체 노선의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요인이 됨

(4) 철도요금(한국철도공사)

❑ 철도요금 역시 기본적으로 철도운송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철도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괄원가 외 별도의 공급비용 개념 등을 통한 비용요인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철도요금의 복지할인액은 별도로 국비지원 등이 있지 않는한 전체 철도요금 운송수입의 감소요인이 됨

[철도운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조(운임산정 기본원칙) ① **철도운임·요금**(이하 "철도운임"이라 한다)은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총괄원가는 철도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철도운송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한국철도공사의 총괄원가는 영업비용과 기타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영업외수익, 그리고 적정투자보수비 등을 합산하여 2024년 기준 3조 921억원 수준임(단, 전철 및 화물운송부분 제외)

[한국철도공사 총괄원가 세부내역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
총괄원가(1+2)	25,063	26,435	27,812	30,921	35,061
1. 적정원가(①+②+③-④-⑤)	22,194	23,838	25,189	28,404	32,242
① 영업비용	22,727	24,445	25,966	28,744	32,449
② 영업외비용	386	203	186	209	0
③ 법인세비용	916	829	788	756	847
④ 영업외수익	392	363	69	155	0
⑤ PSO수익[2)]	1,443	1,276	1,682	1,150	1,054
2. 적정투자보수	2,869	2,597	2,623	2,517	2,819

주: 1) 2025년은 예산 기준
2) PSO수익은 전체 PSO 서비스비용 보전액(2024년 기준 3,612억원) 중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5조에 따라 법령의 규제를 받는 규제서비스에 대한 보전액에 대해서만 총괄원가에 포함함

자료: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이러한 복지할인액 중 일부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이하 “PSO”)로 분류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일부 서비스비용을 지원받음. 따라서 PSO 국비 지원수입 등을 제외한 복지할인액 나머지만이 수입결손이 되어, 궁극적으로 철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특정 철도서비스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PSO의 적용을 받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해당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PSO 적용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예컨대 특정 서비스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운영비용을 보전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024년 기준 한국철도공사가 보전받은 PSO 서비스비용 보전액은 3,612억 원 규모임. 다만, 이들 PSO 서비스비용 보전액은 모든 복지할인액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일부만 지원됨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PSO 서비스비용 보전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PSO 서비스비용 보전액	384,474	397,896	361,240

자료: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복지할인제도 중 정부가 보전하는 부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부에 불과함

- 현재는 KTX 복지할인 중 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에 대해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경로할인에 대한 부분만 PSO에 따른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가의 비용 보전을 받고 있음

[철도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제도 중 PSO 지원범위 현황]

적용대상	열차 종별		
	KTX	새마을/무궁화/통근	기타(전철 제외)
장애인	○	○	×
국가유공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경로할인	×	○	×
다자녀가구	×	×	×

자료: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PSO 보전액에 해당되지 않는 복지할인액 비용은 향후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수입결손으로 이어져 일반사용자 전체에 대한 요금인상 요인이 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할인제도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 사용자의 요금 인상에 충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정확한 인상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철도의 경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운임이 동결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정확한 요금인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2-3. 공공요금 원가검증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무부처의 공공요금 정산서 검토 필요

가. 현 황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및 각 공공요금(도로통행료, 천연가스 도매요금, 철도이용료, 전기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원가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공익사업자가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관부처장관은 공공요금 산정 시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철도운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천연가스 도매요금, 천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돗물요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원가검증의 주체임

이은경 과장 (eunkylee@assembly.go.kr, 6788-3782)

[공공기관 공공요금 검증 관련 규정]

구분	요금 산정 주요 내용	
공공요금 산정기준	Ⅶ. 요금검증	1. 공익사업자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소관부처장관은 공공요금 산정시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한다. 4. 소관부처장관은 3항의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신정기준	제26조(요금산정보고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요금을 산정할 경우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철도운임 산정기준	제26조(요금검증 및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요금 산정 시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6조(요금의 검증)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회계자료와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찬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제24조(원가검증 및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요금 산정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수돗물요금 산정지침	제27조(원가의 검증)	제27조(원가의 검증) ①환경부장관은 수돗물요금 산정시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각 공공기관은 요금정산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검토를 마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함

- ◦ 한국철도공사(철도요금), 한국도로공사(도로통행료),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 도매요금), 한국수자원공사(수돗물요금)는 각각 3~4월 중에 공공요금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에 회계법인 검증을 완료한 후,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함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외부감사인 검증을 마친 전기요금정산보고서에 대해 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원가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3~4회에 걸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타 공공요금 원가검증과 차이가 있음

[공공기관 공공요금 산정, 검토, 원가정보공개 절차]

구분	절차	시기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요금산정보고서 작성	3~4월
	회계법인 검증	5월
	주무부처 제출 및 검토	6월 초
	기획재정부 제출 및 공사 홈페이지 공개	6월 말
한국전력공사	결산서 확정	3월 말
	구분회계 작성	4월 말
	요금정산보고서 작성	5월 말
	외부감사인 검증	6월 중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제출	6월 말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은 공공요금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 후, 해당 보고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함

◦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각 공공요금별 산정기준에서는 주무부처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요금정산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실무적으로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들은 요금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과 요금정산보고서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검토를 마친 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있음

[공공기관별 공공요금산정보고서 외부 검토기관 및 외부감사인 현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 rowspan="2">한국철도공사</td><td>철도요금산정 보고서 검토</td><td colspan="2">DJ회계법인</td><td colspan="2">DY회계법인</td><td>SJ회계법인</td></tr>
<tr><td>회계감사</td><td colspan="5">SD회계법인</td></tr>
<tr><td rowspan="2">한국도로공사</td><td>도로요금산정 보고서 검토</td><td colspan="5">HD회계법인</td></tr>
<tr><td>회계감사</td><td colspan="3">HY회계법인</td><td colspan="2">WO회계법인</td></tr>
<tr><td rowspan="2">한국수자원공사</td><td>수돗물요금산정 보고서 검토</td><td colspan="2">JI회계법인</td><td colspan="2">SD회계법인</td><td>SH회계법인</td></tr>
<tr><td>회계감사</td><td colspan="3">SI회계법인</td><td colspan="2">HY회계법인</td></tr>
<tr><td rowspan="2">한국가스공사</td><td>천연가스도매요금 산정보고서 검토</td><td>DA회계법인</td><td colspan="4">HD회계법인</td></tr>
<tr><td>회계감사</td><td colspan="3">HY회계법인</td><td colspan="2">AJ회계법인</td></tr>
<tr><td rowspan="2">한국전력공사</td><td>전기요금 산정보고서 검토</td><td colspan="4">HY회계법인</td><td>SJ회계법인</td></tr>
<tr><td>회계감사</td><td colspan="4">HY회계법인</td><td>SJ회계법인</td></tr>
</table>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원가검증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등 원가검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이 직접 원가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이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할 경우, 검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검증의 중립성·공정성·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형식적인 검증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 더욱이 원가 검증결과가 기관의 요금인상 추진 목적과 충돌할 경우, 검증 결과가 왜곡 혹은 누락될 수 있으며, 국민 입장에서는 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길 소지도 있음

◦ 실제로 회계법인의 원가검증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총괄원가가 과대계상된 문제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철도요금 등에서 발생함

- 2023년 감사원 감사[1]결과에 따르면, 2015~2022년 동안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 과다산정[2], 한국가스공사는 총괄원가 283억원을 과다산정[3]하는 문제가 발생함
- 2019년 이전, 한국철도공사는 출자회사인 SR에 임대 중인 고속철도 차량 관련 자산과 비용, 수익을 각각 요금기저와 적정원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총괄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문제가 발생함[4]

---

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2023.10.)

2)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한전아트센터 운영비용과 유휴자산 감가상각비를 적정원가에 포함하고,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항목인 기술료수익 및 전기요금 연체료를 적정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휴자산을 요금기저에 포함

3)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요금과 관련하여 천연가스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등을 요금기저에 제외하여야 하는데, 도입계약이 해지된 YLNG 관련 해외지분투자금액을 요금기저에 포함

4)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 3권

3 정부 출자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세 부담 및 자본금 등기 현황 분석

❑ 정부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지원방식으로 출연, 출자, 보조가 있음

◦ 출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투자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임

◦ 출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은 출자의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음
- 정부로부터 받은 출자금은 투자유가증권 등으로 국가의 자산을 형성하며 향후 배당 및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부출자수입의 원천이 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개 부처 35개 공공기관, 그리고 5개의 비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음

◦ 35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17개, 준정부기관이 6개, 기타공공기관이 12개임

◦ 2024년 말 기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40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누적액 기준 총 183조 9,944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짐

-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10개 기관에 103조 169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33조 4,318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기관에 14조 1,750억원, 기획재정부 소관 3개 기관에 12조 9,944억원이 출자되었고, 공공기관이 아닌 5개 기관들에 대해서도 4,193억원이 출자되었음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기관 현황]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국토교통부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	494,122	418,256	84.6
	2	한국도로공사	441,740	350,776	79.4
	3	한국철도공사	109,976	109,976	100.0
	4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37,294	100.0
	5	한국공항공사	23,578	22,541	95.6
	6	주택도시보증공사	84,151	69,621	89.2
	7	한국부동산원	90	44	49.4
	8	새만금개발공사	14,970	14,970	100.0
	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986	3,100	62.2
	10	주식회사 에스알	6,090	3,590	58.9
	소계		1,216,997	1,030,169	84.6
금융위원회 (4)	11	한국산업은행	263,166	263,166	100
	12	중소기업은행	42,114	23,722	59.5
	13	한국주택금융공사	27,374	17,424	63.7
	14	한국자산관리공사	33,719	30,007	89
	소계		366,372	334,318	91.3
산업통상자원부 (7)	15	한국석유공사	109,089	109,089	100
	16	한국광해광업공단	23,378	23,351	99.9
	17	한국전력공사	32,098	5,842	18.2
	18	한국가스공사	4,616	1,207	26.2
	19	대한석탄공사	1,511	1,511	100
	20	한국지역난방공사	579	200	34.5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550	100
	소계		171,820	141,750	82.5
기획재정부 (3)	22	한국조폐공사	66	66	100
	23	한국수출입은행	168,733	128,878	76.4
	24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
	소계		169,799	129,944	76.5
환경부(1)	25	한국수자원공사	110,286	104,202	94.5
해양수산부 (5)	26	부산항만공사	32,975	28,790	87.3
	27	인천항만공사	20,677	16,680	80.7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28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11,053	71.2
	29	울산항만공사	4,405	3,846	87.3
	30	한국해양진흥공사	31,339	15,923	50.8
	소계		104,919	76,291	72.7
농림축산식품부 (2)	31	한국농어촌공사	15,175	15,175	100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	683	100
	소계		15,858	15,858	100
방송통신위원회(1)	3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
문화체육관광부(1)	34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국가보훈부(1)	35	88관광개발(주)	20	20	100
비공공기관 (5)	36	한국방송공사	2,062	2,062	100
	37	한국교육방송공사	889	889	100
	38	서울신문사	416	127	30.5
	39	대한송유관공사	1,981	193	9.8
	40	공항철도(주)	1,945	922	47.4
	소계		7,293	4,193	57.5
전체 합계(40)			2,166,688	1,839,944	84.9

주: 1. 2024년 12월 31일 기준
2. 중소기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액면미달 발행 등으로 납입자본금 대비 정부출자액 비율과 정부지분율 간 차이가 있음. 위 표의 정부출자 지분율은 주식 수 기준으로 계산함
3.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지분율 계산시 억원 단위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 차이 발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각 기관 감사보고서

❑ 공공기관 중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기관은 총 18개 기관이고 동 기간 내 출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현금출자 약 65조 4,920억원, 현물출자 약 20조 3,365억원으로 총 85조 8,285억원 수준임

[2015~2024년 공공기관 출자현황]

(단위: 개, 백만원)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현금출자(A)	현물출자(B)	합계 (A+B)
국토교통부 (8)	새만금개발공사	400,000	1,097,000	1,497,000
	인천국제공항공사	-	111,556	111,556
	주식회사 에스알	529,000	-	529,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43,900	4,000,000	5,543,900
	한국도로공사	16,301,528	-	16,301,528
	한국철도공사	1,213,409	180,424	1,393,833
	한국토지주택공사	23,629,695	-	23,629,69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68,000	130,613	498,613
산업통상자원부 (3)	대한석탄공사	321,168	-	321,168
	한국광해광업공단	2,337,755	-	2,337,755
	한국석유공사	816,981	-	816,981
금융위원회 (4)	중소기업은행	1,622,913	-	1,622,913
	한국산업은행	5,886,160	5,250,000	11,136,160
	한국자산관리공사	1,361,900	1,150,000	2,511,900
	한국주택금융공사	1,155,800	150,000	1,305,800
기획재정부(1)	한국수출입은행	2,208,291	6,916,908	9,125,199
환경부(1)	한국수자원공사	4,011,645	-	4,011,645
해양수산부(1)	한국해양진흥공사	1,783,875	1,350,000	3,133,875
합계(18)		65,492,020	20,336,501	85,828,521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가. 현 황

❑ 공공기관들이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1] 및 지방교육세[2] 납부 의무가 발생함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출자를 받은 총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약 3,374억원을 납부하였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지방세는 출자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이 발생했을 시 이를 등기할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3]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바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자본금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기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2015~2024년 공공기관들의 출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내역]

(단위: 백만원, 개)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총합
국토교통부(8)	한국토지주택공사	84,365	16,873	101,238
	한국도로공사	47,555	9,510	57,065
	한국철도공사	-	-	-
	주택도시보증공사	18,800	3,760	22,560
	인천국제공항공사	446	89	535
	새만금개발공사	5,988	1,198	7,186
	주식회사 에스알	2,116	423	2,53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403	881	5,284
금융위원회(4)	한국산업은행	44,545	8,909	53,454
	한국자산관리공사	10,048	2,009	12,057
	중소기업은행	3,817	759	4,576
	한국주택금융공사	5,223	1,045	6,268
산업통상자원부(3)	한국석유공사	-	-	-
	한국광해광업공단	8,676	1,735	10,411
	대한석탄공사	954	191	1,145
기획재정부(1)	한국수출입은행	25,796	5,159	30,955
환경부(1)	한국수자원공사	17,266	3,468	20,734
해양수산부(1)	한국해양진흥공사	1,196	239	1,435
총합 (18)		281,194	56,248	337,442

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음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보통세이고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임

○ 도 지역에서는 도세, 특·광역시 자치구 지역에서는 자치구세로 할당되며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광역시세로 할당됨[4)]

4)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지방교육세는 징수한 시·도,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광역시, 또는 징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귀속됨[5)]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이를 자본금액으로 등기하면 지방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자방식의 정부지원예산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정부출자의 기본적인 취지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의 사업은 공적인 목적과 연관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수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정비 촉진 및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음

---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나. 등록면허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등록면허세

5)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목적세
나. 지방교육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지방교육세

[2015~2024년간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공공기관들에 대한 출자의 목적]

출자 기관	출자의 목적
대한석탄공사	석탄광산 개발 촉진 및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운영, 원활한 항공 운송 이바지 등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 교통 편의 증진 및 국토 균형 발전 목적을 위한 철도 수요의 원활한 처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피해 적정관리 및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도모
한국도로공사	도로 정비 촉진 및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
한국산업은행	산업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한국석유공사	석유자원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등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 공급 원활화 및 수질 개선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등 업무 수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수행
한국철도공사	수송차량 구입,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 추진 등을 통한 철도 산업 발전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항만업 지원 목적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PIS 1·2단계 펀드 출자, 녹색펀드 출자 및 설립 등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 지원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검토해봤을 때 단순히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게 되어 자본금을 변경 등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수수료적인 성격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 등록세는 공부상의 등기나 등록 행위에 대한 과세이고 법률적으로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공부상의 등기자 또는 등록자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음
-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는데, 등록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수료적인 성격이 강한 세금이라는 견해가 있음[6)]

○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

- 2024년 12월 기준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35개 공공기관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9곳, 부산광역시에 5곳, 전라남도에 4곳 등 다양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음
- 최근 10년 내로 출자가 이루어진 기관들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액과 해당 세액의 귀속지를 검토해보면 아래 표와 같음

[2015~2024년간 출자받은 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액 및 지방교육세액과 귀속 지자체]

(단위: 백만원)

기관명	공공기관 소재지	납부세액		세액 귀속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등록면허세	84,365	경기도, 경상남도
		지방교육세	16,873	경기도, 경상남도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등록면허세	47,555	경상북도
		지방교육세	9,510	경상북도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록면허세	44,5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교육세	8,909	서울특별시

6) 안창남, 「지방세 확충을 위한 등록면허세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p.7

(단위: 백만원)

기관명	공공기관 소재지	납부세액		세액 귀속 지자체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록면허세	25,7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교육세	5,159	서울특별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등록면허세	18,800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교육세	3,760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록면허세	17,26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교육세	3,468	대전광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등록면허세	10,048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교육세	2,009	부산광역시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등록면허세	8,676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육세	1,735	강원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록면허세	5,988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교육세	1,198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등록면허세	5,22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교육세	1,045	부산광역시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록면허세	4,4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교육세	88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등록면허세	3,817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교육세	759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록면허세	2,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교육세	423	서울특별시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록면허세	1,1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교육세	239	부산광역시
대한석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등록면허세	954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육세	191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등록면허세	446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교육세	89	인천광역시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해당 내역을 토대로 정리하였을 때 최근 10년 기준 경상남도에 952억 3,800만원, 서울특별시에 968억 800만원, 경상북도에 570억 6,500만원이 출자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귀속됨

[2015~2024년간 출자받은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을 수취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자치단체명	세액	합계
경상남도	경상남도	95,238	95,23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4,744	96,808
	서울특별시	16,131	
	서울특별시 중구	3,817	
	서울특별시 강남구	2,116	
경상북도	경상북도	57,065	57,06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34,071	42,320
	부산광역시	7,0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19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17,266	20,734
	대전광역시	3,468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1,556	11,55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7,186	7,186
경기도	경기도	6,000	6,00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446	535
	인천광역시	89	
합계		337,442	337,442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공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그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지방 이전을 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 사례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7](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법인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 해당 조항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 하나[8]
-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연장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 면제 시기 변화 내역]

시행 시기	등록면허세 면제 관련 법령 내역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201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2017.1.1.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4477호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9232호, 2023.3.14. 제7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45063 판결.

◦ 정부출자 공공기관 35개 중 혁신도시법상 지방 이전이 이루어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가 이루어졌던 공공기관은 총 13개 기관[9)]

- 현재 혁신도시법상 지방 이전을 한 13개 공공기관들은 모두 2023년 이전에 이전을 한 기관들이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음

❑ 과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발의[10)]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

◦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11)]에서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를 출자가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등 공공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재원으로 출자하면서 다시 세금으로 징수하는 실익이 낮다고 검토함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9) 해당 13개 기관의 명단과 이전 지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공기관 소재지	이전 공공기관명	위치	이전 시점
강원특별자치도 (3)	대한석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14.11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15.01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15.09
전라남도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2014.1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2014.10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2014.12
부산광역시 (3)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2014.12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2014.12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2014.12
경상남도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2015.04
경상북도 (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2014.11
대구광역시 (1)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2014.01
울산광역시 (1)	한국석유공사	울산광역시 중구	2014.11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3186호,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1.9.9.)

1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12]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해당 면제 조항은 201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개정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고 있음

○ 지방철도공사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기관의 자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을 통해 확보됨

- 현행 「지방세법」에서처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방철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출자금이 특정 구의 세원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음

❑ 이와 같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공공기관의 부담완화,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기본적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대해 전국적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2. 공공기관의 정부 출자자본금 미등기 문제

가. 현 황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6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등기되지 않은 자본금이 있음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매년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해당 기간 동안 총 8,17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총 1조 3,938억원의 출자를 정부로부터 받음

◦ 그런데 양 기관은 해당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본금 등기를 하지 않았음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10년간 출자금액 및 등기여부]

(단위: 억원)

연도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출자금액	등기여부	출자금액	등기여부
2015	1,159	미등기	3,903	미등기
2016	1,390	미등기	1,149	미등기
2017	880	미등기	1,421	미등기
2018	467	미등기	705	미등기
2019	336	미등기	742	미등기
2020	393	미등기	1,064	미등기
2021	690	미등기	2,706	미등기
2022	763	미등기	811	미등기
2023	880	미등기	704	미등기
2024	1,212	미등기	733	미등기
합계	8,170	-	13,938	-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한국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법정자본금[1] 13조원,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법」에 법정자본금[2] 22조원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 납입자본금을 출자받고 있으나, 각 기관의 등기된 납입자본금은 실제 출자받은 납입자본금과 차이가 있음

- 먼저 한국석유공사는 설립 이후 2024년 말까지 10조 9,089억원의 납입자본금을 출자받았으나, 그 중 10조 699억원만을 등기하였음[3][4]
-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설립 이후 2024년 말까지 10조 9,975억원의 납입자본금을 출자받았으나, 그 중 8조 6,408억원만을 등기하였음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법정자본금과 실제 출자받은 납입자본금]

(단위: 억원)

기관명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계	등기된 납입자본금	미등기 납입자본금
한국석유공사	130,000	109,098	100,699	**8,399**
한국철도공사	220,000	109,975	86,408	**23,567**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한국석유공사법」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2)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3) 2014.12.16.에 등기한 후, 2015.10.16.에 등기를 삭제하였다가, 2025.8.19.에 등기회복한 납입자본금임.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해당 납입자본금은 2014년 출자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은바 있음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납입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등기하지 않고 있는바, 자본금을 등기하도록 한 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관의 등록면허세 납부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먼저 각 공공기관의 근거 법령은 자본금의 등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납입자본금의 신규출자 또는 증가는 자본금의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것은 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본금을 설립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자본금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하도록 하고 있음[5)]
-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본금을 설립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자본금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하도록 하고 있음[6)]

❑ 일부의 경우, 등기가 필요한 법령상 '자본금'의 의미를 법정자본금에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5)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첫째, 공공기관이 기관이 미등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권리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함[7][8]
-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에 대해 명확히 등기하는 것은 해당 자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측면에서 중요함

○ 둘째, 「상법」상 영리회사의 경우에도 실제 납입된 자본금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 법률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도 납입된 자본금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액'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들이 실제 납입한 납입자본금의 총액을 의미함[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역시 자본금의 납입이 있을 경우 등기 또는 변경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0]

---

7) 안창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연구」, 조세와 법 제8권 제1호, p.15, 2015.

8) 현행 세법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등기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부에 등록한 물건의 소유주가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이나 우월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안창남, 「지방세 확충을 위한 등록면허세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p.3, 2015. 참조

9)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 관련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법 규정	규정 대상	자본금 관련 필수 등기사항
제180조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제271조	합자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제287조의5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의 액**
제317조	주식회사	**자본금의 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제549조	유한회사	**자본금의 총액**

1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자본금
제52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한편,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미등기 납입자본금 보유는 향후 상당액의 등록면허세 부담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기관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시 등기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면서,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11)]

◦ 이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는 미등기 납입자본금을 등기할 경우, 자본금 증가분만큼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됨

◦ 과거 장기간 미등록 납입자본금이 누적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납입자본금의 등기행위를 통해 미등록 상태를 해소시 상당액의 등록면허세가 일시 과세되어 기관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현행 상당액의 납입자본금 미등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3-3. 유상증자 후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 회계처리의 통일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 공공기관들 중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신주발행[1]을 하는 기관이 있음

◦ 신주발행을 할 때 회계상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비용이 주식할인발행차금임

-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2]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주식의 할인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할인발행 금액과 신주발행비[3]의 합계액 비용을 말함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기업이 긴급하게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증자)할 필요성이 있어, 주식을 액면가치보다 싸게 할인발행할 때 발생함

나. 주요 쟁점

❑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공공기관 중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상각시키는 회계처리를 시행하는 기관들의 경우, 이를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말 기준 출자가 이루어진 35개 공공기관 중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는 기관은 총 14개이며, 상당수 기관(9개)은 자본조정항목 계상을 통해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신주발행은 자본금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리고, 인수인의 납입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구조를 유상증자라 함

2)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신주발행비란 일반적으로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증자 시에 발생하는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경우 유상증자를 하게 됨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150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당 세액은 신주발행비에 해당함

이를 회계처리하고 있음

○ 다만, 일부 기관은 해당 비용(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상각시키는 기관이 존재함. 구체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서 상각 처리(3개)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인식(1개)하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함

○ 한편,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자본조정항목이 아닌 기존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1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서 상각 처리하는 방식이란, 과거에 발생한 배당가능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해당 비용(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충당하는 방식을 말함
-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현재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함
-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란, 과거 주식의 할증발행(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이 있었을 경우 계상되었던 자본항목(주식발행초과금)에 누적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말함[4)]
- 자본조정항목 계상이란, 별도로 자본항목에 설정된 자본조정항목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 별도 계상하는 방식을 말함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공공기관들의 주식할인발행차금 처리방식]

(단위: 개)

처리방식		공공기관명
이익잉여금 상각(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상각 처리 (3)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인식 (1)	대한석탄공사
자본조정 (10)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1)	한국산업은행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 (9)	새만금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4) 이 경우, 비용 등 이익 요건에는 별도로 영향이 없음

(단위: 개)

처리방식		공공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식할인발행차금 미발생 (21)		88관광개발(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처럼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별도의 해당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관별 회계처리 방식에 자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 등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법령에서는 해당 규칙 및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6]
- 그런데 K-IFRS 및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처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이는 개정 전 「상법」과 다른 점임[7]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이에 따라 현재 민간기업에서도 주식을 할인발행할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 비용을 K-IFRS에 따라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게 되면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손실보전 여력을 줄이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본의 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함

○ 각 공공기관은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손실금의 보전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손실금 보전 이후 공공기관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확대할 여지도 높일 수 있음

- 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이익잉여금을 침식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회계상 기관의 손실금 보전여력을 줄이는 문제가 있음[8][9]

---

7) 개정 전 「상법」(2011.4.14. 개정에 따라 삭제된 규정)
제454조(신주발행비용의 계상) ①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신주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8) 출자받은 35개 공공기관 중 손익금 처리를 할 때 이월손실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둔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며, 특히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의 경우, 이월손실금 보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9) 참고로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35개 공공기관들의 손익금 처리 규정의 우선순위 조항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

이익 발생시 우선순위 조항	공공기관명
이월손실금(결손금)의 보전 (26)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본금 총액 달할 때까지 이익금 적립 (4)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규정 없음 (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88관광개발(주)

○ 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자본금 조정 항목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익잉여금 및 향후 손실처리 여력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특히 별도 계정을 통해 계상하는 이상 회계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기관 차원에서도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상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은 정책적으로 이를 자본조정항목의 계상을 통해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 현황 분석

4-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계획 대비 수익 저조 문제

가. 현 황

❑ 2011~2024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공공기관투자평가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행기관인 KDI가 조사를 수행한 실적은 예비타당성조사 335건, 타당성재조사 14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9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9건임

- ◦ 2024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18건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건을 수행함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의 경우, 2015년 이후 각각 9건의 수행실적이 있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수행실적]

(단위: 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예비타당성조사		16	17	23	14	20	25	28	33	35	30	40	14	22	18	335
타당성재조사		-	-	-	-	-	-	-	-	-	4	4	5	1	-	14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	-	-	2	-	-	-	1	2	1	3	-	-	9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	-	-	-	-	-	-	-	1	-	6	2	9
계		16	17	23	14	22	25	28	33	36	36	46	22	29	20	367

주: 2024년 12월 말 까지 대상사업 선정 기준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2011~2024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35건을 공공기관별로 구분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5개사의 사업이 각각 66건, 41건, 82건으로, 56.4%를 차지함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주로 부동산 개발 및 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에 해당함

[공공기관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 %)

공공기관	2011~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비중
한국토지주택공사	45	7	3	5	6	66	19.7
한국전력공사	28	4	4	3	2	41	12.2
발전 5개사	56	14	2	5	5	82	24.5
한국가스공사	10	3	-	2	1	16	4.8
한국자산관리공사	10	2	-	1	-	13	3.9
교통관련 공사	18	-	-	1	1	20	6.0
기타	74	10	5	5	3	97	28.9
계	241	40	14	22	18	335	100.0

주: 1) 대상사업 선정 기준
2) 교통관련 공사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단,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포함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1~2024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35건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발전 및 설비 부문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택지 및 부지개발(68건), 산업단지(55건) 등 순임

[부문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택지 및 부지개발	산업 단지	항만	도로 및 철도	자원 개발	기타	계
2011~2017	59	34	25	12	1	2	10	143
2018	23	5	3	1	0	0	1	33
2019	11	6	9	2	4	1	2	35
2020	12	5	5	0	5	1	2	30
2021	25	6	3	2	2	0	2	40
2022	6	2	3	0	1	0	2	14
2023	7	7	1	0	1	4	2	22
2024	7	3	6	0	0	1	1	18
계	150	68	55	17	14	9	22	335

주: 1) 2024년 12월 말까지 대상사업 선정 기준
2) 기타 부문에는 수자원 등을 포함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나. 주요 쟁점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사업 중 당초 계획 대비 손익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또는 면제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관 사업 등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실적 저조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총사업비				누적손익		비고
		합계	공공(자체)	국고	민간	계획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1]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2]	729	729 (614)	-	-	△564	△648	투자심의회 거치지 않음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1,614	1,614	-	-	△1,064	△1,405	
	소계	2,390	2,390	-	-	△1,628	△2,053	
한국남부발전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4,117	4,117	-	-	414	△246	
	미국 Niles 복합 사업	12,821	2,949	-	9,872	1,505	733	
	소계	14,482	4,610	-	9,872	1,919	487	
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 Coral 가스전 및 FLNG 개발사업	95,596	5,120	-	90,476	△3,780	△6,396	(1,132.06 원/USD)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입찰사업	5,050	5,050	-	-	-	△3,018	예타 면제 (1,156.31 원/USD)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사업	55,810	4,388	-	51,422	4,006	△3,138	예타 면제 (1,362.72 원/USD)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SPC 출자사업	2,442	300	1,390	752	-	△118	타당성 재조사
	소계	158,898	14,858	1,390	142,650	226	△12,670	
한국남동발전	분당 연료전지 4단계 발전설비 건설 사업	842	842	-	-	172	25	
	파키스탄 Gulpur 수력사업[3]	5,183	1,520	-	3,663[4]	125	83	예타 면제
	영흥풍력 2단지 개발 사업	423	423	-	-	6	△46	
	G-Project 석탄화력사업	51,960	2,627	-	49,333	2,027	△353	
	NSP 석탄화력 발전사업	56,000	2,610	-	53,390	4,676	1,543	
	소계	114,408	8,022	0	106,386	7,006	1,252	

기관명	사업명	총사업비				누적손익		비고
		합계	공공(자체)	국고	민간	계획	실제	
한국서부발전	김포열병합 건설사업	7,724	7,724	-	-	654	222	
	태안 9,10호기 건설사업	29,076	29,076	-	-	6,350	1,602	예타 면제
	동두천복합 공동개발사업	15,957	1,111	-	14,846	2,761	△776	
	소계	52,757	37,911	-	14,846	9,765	1,048	
한국동서발전	춘천집단에너지사업	6,888	1,763	-	5,125	2,781	1,185	예타 면제
	인니 칼셀 -1 석탄화력 발전사업	5,992	570	-	974	5,354	3,874	
	소계	12,880	2,333	-	6,099	8,135	5,059	
한국수자원공사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사업	14,000	4,200	-	9,800	-	△2,394[5]	타당성 재조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코하이젠)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사업[6]	3,434	82	1,520	1,832	-	△27	타당성 재조사
합계		375,705	76,862	2,910	287,822	**25,423**	**△9,398**	

주: 1) 기관의 토지 매입 의무가 없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으로 국유지 용지보상비는 작성 제외함
2) 한국자산관리공사 614억원 + 국유재산관리기금 115억원
3) 파키스탄 Gulpur 수력사업 : 1 USD = 1383.2 원, ('25.06.23. 네이버환율고시)
4) 3,663억원(264.8 Mil USD) 중 1,181억원(85.4 Mil USD)는 한국수출입은행 지분
5) 확정 손실이 아닌 일시적인 회계적 개념의 손상처리금액
6)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차 외 7개사 출자(자본금 기준)한 합작법인('25.5월말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율 16.01%), 차입금은 '민간' 부문에 포함
1. 누적손익은 2024년말까지 기관 부담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이들 20개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37조 5,705억원, 2024년 말까지의 누적손익 합계는 △9,397.9억원으로 나타남

◦ 공사채 발행 등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에서의 손실 발생은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수익성 관리 강화가 요구됨

❑ 개별 사업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의 누적 손익이 △648억원으로 계획(△564억원)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국유개발재산 임대료 감면 및 공실률의 증가[1]에 따른 수익 저조로 인한 것임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現 보건복지행정타운)은 당초 수익이 2019년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2021~2024년간 최대 연수익이 94.4억원에 불과하여 2024년까지의 누적 손익이 당초 계획(△1,063.7억원) 대비 악화된 △1,405.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계획 대비 사업준공이 2.5년 순연되어 회수 시작 시점이 지연되었고,[2] 사업 초기 공실률이 높았으며,[3]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 정책[4]이 시행(임대료 50% 감면)됨에 따라 사업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국남부발전의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5]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계획상 2021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상하였으나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22년 9월 '실계통 기반 하루전 시장' 제도 개편[6]에 따라 계통제약으로 운전되는 제주 발전기는 SMP(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7] 결정시 제외되어 SMP가 하락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SMP 수익

---

1) 당초: 4.51% 공실예상 → 실제(2024.12월) 7.25% 공실 발생

2) ① 공사 발주 지연 - 입찰방법 변경 검토(턴키→일반공사)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인한 착공 지연
② 주52시간제 시행 - 2018.7.1.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③ 지하철 출입구 설치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서울교통공사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3) 공실률: 2021년말 13.8%, 2022년말 12%, 2023년말 2.9%, 2024년말 1.6%

4) 2020.3월 ~ 현재(2025.12.31.종료 예정)

5)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지역 긴급 건설사업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160MW 급)

6) 하루전에 SMP 결정시 각 발전기별 제약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제약에 해당하는 발전기들은 SMP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된다.

기존 (하루전 시장)	변경 (실계통 기반 하루전 시장)
· 전력시장↔실제운영 불일치 - 제약사항 반영 없이 SMP 결정 - 제약 발전기 별도 운영	· 전력시장↔실제운영 일치 - 제약사항 반영, SMP 결정 - 제약대상 발전기 SMP 결정시 제외

이 축소되었고, 제주지역 민원에 의한 NG(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의 지연으로 경유 운전이 장기화되어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 한국남부발전의 미국 Niles 복합 사업[8]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적 손익을 보면 1,505억원 규모의 이익 발생을 추정하였던 것과 달리 2024년까지의 실제 이익은 733억원으로 계획 대비 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 미국의 기록적인 겨울 폭풍으로 인한 장기 비계획정지로 계획 대비 이용률이 하락하였고, 2023년의 계획 대비 일시적 전력판매단가의 하락, 2024년 하반기 계획예방정비공사 공기지연에 따른 이용률 하락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수익이 저조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 ○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Coral 가스전 및 FLNG 개발사업[9]은 2016년부터 2024년말까지의 누적 수익이 3조 4,352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7조 4,085억원 대비 46.4%로 나타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계획 대비 집행이 저조한데, 이는 최종투자결정 시점까지의 시간 소요[10]와 이로 인한 건설기간 및 생산 개시 시점의 지연[11], 국제 유가의 하락[12]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 계획 당시의 예상 수익이 달성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임
- ○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입찰사업(2010~2018)[13]은 북미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개발 중단으로 2018년 사업 종료에 따른 손상 및 손실을 인식하였는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총사업비 437백만USD

---

7) 전력거래소가 하루전에 예측한 전력수요와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어 운전이 결정된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비용으로 매시간 결정되며, 전력량 정산의 기초가격으로 사용된다.

8) 셰일혁명 기회를 활용한 미국 가스복합 사업진출로 해외수익 증대를 위한 건설(1,048㎿ 급)

9)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전의 탐사 단계부터 가스전 개발 및 FLNG(해상 부유식 액화설비) 건조를 거쳐 LNG 생산에 이르는 LNG 밸류체인 全 과정에 참여하는 최초 사업

10) 분석 기준시점(2015.12.31.) 당시에는 2016년 하반기 최종투자결정 목표였으나 실제로 각 참여사 내부절차를 거쳐 2017.6월 최종투자결정 달성 완료

11) 2016년 예타 보고서상에는 2016.4월~2021.3월 건설 이후 2021.4월부터 생산으로 가정되어 있으나 최종투자결정 지연으로 2017.6월 건설계약 체결되어 2022.1월 시운전을 거쳐 2022.10월 LNG 생산 개시됨

12) 2016년 예타보고서상 장기유가(Brent) 전망은 사업기간 평균 $109 가정하였으나, 2025년 기준 장기유가(Brent) 전망은 동일 기간 유가 평균 $89.4 가정

13) 캐나다 비전통가스전 자원 확보를 위한 가스전 참여 사업

중 계약상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하는 투자비 261백만USD(약 3,018억원)를 집행하였는바,[14] 해당 투자금은 일부 회수되지 못하여 매몰비용화 되었음

- 한국가스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사업[15]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수익 예상 규모가 616백만USD이었으나 실제 누적 수익은 79.7백만USD로 계획 대비 12.9%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가스 구매자(UTG, 우즈벡국영가스운송회사)의 가스 대금 연체가 누적되고, 2017년말 PF 대주단으로부터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 통보 및 주주사 배당 동결 조치로 인해 공사의 투자비 회수가 중단되었기 때문임
-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SPC 출자사업[16]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약 118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당초 전국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4월말 기준으로 현재 47개의 수소충전소만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는바,이는 정부 정책 및 지자체가 예측한 수소차량 수요 전망 대비 실제 수소차량 보급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임[17]
- 한국남동발전의 분당 연료전지 4단계 발전설비 건설 사업(2018~2038년)은 2024년까지의 누적수익이 25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172억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EC[18]가격 감소(104.17→66.25원/kWh) 및 연료비 상승(6.88%/년)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당초 계획 대비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손익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

14) 기존광구에 대한 의무투자비를 집행하였고, 공동부담분은 추가개발분에 대하여만 매입비와 운영비(법인운영비)를 부담

15) 아랄해 인근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을 우즈벡 국영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와 공동 개발하고,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운영으로 화학제품생산 및 가스생산판매

16) 정부의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의 적기 실현 지원 및 초기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모델로서 여러 민간기업의 공동투자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17) 2024년 수소차 보급실적(3.7만대)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17) 기준 정부 목표(10.1만대) 대비 37%에 불과

18)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을 때 에너지공단이 발급해주는 인증서로, 1MWh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1개씩 발급한다. REC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구매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충족한다.

◦ 한국남동발전의 파키스탄 Gulpur 수력사업은 파키스탄 Power Policy에 의거하여 단계별 전력요금 조정을 해야하나 최종 단계인 COD[19] Tariff가 승인 절차 진행 중인 상황으로, 2024년까지는 누적 수익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임

◦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풍력 2단지 개발 사업은 2024년까지 6억원의 누적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46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REC[20] 가격의 감소 추세[21], 풍력발전 계획이용률 대비 실제이용률의 감소(연평균 2%) 및 일평균 풍속저하에 따른 연간 전력생산량 및 설비이용률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한국남동발전의 G-Project 석탄화력사업은 2024년까지 2,027억원 규모의 수익 발생을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353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음. 이는 해상(방파제 및 하역부두) 및 연약지반 보강, 환경기준 강화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가 증가하였고, 신재생설비 추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인해 전체 총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반면 동해안 발전소의 송전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소 가동률 저하로 전력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수익은 계획 대비 저조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었음

◦ 한국남동발전의 NSP 석탄화력 발전사업은 2024년까지 4,676억원의 수익 발생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계획의 33% 수준인 1,543억원의 누적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설비투자비 증가, 신재생설비 추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또한 계통운영에 따른 운영예비초과정지로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 전력매출액 역시 감소하여 당초 계획한 손익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남

---

19) COD(Commercial Operation Date)는 발전소, 송전선로 등 전력 설비가 정상적으로 상업 운영을 시작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20)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을 때 에너지공단이 발급해주는 인증서로, 1MWh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1개씩 발급한다. REC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구매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충족한다.

21) 2017년 104,688원/MWh → 2023년 66,593원/MWh

◦ 한국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 건설사업[22](2020~2024)은 2023~2024년의 경우 당초 계획(6,292억원) 대비 실제 수익(4,506억원)이 71.6% 수준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획(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 대비 실제 전력수요 및 SMP 변동에 따른 실적 저조에 기인한 것임

◦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 건설사업은 2024년까지 6,3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발생 수익은 누적 1,599억원으로 계획 대비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익의 계획 대비 증가분(4조 3,111억원)보다 비용의 계획 대비 증가분(4조 7,862억원)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 한국서부발전의 동두천복합 공동개발사업은 2024년까지의 누적 수익이 2,761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발생 누적 손익은 △776억원으로 오히려 손실 누적 상황에 있는데, 이는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계획 당시 대비 LNG 원가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른 이용률 및 발전마진(전력판매수익-연료비)이 감소하였고, 계획예방정비공사비 등 추가적 자본적 지출에 대한 금액[23]과 자금 조달 관련 금융비용[24]이 과소 산정된 것에 기인함

◦ 한국동서발전의 춘천집단에너지사업은 2024년까지의 누적 손익이 1,185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2,781억원 대비 42.6%에 불과한데, 이는 에너지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24년까지의 누적 사업 수익이 계획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한국동서발전의 인니 칼셀 -1 석탄화력 발전사업은 2024년까지 누적 수익 5,354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발생 누적 수익은 3,874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27.6% 수준이었는데, 이는 정부 PPA(전력 구매 계약) 협상 등 인허가의 지연과 주요 기자재의 조달 지연으로 인해 준공이 10개월 지연됨에 따라 계획 대비 수익 발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22) 김포시 양촌읍 약 10만㎡ 부지에 설치되는 기술집약적 종합플랜트 건설사업

23)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계약상 12,500시간 또는 정지·기동 450회 도달시 계획예방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계통한계발전기로서 빈번한 정지·기동이 수반되어, 잦은 계획예방정비공사 수행(약 1.5년 주기)에 따른 자본적 지출부담 증가
※ 계획(2017~2045) : 감가상각비 연 558억원 동일하게 산정
※ 실적(2024) : 감가상각비 868억원

24) 자금조달계획 차이 등에 따른 이자비용 차이 발생(금융비용 과소 추정)
※ 계획/실적(2024) : 210억원/470억원

◦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사업[25]은 특히 2022년에는 조지아 정부와의 실시협약 변경 협의 경과 등을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했고, 이로 인해 2022년에 약 2,19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26]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대안 마련 등 사업 방식 전환을 통해 손실 만회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코하이젠)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사업[27]은 타당성재조사 당시에는 2026년까지 35개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지자체의 수소버스 도입 지연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2024년 10월에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목표 구축 수가 19개로 감소하였음. 그 결과 2025년 5월말 기준 19개소 중 10개의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으며,[28] 변경 사업계획 기준 총사업비의 54.1%가 집행된 상태임

---

25) 조지아에 수력발전시설을 건립하고 이후 46년 동안 시설을 운영관리하여 현지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26) 한국수자원공사는 SPC 운영비 부담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0~83억원을 추가 투자하였다. 2024년 기준 누적 취득원가가 2,394억원인데 반해 장부가액은 126억원에 불과하며 손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JSC Nenskra Hydro 지분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취득원가	2,117.9	2,190.9	2,268.5	2,344.6	2,394.4
장부금액	2,117.9	2,190.9	-	76.1	125.9
지분율	92.21	92.46	92.67	92.86	92.98
비고	82.8억원 추가취득	73억원 추가취득	손상차손 인식	76.1억원 추가취득	49.9억원 추가취득

주: 별도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연도별 감사보고서 바탕 재작성

27) 상용차용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28) [수소충전소 준공 현황]

구분	2023년 준공 (4개소)				2024년 준공 (3개소)			2025년 준공 (3개소)		
	전주	창원	여수	양주	포항	세종	파주	진주	울산	안산
상업운전일	'22.11.	'23.05.	'23.10.	'23.11.	'24.03.	'24.05.	'24.09.	'25.02.	'25.04.	'25.04.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4-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계획 대비 집행 저조 문제

가. 현 황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사업 중 당초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 또한 다수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또는 면제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중부발전 등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면제 사업 중 집행 저조 사업]

(단위: %)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률	비고
한국 철도공사	수색지역 차량기지 이전조성 사업	2020.11. ~ 현재	0	
	부산 철도차량정비단(일반) 이전 조성사업	2021.9. ~ 현재	0	
	일반철도 노후차량 대체 수송차량 구입(EMU-150, 150량) 사업	2018~2023	77	예타 면제
	일반 여객열차 노후차량 대체 구입사업 (EMU-150, 172량)	2019~2022	30	
	장항선 신규차량 도입 사업	2019~2024	63	
한국지역 난방공사	수원 집단에너지사업	건설(2024~28년), 운영(2028~57년)	1.8	
여수광양 항만공사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22~2029	10.6	예타 면제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2019~2030	10	
한국 전력공사	765kV 강원개폐소 건설사업	2013~2028	18	
	서남해 5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	2011~2052	15.3	
	154kV 동서울#2 삼성#2 전력구 건설사업	2020~2025	63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	2016~2028	50.5	타당성 재조사 면제
한국중부발전	보령 6호기 연료전환 대체건설사업(함안복합)	2021~2027	13	

주: 집행률은 2025년 5월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나. 주요 쟁점

❑ 신규 투자사업의 사업 추진 지연은 사업 목적의 적기 달성을 저해하거나 물가 상승, 부대비용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일부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발견되었음
- ○ 따라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 및 집행여건 검토를 정확히 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개별 사업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 한국철도공사의 수색지역 차량기지 이전조성 사업 및 부산 철도차량정비단(일반) 이전조성 사업은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됨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2025년 5월말 기준 모두 사업비 집행률이 0%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 한국철도공사의 수색지역 차량기지 이전조성 사업[1]의 경우 고양시와의 차량기지 이전 협의에 어려움[2]이 있어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한국철도공사의 부산 철도차량정비단(일반) 이전조성 사업[3]은 정비단 이전 비용을 現 정비단부지 복합개발(토지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인데,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4]하였으나, 공모 결과 사업참여 업체가 없어 무산된 상황임

---

1) 서울·수색차량 2곳으로 분산된 차량기지를 고양시로 통합·이전하여 노후된 정비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도입차량의 정비시설로 활용

2) 차량기지 이전방식 및 주민상생방안에 대한 고양시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로 협의 지연

3) 철도정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심기능을 재편하여 부산의 미래 성장 혁신공간으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4) (민간사업자 공모기간) 2024. 12. 19.~2025. 5. 7.

◦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철도 노후차량 대체 수송차량 구입(EMU-150, 150량) 사업의 경우, 2021년 8월까지 150량의 차량 구매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품 수급 차질 등의 발생으로 2024년 말 기준 총 150량 중 104량(69.3%)만이 납품 완료되었음

◦ 한국철도공사의 일반 여객열차 노후차량 대체 구입사업 (EMU-150, 172량) 및 장항선 신규차량 도입 사업은 2022년 11월까지 차량 구매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부품수급 차질, 물가변동 등의 발생으로 인해 2019년 11월 최초 계약 이후 2024년 10월까지 8차에 걸친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납품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원 집단에너지사업은 2019~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검증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적인 유가 급등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무적 위험 증가에 따라 투자가 일부 지연되어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총사업비 2,774억원 중 집행된 금액이 총 49억원(집행률 1.8%)에 불과한 상황임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5](2022~2029)은 총사업비가 당초 7,388억원에서 7,846억원으로 약 458억원이 증가하였는데,[6] 총사업비 조정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10.6% 수준으로 나타나며 2025년에도 2023년 재이월예산 및 2024년 이월예산을 사용 중으로 집행이 저조함[7]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8](2019~2030)은 총사업비가 당초 6,061억원에서 6,529억원으로 468억원 증가하였는데, 이후 재료원(토사, 석탄회 등)의 수급 지연 등으로 공정 추진이 지연됨에 따

---

5) 광양항 '컨'부두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확대

6) 본 사업의 적용단가(국제 단가)와 국내 항만장비산업계 단가 차이에 따른 안벽크레인 지속유찰('23.12. ~ '24.08., 6회)로 사업이 순연됨에 따라 국산 안벽크레인 현실단가를 적용하여 총사업비 증가·조정이 이루어졌다.

7)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최초 협의가 2023.11.에 완료되는 등 사전 절차 소요에 따른 발주·계약 순연, 최초 협의 이후 안벽크레인을 발주하였으나 6회 무응찰로('23.12. ~ '24.08./9개월) 총사업비 조정('24.10.)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8)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제조와 해양 신산업, 상업·업무·교육·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 물류지구 공간으로 항만재개발

라 당초 29년말 완료 목표에서 30년말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

- ◦ 한국전력공사의 765kV 강원개폐소 건설사업(2013~2028)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전력망 계통연계 방안이 재검토되어 사업취소 후, 사업내용이 변전소 건설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추진되었는바, 동 사업은 현재 2025년 6월 기준 총사업비 967억원 중 172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18% 수준임
- ◦ 한국전력공사의 서남해 5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사업(2011~2052) 중 400MW 시범사업은 현재 주요 인허가(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기본설계 착공 등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출자 이전단계)로서 2025년 6월 현재 총사업비 2조 4,177억원 대비 집행액은 3,718억원(실증사업 준공)으로 집행률 15.3% 수준임
- ◦ 한국전력공사의 154kV 동서울#2 삼성#2 전력구 건설사업(2020~2025)은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이나, 2025년 6월 기준 총사업비 840억원 대비 536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63%로 나타나고 있음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9]은 인허가 과정의 장기화(2016~2022년)에 따라 사업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지조성 단계에 있는 본 사업의 총사업비(3,921억원) 대비 집행률은 약 50.5% 수준임
- ◦ 한국중부발전의 보령 6호기 연료전환 대체건설사업(함안복합)[10](2021~2027)은 2025년 5월말 기준 공사 착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집행률이 13%에 불과한데, 함안군에 조성중인 군북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이나 산단 조성시 이주대상 마을주민(국계마을)의 지속적 공사중단 요청 및 민원 제기로 인해 약 2년의 공사 지연이 발생한 상황임

9) 첨단과학 기술 접목 융복합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사업 기반 확충 및 산업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10) 국가 에너지전환정책 및 제9·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보령 6호기를 폐지하고, 신규 LNG복합발전으로 대체 건설

4-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투자심의회 심의를 면제한 문제

가. 현 황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투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관 자체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이러한 측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공기업은 주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에 공사채를 발행하여 사업 수행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기관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공공기관의 투자심의회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심의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 ㅇ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심의회 심의 면제 조항을 신설 적용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투자심의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재무적 타당성 심의 기능이 반감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투자심의회의 재무적 타당성 심의를 면제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한국중부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5개 기관 소관 13개 사업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투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기관명	사업명
한국중부발전	보령 5호기 연료전환 대체건설사업(보령신복합 1호기), 보령 6호기 연료전환 대체건설사업(함안복합), 제주복합 3호기 건설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적량지구), 안성동신산업단지, 온산국가산단확장단지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확장사업,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건설,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사업,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 · 설치사업
한국가스공사	3개(청양,합천,산청군)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보급사업, 2개지역 천연가스 보급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개별 사업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중부발전은 사규인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2019)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투자심의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3개에 대한 투자심의회 심의를 미실시하였음

◦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기관 내부 투자사업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AHP≥0.5)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적량지구), 안성동신산업단지, 온산국가산단확장단지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별도로 투자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 부산항만공사는 자체 규정(부산항만공사 투자심사지침)[1]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로 사업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를 면제하고 있는바, 2015~2021년 시행된 4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모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투자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 한국가스공사는 내부 「투자사업관리지침」에 따라 투자심의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사업은 「경영기획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국내외투자사업으로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및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설사업은 제외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중 공군 여의도부지 개발사업 및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 내 투자심의회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투자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동 사업은 투자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한 결과, 2024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1) [부산항만공사 투자심사지침]

> 제3조(투자심사 대상)
> ①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정부 법·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

4-4. 지침에 규정된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제도의 법률 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절차의 근거를 두고 있음

-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1]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음
-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6조[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할 수 있음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절차는 현재 법률이 아닌 지침(훈령)에 각각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6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

○ 「국가재정법」 제38조[3]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유사하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면제 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는 것을 말함

---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도는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되어 왔으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실시 여부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사항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어떠한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개정(2020.3.)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한편,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4]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6조[5]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제도들이 현재 법률이 아닌 지침(훈령)에 각각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규정 사례(2020.3.)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제도도 공공기관운영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5)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6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 비교]

제도명	정부		공공기관	
	대상	근거	대상	근거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각 호 및 제4항의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운영법 제40조 제3항
타당성 재조사	국가재정법 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요청 사업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 등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	공공기관 운영법 제40조의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2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53조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6조

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는 각 근거 법령에서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어,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5 공공기관 예탁 재정자금 관리 현황 분석

가. 현 황

❑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예산 지원은 출자, 출연, 보조, 융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형성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음

❑ 재정 자금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출연금 및 펀드 등을 특정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 ◦ 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 ◦ 한국연구재단(통합 Ezbaro)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통합 RCMS)은 연구개발출연금을 관리하고 있음
- ◦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음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음

❑ 해당 기관이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지만 집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해당 자금을 운영·관리하는 경우가 존재함

❑ 이러한 경우 해당 자금을 은행에 예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게 되므로 각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미활용 자금을 예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구조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기관별 예탁재정자금 법적 근거 및 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출연금 등의 예탁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며 각 공공기관은 설립법 및 관련법에 근거하여 예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한국재정정보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받음
- ◦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연구개발비의 지급·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분석 업무를 수행함
- ◦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하고 출자금을 교부받음[1)]
-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2)]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공공기관 예탁재정자금 관리 구조

❑ 보조금·출연금 등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금 예산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3]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이며, 보조금 사용 기관에 대한 통계 분석·제공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

- 범부처 보조금 집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조금 부당집행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축되었음
-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24년 말 기준, 중앙·지자체 공무원, 공공·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등 25만 5천여 명(일평균 2만 4천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dBrain+, 보탬e, K-에듀파인, 공공·민간 기관 ERP 시스템 등 273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 통합 Ezbaro 시스템은 국가R&D 예산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임

- 범부처 연구비 통계 분석·제공으로 연구비 정보를 공유하며, 범부처 연구비 집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비 부당집행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축되었음
- 통합 Ezbaro 시스템은 2025년 기준 중앙부처 17곳, 다부처 3곳, 전문기관[4] 34곳에서 사용하고 있음

---

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은 통합 Ezbaro 시스템에 R&D 자금을 예탁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통합 Ezbaro 시스템 참여 부처 및 전문기관(2025)]

(단위: 개)

부처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나노종합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기상청 (2)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교육부 (2)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 (2)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경찰청 (1)	과학치안진흥센터
국가유산청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무조정실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림청 (1)	한국임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우주항공청 (1)	우주항공청
조달청 (1)	한국조달연구원
행정안전부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부처 (3)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주: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복 참여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통합 RCMS[5] 시스템은 국가R&D 예산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임

- 범부처 연구비 통계 분석·제공으로 연구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범부처 연구비 집행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비 부당집행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통합 구축됨
- RCMS 시스템은 2025년 기준, 중앙부처 8곳, 지방자치단체 1곳(경기도), 전문기관[6] 22곳에서 사용하고 있음

[RCMS 시스템 참여 부처 및 전문기관(2025)]

(단위: 개)

부처	전문기관
산업통상자원부 (10)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사업단
방위사업청(국방부) (4)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민군협력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진흥공단
농촌진흥청 (2)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환경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기도 및 기타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6) 전문기관은 RCMS 시스템에 R&D 자금을 예탁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한 한국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15일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조합에 투자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임

  ○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 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결성되어 운영 중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출자받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8]에 근거하여 2010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임

  ○ 투·융자를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으로 정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산업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결성되어 운영 중

(3) 기관별 사업비·연구비 예탁 평균잔액

❑ 예탁금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의 평균 예탁 규모는 2020년 12조 2,576억원에서 2024년 19조 9,208억원으로 7조 6,632억원 증가하고 있어 예탁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관리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해당 기간 동안 예탁 자금의 연평균증가율은 12.9%로 매년 예탁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자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 기관별 예탁 규모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장 크며, 기관별 예탁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6.7%~15.9% 수준임

◦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평균 예탁 규모가 가장 크며, 2024년 기준 보조금 예탁금 일평균잔액이 11조 3,252억원으로 2020년 대비 4조 4,160억원 증가하였음

◦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 기준 연구비 출연금 일평균 예탁잔액이 9,294억원으로 2020년 대비 2,474억원 증가하였음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CMS 시스템 예탁금 일평균잔액은 2020년 3조 478억원에서 2024년 4조 8,186억원으로 1조 7,708억원 증가하였음

◦ 현재 한국벤처투자의 여유자금의 평균 잔액의 도출이 어려운 바[9], 계정별 해당 연도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을 통해 평균잔액을 도출해보면, 2024년 기준 2조 6,604억원이며 2020년 대비 1조 1,861억원 증가하였음

-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하는 한국모태펀드의 경우 투자대기성자산이 각 계정별 계좌에 머무르고 있고, 크게 MMDA와 정기예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투자대기성자산을 MMDA와 정기예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평균 잔액은 1,872억원으로 2020년 대비 429억원 증가하였음

9)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모태펀드의 자조합이 2024년 12월 말 기준 약 1,300개 이상이기에 모든 계좌로부터의 평균잔액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각 관리 시스템 및 기관별 예탁 평균 잔액]

(단위: 억원, %)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차이 (B-A)	연평균 증감율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69,092	92,934	99,534	101,136	113,252	44,160	13.1
한국연구재단 (Ezbaro)	6,820	13,072	13,537	11,190	9,294	2,474	8.0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RCMS)	30,478	39,652	46,813	48,883	48,186	17,708	12.1
한국벤처투자	14,743	19,586	22,728	23,420	26,604	11,861	15.9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1,443	1,755	2,155	2,160	1,872	429	6.7
5개 기관 합계	122,576	166,999	184,767	186,789	199,208	76,632	12.9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기관별 금리 산정 방식 및 평균 금리

❑ 예탁기관별 금리 산정 방식은 상이한데, 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MMDA 금리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별 2024년 금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1%p 수준
- ◦ 한국연구재단 통합 Ezbaro 수신금리는 2024년 기준 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업MMDA 금리 △0.06%임
- ◦ 통합 RCMS 시스템 중 산업기술자금 금리 산정방식은 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MMDA금리×전담은행별 예치비율)이며, 개별 전문기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기업 MMDA 금리 기준을 활용함
- ◦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MMDA의 금리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금리 결정에 따르고 있음.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입찰받아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의 금리를 채택하고 있음

◦ 농업보험정책금융원은 MMDA에서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예금(7일미만)은 0.1%, 7일이 경과한 예금은 금액 구간별 이율[10]을 적용하고 있음. 정기예금은 자산 운용 가능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를 조사하여 최고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각 기관 및 시스템별 예탁 금리 산정 방식]

(단위: %, %p)

<table>
<tr><th>은행예탁계좌</th><th colspan="2">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td>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td><td colspan="2" rowspan="2">한국은행 기준금리
△0.3%p</td><td rowspan="2">한국은행
기준금리
△0.15%p</td><td rowspan="2">한국은행
기준금리</td><td rowspan="2">한국은행
기준금리
+0.1%p</td></tr>
<tr><td>한국연구재단
(Ezbaro)</td></tr>
<tr><td rowspan="2">한국연구재단
(Ezbaro)</td><td colspan="5">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업MMDA 금리</td></tr>
<tr><td colspan="3">△0.65%</td><td colspan="2">△0.06%</td></tr>
<tr><td>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CMS)</td><td colspan="5">전담기관별로 상이하며, ‘산업기술자금’ 협약 금리는
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MMDA금리 X 전담은행별 예치비율)</td></tr>
<tr><td>한국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td><td colspan="5">MMDA: 전담은행이 금리 결정
정기예금: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입찰받아 가장 높은 금리 적용</td></tr>
<tr><td>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업정책보험금융원)</td><td colspan="5">MMDA에서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예금(7일미만)은
0.1%, 7일이 경과한 예금은 금액구간별 이율</td></tr>
</table>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각 관리 시스템별 평균이자율은 다음과 같음

◦ 한국재정정보원이 2024년 기준 3.54%로 가장 높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RCMS) 금리가 2.35%, 한국연구재단 2.3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MMDA 0.55%, 정기예금 3.78%임

10) (5천만원 미만) 0.1%, (5천만원 이상) 0.1%, (1억원 이상) 0.15%, (5억원 이상) 0.5%, (10억원 이상) 0.6%

[각 기관 및 시스템별 예탁 평균이자율]

(단위: %)

은행예탁계좌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		0.37	0.31	1.82	3.48	3.54
한국연구재단(Ezbaro)		0.19	0.20	0.40	1.98	2.3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RCMS)		0.46	0.30	0.78	2.15	2.35
한국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MMDA	0.35	0.26	1.68	3.06	2.37
	정기예금	1.08	1.10	3.20	4.01	3.65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MMDA	0.27	0.20	0.55	0.51	0.55
	정기예금	1.46	1.08	2.22	3.93	3.78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한국모태펀드의 투자대기성자산 관리체계 강화 필요

❑ 한국모태펀드의 출자액은 전액 정부 부처의 예산집행을 통한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한국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인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펀드 출자사업을 통하여 출자하고 있음

❑ 정책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출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출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 중임.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운용지시를 수행하고, 해당 운용지시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처리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한국모태펀드의 총 출자액은 9조 8,616억 7,600만원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62.19%인 6조 1,325억원을 출자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17.03%인 1조 6,791억 7,6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9%인 3,540억원을 출자하고 있음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

조합원	구분	2024년 말		2023년 말	
		금액	지분율	금액	지분율
한국벤처투자	업무집행조합원	100	0.001	100	0.0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한책임조합원	6,132,500	62.19	5,682,500	63.87
문화체육관광부		1,679,176	17.03	1,364,176	15.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4,000	3.59	302,500	3.40
영화진흥위원회		312,000	3.16	312,000	3.51
특허청		261,400	2.65	250,000	2.81
환경부		234,500	2.38	176,000	1.98
중소벤처기업부		214,000	2.17	210,000	2.36
보건복지부		155,000	1.57	150,000	1.69
국민체육진흥공단		154,000	1.56	124,000	1.39
국토교통부		150,000	1.52	135,000	1.52
해양수산부		100,000	1.01	83,000	0.93
교육부		94,000	0.95	86,500	0.97
고용노동부		21,000	0.21	21,000	0.24
합계		9,861,676	100	8,896,776	100

자료: 한국모태펀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모태펀드를 구성하는 19개 계정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 한국모태펀드는 총 19개 계정이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개 계정마다 주요 출자 분야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계정별로 분리하여 운영 중

[한국모태펀드를 구성하는 19개 계정의 주요 출자분야]

계정	주요 출자분야
중진	창업초기, 루키리그, 부품소재, M&A 등에 투자하는 펀드
청년	청년창업기업 투자펀드
혁신모험	창업초기기업·혁신성장기업·농수산벤처기업 투자 펀드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분야 투자 펀드
엔젤	엔젤매칭투자조합 등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지방	지방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문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관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스포츠	「스포츠산업진흥법」 상 스포츠산업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영화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특허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이전알선과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과기정통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전기통신역무제공 및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투자 펀드
보건	보건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환경	미래환경산업, 미세먼지관련 기업 투자 펀드
해양	해양신산업 관련 기업 투자펀드
도시재생	구도심 도시재생을 목표로 관련 기업 투자펀드
국토교통혁신	국토교통혁신산업 기업 투자 펀드
교육	대학창업, 학생창업 기업 투자펀드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및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계정별 MMDA 평균잔액의 파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MMDA 금리 결정에 협상력이 낮다는 점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모태펀드의 사업 집행절차는 부처별 일반회계 혹은 기금(출자기관)에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관리하는 모태펀드에 선출자가 이루어지고,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민간과 매칭하여 벤처투자회사 등이 결성한 모태자펀드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이기에 일정 수준의 투자대기자산이 항상 한국모태펀드의 각 계정에 잔존하게 됨

○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각 계정에 남아있는 투자대기자산이 계정 내 계좌에서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한국벤처투자의 투자대기자산 운용은 크게 MMDA 계좌와 정기예금계좌에 넣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현재 MMDA 계좌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예금계좌의 경우 금융기관들로부터 입찰을 받아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예치하게 됨

○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현재 투자대기성자산 중에서 MMDA의 경우 현재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벤처투자는 계정별 투자대기성자산의 평균잔액과 관련하여 한국모태펀드의 계정별 자조합이 많고 자조합 내 계좌마다의 평균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수탁은행[11]의 입장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MMDA 금리의 경우에도 분기당 1회 수탁은행으로부터 이자원가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어서, 한국벤처투자가 이자율을 결정할 때 주체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한국재정정보원의 예탁금 이자율과 비교해서 1%p 넘게 차이난다는 점[12]에서 협상력을 주체적으로 발휘하면 보다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1) 한국벤처투자의 수탁은행은 하나은행임

12) 2024년 기준 MMDA 금리는 한국재정정보원은 3.54%, 한국모태펀드의 경우 2.37%

❑ 한국벤처투자는 MMDA 계좌 및 정기예금의 계좌의 평균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MMDA 금리를 결정할 때 주체적으로 은행과의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재정자금예탁기관 이자율 적정성 분석

❑ 재정자금예탁기관이 전담은행과 협약 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설정하게 되면 국고로 납입되어야 할 이자와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야 할 이자 등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전담은행과 협약 체결 시 시중금리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은 보조금과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발생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13)]

[이자 반납 조항 관련 법률]

<table>
<tr><th>구분</th><th>공공기관</th><th>관련 법률</th></tr>
<tr><td>보조금</td><td>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td><td>「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td></tr>
<tr><td rowspan="2">출연금</td><td>한국연구재단
(통합 Ezbaro)</td><td rowspan="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td></tr>
<tr><td>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통합 RCMS)</td></tr>
</table>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것도 가능함

❑ 한국연구재단[14]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5] 등은 전담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이자율 및 제반 조건들을 설정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자율 조건만 협약하였음

◦ 재정자금예탁기관은 자금을 예탁할 은행을 선정하고 이자율 등 구체적인 조건을 은행과 협약하여 결정함

◦ 한국연구재단은 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업 MMDA 금리를 기준으로 △0.65%(2019.9.1.~2022.8.31.)에서 △0.06%(2022. 9.1.~2024. 8.31.)로 금리를 소폭 조정하였으며 통합 Ezbaro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은행으로부터 5년간 156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담기관은 예적금에 대해 3년 주기로 이자율 협약을 진행하며 최종 협약 시점(2021년)에 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MMDA금리×전담은행별 예치비율)수준으로 이자율을 책정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사업을 위해 펀드 출자(5,000억원), 대출(3조원), 컨설팅(800회) 등을 지원받고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은 매년 예탁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예탁금리를 결정하며 2024년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1%p를 예탁금리로 결정하였음[16]

- 한국재정정보원의 전담은행과의 협약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자율 조건의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은 산업기술자금 R&D 전담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비해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 추가 협약 조건은 없음

14) 통합 Ezbaro 시스템 R&D자금 전담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전담은행과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함

1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담은행과 산업기술자금 협약을 체결함

16) 예탁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예탁금리 결정(10월 중) ▸ 참여 중인 예탁은행 대상으로 예탁금리 통보 및 참여 여부 확인(11월 중) ▸ 업무계약(1년 단기) 체결(12월)·예탁금리 적용(1월, 수시)

[예탁자금 협약 조건]

예탁기관	연월	예탁자금 이자율 조건	협약 조건
한국연구재단	2019 ~ 2024	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업MMDA 금리 (△0.65%~0.06%)	Ezbaro 시스템 운영비 지원 (5년 156억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담기관	2017 ~ 2025	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MMDA금리 X 전담은행별 예치비율)	펀드 출자, 대출, 컨설팅 등 지원
한국재정정보원	2020.1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無
	2020.2 ~ 2021	한국은행 기준금리 △0.3%p	
	2022	한국은행 기준금리 △0.15%p	
	2023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4	한국은행 기준금리 +0.1%p	
	2025	한국은행 기준금리 +0.15%p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정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은 재정자금예탁금에 대해 타 재정자금예탁기관에 비해 낮은 전담은행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연구재단의 예탁자금이자율은 2021년 0.2%, 2022년 0.4%에서 2023년 1.98%, 2024년 2.32%임

◦ 산업기술자금의 예탁자금이자율은 2021년 0.31%, 2022년 0.81%에서 2023년 2.11%, 2024년 2.28%임[17)]

◦ 연도별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 평균이자율은 2021년 0.31%, 2022년 1.82%, 2023년 3.48%, 2024년 3.54%로 타 재정자금예탁기관 전담은행 예탁계좌 평균이자율보다 높음[18)]

- 2024년의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이자율이 한국연구재단에 비해 1.22%p, 산업통상자원부 전담은행 예탁계좌 이자율에 비해 1.26%p, 창

17) 2025년은 5월까지의 이자 및 평균잔액 집계액임

18)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보조금 예치 전담 기관으로 은행과 예탁 조건 협의 시, 별도의 협약 조건 없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 0.15%p(변동가능)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부여받고 있음

업진흥원에 비해 0.94%p 높음

[재정자금예탁기관 예탁 규모·평균이자율 현황]

(단위: 억원, %, %p)

은행예탁계좌		2021	2022	2023	2024
한국연구재단	평균잔액(A)	13,072	13,537	11,190	9,294
	이자금액(B)	26	54	221	215
	평균이자율(C=B/A)	0.2	0.4	1.98	2.32
산업기술자금 예탁 자금	평균잔액(D)	25,614	29,653	30,629	30,736
	이자금액(E)	79	239	647	702
	평균이자율(F=E/D)	0.31	0.81	2.11	2.28
한국재정정보원	평균잔액(J)	92,934	99,534	101,136	113,252
	이자금액(K)	274	1,820	3,503	4,064
	평균이자율(L=K/J)	0.31	1.82	3.48	3.54
한국재정정보원과 평균이자율 차이	한국연구재단	0.11	1.42	1.5	1.22
	'산업기술자금' 예탁 자금	0	1.01	1.37	1.26

자료: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해봐도 재정자금예탁기관의 평균이자율은 다소 낮음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연평균 0.61%, 2022년 2.03%, 2023년 3.49%, 2024년 3.42%로 재정자금예탁기관 전담은행 예탁금 평균이자율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19)]

-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및 산업기술예탁자금은 기업 MMDA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됨

19) 한국재정정보원은 2024년 기준 3.54%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재정자금예탁기관 평균이자율 비교]

(단위: %)

유형	2021	2022	2023	2024
한국은행 기준금리	0.61	2.03	3.49	3.42
한국재정정보원 예탁자금 평균이자율	0.31	1.82	3.48	3.54
한국연구재단 예탁자금 평균이자율	0.2	0.4	1.98	2.32
산업기술자금 예탁자금 평균이자율	0.31	0.81	2.11	2.28

자료: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정자금예탁기관은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예탁이자율을 전담은행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협약 조건 없이 매년 19개 예탁은행에 예탁금리를 통보하고 차년도 예탁은행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 높은 예탁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3) RCMS 시스템 참여 전문기관 적정 이자수익 국고 반납 및 전문기관별 별도 협약 필요

❑ 통합 RCMS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와 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전담은행과 체결한 “산업기술자금” 협약 조건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전담은행과 이자율 등 협약조건을 체결함

○ “산업기술자금”[20] 관리·운영 등에 관한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입찰을 통해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21]을 선정하여 체결하며, 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MMDA금리 × 전담은행별 예치비율)[22] 수준으로 이자율을 책정

20) “산업기술자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위탁하는 출연금과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정부출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현금을 말함

21)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선정됨

22) ’14년~’16년 : 제1기 전담은행 금리산출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0.5% 로 산정), ’17년~’25년 : 제2기~제4기 전담은행 (금리산출기준 : 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MMDA금리 x 전담은행별 예치비율)

- 이자율 외에 기술혁신전문펀드 5,000억원 출자, 기술혁신전문대출 3조원, 기업종합 컨설팅 등을 함께 협약
- 예탁자금이 소규모인 전문기관 중 별도 협약 없이 산업기술자금 협약 조건(이자율 등)을 준용하여 자금을 예탁하기도 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23],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사업단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 재단법인나노융합2020사업단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과의 협약 내용을 준용하고 있음

[산업기술자금 협약 내용 준용 전문기관 및 이자율 조건]

<table>
<tr><th>기관</th><th>부처</th><th>기관</th><th>은행과 협약 내용</th><th>이자율 조건</th></tr>
<tr><td rowspan="3">협약 체결 기관</td><td rowspan="8">산업통상 자원부</td><td>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td><td rowspan="3">이자율 및 펀드 출자, 대출, 컨설팅 등 지원</td><td rowspan="12">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MMDA금리 × 전담은행별 예치비율)</td></tr>
<tr><t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td></tr>
<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td></tr>
<tr><td rowspan="9">협약 준용 전문기관</td><td>한국에너지공단</td><td rowspan="9">협약 내용 준용</td></tr>
<tr><td>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td></tr>
<tr><td>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td></tr>
<tr><td>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td></tr>
<tr><td>중소벤처 기업부</td><td>기술보증기금</td></tr>
<tr><td rowspan="2">법인</td><td>대한상공회의소</td></tr>
<tr><td>재단법인나노융합2020사업단</td></tr>
</table>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부처·전문기관별로 RCMS 예탁 R&D 자금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대부분 RCMS 운영비 분담금을 전담은행에서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별도 협약을 체결함

23) 전력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중인 자체 과제(2건)의 용역을 RCMS로 관리하는 시범운영('22년~'25년)을 하면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통합 RCMS를 사용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비 지급 및 협약 등은 RCMS의 절차와 방안을 준용하였음

- 협약 조건은 펀드 투자, 대출, RCMS 운영비 분담금 대납,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하며, 이자율 조건도 협약 조건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 혹은 개별 전담은행의 MMDA 금리와 연동해 계약을 체결[24]

① RCMS 시스템 참여 일부 전문기관 적정 이자수익 국고 반납 필요

❑ 통합 RCMS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와 전문기관 중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전담은행과 이자율 등 협약조건을 체결한 기관 중 평균이자율이 "산업기술자금" 협약 평균이자율(2024년 기준 2.28%) 보다 낮은 기관[25]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농촌진흥청 및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임

❑ 해당 기관의 2024년 기준 평균이자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0%,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0.02%, 농촌진흥청 1.28%인데 산업기술자금 예탁자금 이자율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해당 전문기관의 2024년 기준 평균잔액은 농촌진흥청(433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117억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108억원)이며, 2024년 기준 발생한 이자액은 각각 5.54억원, 0원, 200만원임

◦ 해당 기관에 "산업기술자금" 협약 평균이자율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이자 규모는 각각 9.88억원, 2.67억원, 2.46억원으로 발생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4.35억원, 2.67억원, 2.44억원임

◦ 즉, 해당 기관이 별도 협약 없이 "산업기술자금" 협약 조건을 준용하였을 때 추가적인 이자수익 발생이 가능함

24) 농촌진흥청의 경우 연구비 자금예탁 전담 부처임과 동시에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임

25) 평균잔액 100억원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농촌진흥청·한국산업단지공단·(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평균이자율 현황]

(단위: %)

부처	전문기관	2021	2022	2023	20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자금' 예탁 자금	0.31	0.81	2.11	2.28
	한국산업단지공단	0.13	0.0	0.0	0.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0.02	0.05	0.02
농촌진흥청		0.12	0.15	1.17	1.28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촌진흥청·한국산업단지공단·(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평균잔액 및 이자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	구분	2021	2022	2023	2024
농촌 진흥청	평균잔액	70,064	84,185	81,961	43,349
	이자액(A)	87	125	962	553
	'산업기술자금' 이자율 적용 시 추정이자액(B)	217	682	1,729	988
	이자액 차이(B-A)	130	557	767	435
한국 산업단지 공단	평균잔액	34,275	35,841	21,010	11,694
	이자액(A)	44	1	0	0
	'산업기술자금' 이자율 적용 시 추정이자액(B)	106	290	443	267
	이자액 차이(B-A)	62	289	443	267
한국 탄소산업 진흥원	평균잔액	-	14,630	15,073	10,768
	이자액(A)	-	3	8	2
	'산업기술자금' 이자율 적용 시 추정이자액(B)	-	119	318	246
	이자액 차이(B-A)	-	116	310	244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관련, 협약 내용에 따르면 전담은행은 전문기관이 지급받고 있는 낮은 이자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문기관 RCMS 운영에 관한 제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진흥청과 전담은행 간 협약조건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전월 기업 MMDA 평균금리로 협약하였으며, RCMS 운영비 분담금과 협약기간 이전 연구과제에 대한 정산 및 자료를 협약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며 그 운영비용을 농협은행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RCMS 별도 협약을 하고 있지 않고, 기업은행과 2022년 체결한 예치자금 협약 조건 중 일부가 2023년 이후 은행에서 RCMS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명목으로 연 2.5억원을 지원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접 운영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또한 이자율 관련 협약 없이 전산시스템을 은행 부담으로 구축(2021년도 전산시스템 구축 금액 2.4억원)하여 진흥원에 현물 기증 및 시스템 유지비용은 전담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음

[별도 협약 전문기관 예탁 협약 내용 및 이자율 조건]

전문기관	최종 협약시기	은행과 협약 내용	이자율 조건
농촌진흥청	2018~현재	RCMS 운영비 분담금 지원 협약기간 이전 연구과제 정산 및 자료 운영비용 지원	〈2019~2022〉 0.1~0.3% 〈2023년 이후〉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전월 기업 MMDA 평균금리
한국산업단지공단	2023~현재	RCMS 운영비 분담금 지원 연 2.5억원,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이자 관련 협약 無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021~현재	RCMS 전산시스템 구축 (2021년 2.4억원 규모) 및 유지비 지원 자금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 위탁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농촌진흥청 등과 같이 재정예탁자금 평균이자율이 낮은 전문기관은 적정 이자수익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의 경우 '산업기술자금' 이자율 적용 시 발생한 추가적인 이자수익에서 농협에서 대납한 RCMS 운영비 분담금과 협약기간 이전 연구과제 정산 및 자료 운영비용을 차감하여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7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함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산업기술자금' 이자율 적용 시 발생한 추가적인 이자수익에서 2021년 전산시스템 구축비 2.4억원을 차감하더라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함[26)]

- 전담은행에서 RCMS에 대납한 운영비 분담금은 2024년 기준 농촌진흥청 3.5억원이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운영비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음

[농촌진흥청·(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운영비 분담금]

(단위: 억원)

전문기관	구분	2021	2022	2023	2024	4년 합계
농촌진흥청	분담금(A)	3.1	3.1	3.5	3.5	13.2
	시스템 구축 및 관리(B)	1.2	1.3	0.16	0.16	2.82
	이자액 차이(C)	1.3	5.57	7.67	4.35	18.89
	차액(C-[A+B])	△3.0	1.17	4.01	0.69	2.87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분담금(C)	-	-	-	-	-
	이자액 차이(D)	-	1.16	3.1	2.44	6.7
	시스템 구축비(E)	2.4	-	-	-	2.4
	차액(D-C-E)	△2.4	1.16	3.1	2.44	4.3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6)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예치자금 협약 체결 조건 중 일부가 RCMS 운영비 분담금 지원액으로 설정되어 2023년 이후 기업은행이 RCMS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명목으로 연 2.5억원씩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RCMS 운영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② 통합 RCMS 시스템 전문기관별 별도 협약 조건 필요

❑ 통합 RCMS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전담은행과 별도의 협약 없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산업자금 전담은행과 협약한 조건으로 이자율 등 예탁 조건을 체결하고 있음

○ 별도의 협약 없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제시한 협약 내용을 준용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법인[27]인 대한상공회의소임

- 해당 전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과 체결한 협약 내용(이자율, 펀드 출자, 대출, 컨설팅 등)을 준용

[산업기술자금 협약 내용 준용 전문기관 및 이자율 조건]

<table>
<tr><th>기관</th><th>부처</th><th>기관</th><th>은행과 협약 내용</th><th>이자율 조건</th></tr>
<tr><td rowspan="3">협약 체결 기관</td><td rowspan="7">산업통상 자원부</td><td>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td><td rowspan="3">이자율 및 펀드 출자, 대출, 컨설팅 등 지원</td><td rowspan="11">Σ(전담은행별 전월 기업 MMDA금리 × 전담은행별 예치비율)</td></tr>
<tr><t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td></tr>
<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td></tr>
<tr><td rowspan="8">협약 준용 전문기관</td><td>한국에너지공단</td><td rowspan="8">협약 내용 준용</td></tr>
<tr><td>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td></tr>
<tr><td>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td></tr>
<tr><td>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td></tr>
<tr><td>중소벤처 기업부</td><td>기술보증기금</td></tr>
<tr><td rowspan="2">법인</td><td>대한상공회의소</td></tr>
<tr><td>재단법인나노융합2020사업단</td></tr>
</table>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술보증기금과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아님에도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과 협약 내용을 준용하는 기관을 위한 별도 협약 조건 고려 필요

27) 「상공회의소법」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자금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담은행과 펀드 출자, 대출 및 컨설팅 관련 협약을 체결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전담은행 선정 협약 조건으로 기술혁신전문펀드 출자에 관한 조항과 기술혁신전문대출, 기업종합 컨설팅 등을 전담은행에 요청
- 전담은행은 기술혁신전문펀드 5,000억원 출자[28], 기술혁신전문대출[29] 3조원 대출, 컨설팅 800회[30]를 수행

[전담은행 기술혁신전문펀드·출자, 대출 및 컨설팅 규모]

(단위: 억원, 회)

연도	펀드 출자	저리대출	컨설팅
중소기업은행	2,500	10,000	300
신한은행	1,400	10,000	300
하나은행	1,100	10,000	200
합계	5,000	30,000	800

자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술보증기금과 대한상공회의소, 재단법인나노융합2020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아니므로 펀드 투자, 대출, 컨설팅 등이 포함된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 협약 내역은 해당 예탁기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개별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담은행과의 협약 조정을 통해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② 그 외 기관이 다른 협약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8)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기술도입 포함)을 주목적 투자분야로 중소·중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출자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29)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TCB), 지적재산권(IP), 매출채권(국내, 수출),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최대 이자율 0.7%p 감면)

30) 중소기업은행은 기업 종합(금융, 세무 등) 컨설팅 300회 제공, 신한은행은 기업 비용절감 컨설팅 300회, 하나은행은 기업 종합(금융, 세무, 기업승계) 컨설팅 200회를 제공

-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은 기존 협약 조건(펀드, 대출 조건 등)을 유지하고, 그 외 기관은 펀드·대출 조건 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한 별도의 선택 조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담은행과 협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별도의 협약 조건 없이 한국은행기준금리에 우대 금리를 적용해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예탁자금 협약 조건]

예탁기관	연월	예탁자금 이자율 조건	협약 조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0.2%p	無
한국재정정보원	2020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 +0.15%p	無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4) 통합 Ezbaro 시스템 전문기관별 별도 협약 조건 필요

❑ 통합 Ezbaro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의 경우 전담은행과 별도의 협약 없이 한국연구재단이 통합 Ezbaro 전담은행과 협약한 조건으로 이자율 등 예탁 조건을 체결하고 있음

◦ 부처와 전문기관은 통합 Ezbaro 시스템을 활용하여 R&D 재정자금을 예탁하고 실시간으로 예탁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음

◦ 별도의 협약 없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협약 내용을 준용한 기관은 2025년 기준 중앙부처 17곳, 다부처 3곳, 전문기관[31] 34곳임

31) 전문기관은 통합 Ezbaro 시스템에 R&D 자금을 예탁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통합 Ezbaro 시스템 참여 부처 및 전문기관 및 협약 조건(2025)]

부처	전문기관	은행과 협약 내용	이자율 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나노종합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통합 Ezbaro 시스템 운영비 지원 (5년 156억원) 2024년 9월 이후 펀드 출자 협약 조건 추가 등	전담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제출하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업 MMDA 금리 (△0.65%~0.06%)
기상청 (3)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교육부 (2)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 (2)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경찰청 (1)	과학치안진흥센터		
국가유산청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무조정실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림청 (1)	한국임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우주항공청 (1)	우주항공청		
조달청 (1)	한국조달연구원		
행정안전부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부처 (3)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주: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복 참여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 전담은행 선정 협약 조건으로 기술혁신전문펀드 출자 관련 4,940억원 규모의 출자 협상을 체결함

◦ 한국연구재단과 전담은행 간 2019년 2월 체결한 협상 기한이 만료되어, 전담은행과 재협상 과정에서 과기혁신펀드 4,940억원 출자 조건이 협약 조건에 포함됨

◦ 해당 협약 내용에 따르면 매년 1,235억원 총 4,94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에 전담은행이 출자하는 조건임(매년 신한은행 625억원, 중소기업은행 450억원, 우리은행 160억원 출자)

[전담은행 과학기술혁신펀드 출자 규모]

(단위: 억원)

연도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합계
2024.9.1.~2025.12.31.	625	450	160	1,235
2026.1.1.~2026.12.31.	625	450	160	1,235
2027.1.1.~2027.12.31.	625	450	160	1,235
2028.1.1.~2028.12.31.	625	450	160	1,235
계	2,500	1,800	640	4,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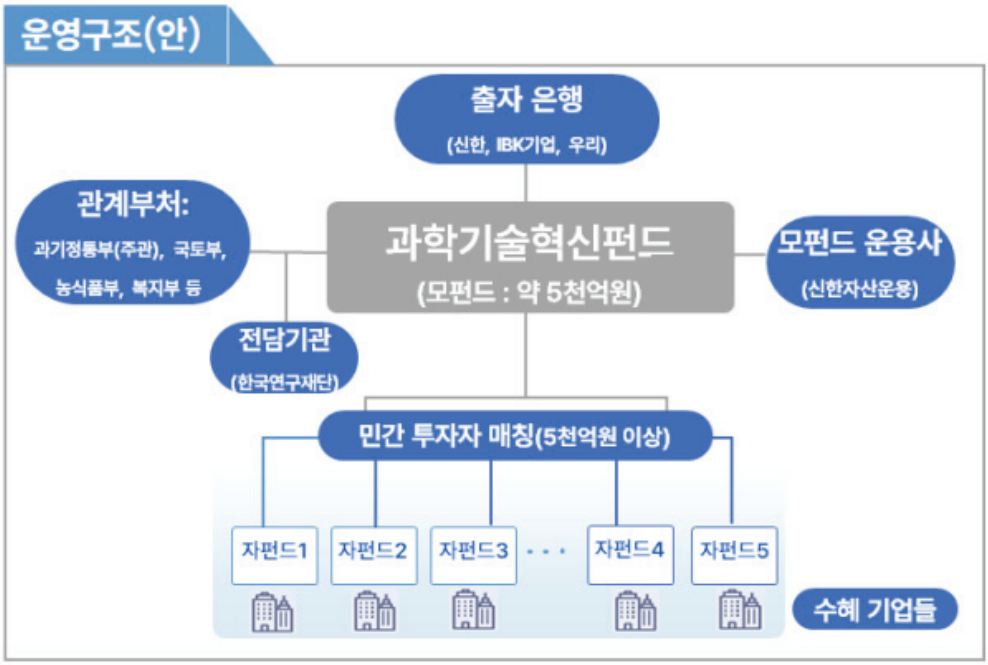
자료: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혁신펀드는 전담은행의 출자로 단일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매칭하여 복수의 자(子)펀드 결성·운용하는 모자 펀드방식으로 제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및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임

◦ 제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등의 분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기술사업화 기업은 연구소 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등임

[과학기술 혁신펀드 운용구조도]



자료: 한국연구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과학기술혁신펀드 투자 분야와 연계성이 낮은 통합 Ezbaro 참여 전문기관은 전담은행과 별도의 협약 조건(금리 등)을 설정함으로써, 이자수익이 타 부처 사업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해당 전문기관에서 출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과학기술혁신펀드가 투자하려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등의 분야나 연구소 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등의 투자 분야와 연계성이 낮음
- ○ 통합 Ezbaro 참여 전문기관은 모두 한국연구재단에서 협약한 과학기술혁신펀드 조건을 준용하므로 과학기술혁신펀드 조건을 제외한 별도의 협약 조건(추가 금리 우대 등) 설정을 고려해야 함

6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의 분석

가. 현 황

❑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상황과 관련하여, 자회사 설립 형태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한 총 92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1]를 2025년 5월에 발표하였음

- ○ 각 공공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3.23.)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수행하였으며, 그 중 일부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직고용 등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 정책을 이행하였는바, 해당 공공기관이 이번 평가 대상기관이 됨
- ○ 본 평가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에 근거를 두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목적은 공공기관(모회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한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려는 것임

❑ 평가 지표는 '자회사의 안정성 및 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이며, 모두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한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기반 마련에 관한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음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2025.5.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평가지표 현황]

구분	주요 평가항목(예시)
자회사의 안정성 및 지속성 기반 마련	◦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여부 ◦ 자회사 자본금 출자비율 및 적자사업 이관 여부 ◦ 모회사(공공기관)와 자회사 간의 단일통합계약 체결 ◦ 계약대금 지급기간의 지연 여부(자본유동성 보장)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여부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인사권 보장 : 계약상 인사권 침해우려 조항 여부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 계약 체결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의 기준 ◦ 계약금액의 단가 규모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 노동자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예산 등 반영 여부 ◦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확보 노력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2025.5.

❑ 해당 평가 결과를 등급별·기관 종류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황]

모기업(공공기관 등)의 종류	평가결과					계
	A	B	C	D	E	
공기업	14	8	3	0	1	26
준정부기관	10	4	2	0	1	17
기타공공기관	4	4	8	2	0	18
기타특수법인[1)]	0	1	1	17	1	20
기타 기관[2)]	1	2	4	1	3	11
계	29	19	18	20	6	92

주: 1) 기타 특수법인이란 공공기관은 아니나 평가대상이 되는 개별법상 특수법인(금융감독원 등) 또는 최초 평가 이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가리킴
2) 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자회사 등을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2025.5.

나. 주요 쟁점

❑ 각 공공기관의 운영평가 결과 C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전체 92개 기관 중 44개 기관(C등급 18개, D등급 20개, E등급 6개 등)임

○ 이 중 지자체 출자공기업 및 특수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제외하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단, 해당기관의 자회사가 마찬가지로 평가대상기관인 경우에는 포함. 이하 같음)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 19개 기관이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

-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3개이며, 주요 기관은 공기업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있으며, 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음
-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3개이며, 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 있음
-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3개이며, 주식회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IBK저축은행 등이 있음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C~E등급)]

평가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C (13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태권도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국제방송교류재단	-
D (3개)	-	-	중소기업은행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KOSPO영남파워(주)
E (3개)	주식회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	㈜IBK저축은행
계	4개	3개	10개	2개

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단, 해당기관의 자회사가 마찬가지로 평가대상기관인 경우에는 포함. 지방자치단체 출자공기업 및 특수기관(금융감독원 등)은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일부 기관은 최근 3년 간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D등급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전체 평가 대상기관 92개 중 22개 기관의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D등급 이하를 기록하였음(기타 특수법인 및 지방공기업 등 포함)

- 기관 종류별로는 공기업 1개사, 준정부기관 1개사, 기타공공기관 2개사, 기타 특수법인 15개사, 기타 기관 3개사 등임

[2022~2024년 평가결과가 3년 연속 D등급 이하인 기관 현황]

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타 특수법인	기타 기관	계
기관수	1	1	2	15	3	22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일부 기관은 최근 3년 간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E등급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평가 결과 공공기관 및 자회사 중 E등급을 기록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에스알, ㈜IBK저축은행 등 3개 기관임
- 그 중 국가철도공단, ㈜IBK저축은행 등 2개 기관은 3년 연속 평가결과가 E등급이었음

[2024년 평가결과가 E등급인 기관 현황]

기관명	구분	평가 결과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국가철도공단	준정부기관	E	E	E
주식회사 에스알	공기업	E	D	D
㈜IBK저축은행	공공기관 자회사	E	E	E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대체로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또는 전문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 공동협의회 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중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대체로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였더라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경우, 근무시간 조정 및 변경 등 자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계약조항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평가지표 중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자회사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별도의 근로자 교육훈련 등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한편, 과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회사 운영 평가결과가 저조한 특징이 있음

◦ 기타 특수법인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 18개 기관 중 17개 기관이 2024년도 평가결과가 D등급이었으며, 나머지 1개 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등급이었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자회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의견임

◦ 다만 이들 연구기관의 경우, 타 기관과 달리 공동 자회사((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재)과학기술보안관리단)를 설립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는바,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출자금액이 작고, 일부 모기관과 자회사 간에 권리·의무를 명시한 계약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024년 기타 특수법인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

평가결과	기관명
A~C	없음
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 기타 특수법인이란 공공기관은 아니나 평가대상이 되는 개별법상 특수법인(금융감독원 등) 또는 최초 평가 이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가리킴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2025.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예로 들면,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관계 구축 노력이 미흡하고, 노동자 처우개선 및 전문적 운영 지원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평가등급: B+)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부 방침에 따라 100% 자본금을 출자했으며, 적자 사업 이관 등을 하지 않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반면,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평가등급: D0)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점,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평가등급: D+)에 대해서는 일부 직종의 계약단가가 시중노임단가 미달인 점,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평가등급: D0)에 대해서는 노동자 교육훈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확보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

세부지표	평가등급	세부지표	평가등급
자회사의 안정성 및 지속성 기반 마련	B+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D0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D+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D0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2025.5.

❑ 한편, 평가등급이 E등급인 기관 중 일부는, 실제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에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특수성이 있는바, 일부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차년도 이후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E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및 ㈜IBK저축은행은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및 IBK서비스와 별다른 지분관계가 없고,[2] 다만 용역계약을 통해 업무상 위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 ○ 이에 따라 일부 지표(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여부, 평가관련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이 있는바, 차후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 근무여건 마련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바, 지속적으로 평가결과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기관은 향후 자회사 운영 지원에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코레일테크 및 IBK서비스는 국가철도공단 및 ㈜IBK저축은행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해 신설된 기관이 맞으나, 지분관계상 국가철도공단 및 ㈜IBK저축은행과는 출자관계가 없고, 국가철도공단 및 ㈜IBK저축은행의 모기업인 한국철도공사와 중소기업은행(IBK)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기관임.
따라서 코레일테크 및 IBK서비스는 국가철도공단 및 ㈜IBK저축은행의 기능상 근로자 정규직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분출자 관계에 있어서는 자회사에 위치에 있지 않음

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7-1.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가. 현 황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음

◦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조정

◦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됨

[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지배구조 및 리더십,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기관평가의 대상이 되는 87개 기관(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 중 감사평가는 58개 기관 대상(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24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2024)]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 (32)	SOC(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12)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 · 서비스 (12)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55)	기금관리형 (10)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5)	SOC 안전 (1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진흥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복리증진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탁월(S) 없음, 우수(A) 15개(17.2%), 양호(B) 28개(32.2%), 보통(C) 31개(35.6%), 미흡(D) 9개(10.3%), 아주미흡(E) 4개(4.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0~2024)]

(단위: 개)

구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공기업	2020	36	-	6	16	10	3	1
	2021	36	1	8	9	13	4	1
	2022	36	-	5	13	12	5	1
	2023	32	-	6	10	11	4	1
	2024	32	-	5	11	9	6	1
준정부기관	2020	54	-	11	18	18	6	1
	2021	57	-	10	22	17	6	2
	2022	57	-	7	23	21	4	2
	2023	55	-	9	20	18	7	1
	2024	55	-	10	17	22	3	3
공기업·준정부기관	2020	90 (100.0)	-	17 (18.9)	34 (37.8)	28 (31.1)	9 (10.0)	2 (2.2)
	2021	93 (100.0)	1 (1.1)	18 (19.4)	31 (33.3)	31 (33.3)	10 (10.8)	3 (3.2)
	2022	93 (100.0)	-	12 (12.9)	36 (38.7)	33 (35.5)	9 (9.7)	3 (3.2)
	2023	87 (100.0)	-	15 (17.2)	30 (34.5)	29 (33.3)	11 (12.6)	2 (2.3)
	2024	87 (100.0)	-	15 (17.2)	28 (32.2)	31 (35.6)	9 (10.3)	4 (4.6)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32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은 5개, 양호(B) 등급은 11개, 보통(C) 등급은 9개, 미흡(D) 등급은 6개, 아주미흡(E) 등급은 1개 기관임

[2024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기업]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기업(32)	탁월(S)	-
	우수(A)(5)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양호(B)(11)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보통(C)(9)	강원랜드(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미흡(D)(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아주미흡(E)(1)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55개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은 10개, 양호(B) 등급은 17개, 보통(C) 등급은 22개, 미흡(D) 기관은 7개, 아주미흡(E) 등급은 3개 기관

[2024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단위: 개)

구분		기관명
준정부기관(55)	탁월(S)	-
	우수(A)(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양호(B)(17)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보통(C)(22)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흡(D)(3)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아주미흡(E)(3)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나. 주요 쟁점

❑ 2023년 및 2024년도 경영평가 대상인 총 87개 기관 중 28개 기관(32.2%)이 전년 대비 등급 하락을 보였고, 27개 기관(31.0%)이 전년 대비 등급 상승을 기록했으며, 32개 기관(36.8%)이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음

○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한 기관(28개)을 하락 폭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3등급 하락: 한국환경산업기술원(B → E) 등 1개 기관
- 2등급 하락: 인천국제공항공사(A → C), 한국광해광업공단(C → E), (재)우체국금융개발원(C → E), 한국관광공사(C → E), 한국에너지공단(A → C), 국립공원공단(A → C) 등 6개 기관
- 1등급 하락: 21개 기관

[2023년 대비 2024년 등급(종합) 하락 기관]

등급 하락	유형	기관명	등급 변화
3등급 하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 → E**
2등급 하락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A → C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	**C → E**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C → E**
		한국관광공사	**C → E**
		한국에너지공단	A → C
		국립공원공단	A → C
1등급 하락	시장형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A → B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C → D
		대한석탄공사	C → D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 D
		주식회사 에스알	C → D
		한국부동산원	B → C
		한국수자원공사	B → C
		한전KPS	A → B
		해양환경공단	B → C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A → B
		신용보증기금	B → C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C → D
		한국연구재단	A → B
		한국인터넷진흥원	B → C
		한국국제협력단	C → D
		축산물품질평가원	B → C
		한국석유관리원	B → C
		국립생태원	B → C
		한국환경공단	A → B
		한국산업인력공단	C → D
		한국소비자원	B → C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년 대비 2024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7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가장 낮은 E 등급으로 하락하여 이들 기관 중심으로 등급 하락원인을 분석함[2)3)]

◦ E 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은 공통적으로 일반관리비 관리지표의 급격한 하락과 리더십 및 전략기획 지표의 가중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락하거나 정체한 것이 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상대평가 특성으로 인해 절대 득점률은 소폭 하락하더라도 동일 유형 기관군 내에서 상대적 순위가 크게 밀리면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보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B 등급에서 2024년도 E 등급으로 3등급 하락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등급 하락 원인은 경영관리 부문과 주요사업 부문의 점수 하락에 기반

◦ 경영관리 부문은 크게 ①지배구조 및 리더십, ② 안전 및 책임경영, ③ 재무성과관리, ④ 조직 운영 및 관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지배구조 및 리더십과 재무성과관리의 성과 하락이 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리더십 및 전략기획'의 경우, 2023년도 리더십 C 등급,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B등급에서 2024년 2개의 지표가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C 등급을 획득하며 점수가 하락하였고, 윤리경영 지표의 경우 C 등급에서 D+ 등급으로 하락함
- 재무성과관리 계량지표 중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는 매출액 감소, 일반관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득점률이 2023년 95.8%에서 2024년 32.6%로 63.2%p 하락하여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함

---

2) 가중치가 상이한 지표 간 성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등급과 점수를 통일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급 및 점수를 득점률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함

3) 동 보고서에서 득점률 계산 방식은 계량지표는 (실제 획득점수÷만점)×100으로 계산하고, 비계량지표는 경영평가편람의 비계량지표 평가방법에 제시된 등급별 점수(A+=100점, A0=90점, B+=80점, B0=70점, C=60점, D+=50점, D0=40점, E+=30점, E0=20점)를 득점률로 사용함

◦ 주요사업 부문은 ① 환경 R&D 지원, ② 환경산업 혁신성장 지원, ③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확산, ④ 환경피해로부터 안심 사회 구현,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으로 구성되는데, 등급 하락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업은 환경 R&D 지원과 환경피해안심사회 구현 사업으로 분석됨

- 4개 주요사업 모두 계량지표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만점을 획득했으나, 성과관리 적정성 평가에서 B 등급에서 C 등급으로, 환경피해 안심사회구현 사업은 B+ 등급에서 B 등급으로 각각 한 등급씩 하락함에 따라 전체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관리 부문 득점률 변화]

구분		2023년 : B등급	2024년 : E등급
득점률	총계	81.4%	78.1%
경영관리	소계	73.9%	68.6%
	계량	91.9%	75.9%
	비계량	57.4%	61.9%
주요사업	소계	87.5%	85.8%
	계량	100.0%	100.0%
	비계량	71.3%	66.3%

주: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는 확정 전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환경사업기술원

(2)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C 등급에서 2024년도 E 등급으로 2등급 하락한 우체국금융개발원의 등급 하락 주요원인은 주요사업 비계량 지표의 점수 하락임

◦ 경영관리 부문은 크게 ①지배구조 및 리더십, ② 안전 및 책임경영, ③조직운영 및 관리, ④재무성과관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지배구조 및 리더십과

재무성과관리의 성과 하락이 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 중 리더십 및 전략기획은 C등급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받았으나, 지표의 가중치 상승에 따라 득점률이 하락하였고, 윤리경영 계량지표가 47.2%에서 38.4%로 하락함
- “안전 및 책임경영” 지표 중 일자리 및 균등한기회(C→D+),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C→D+) 비계량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함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주요사업 부문은 ① 우체국금융 미래성장 지원, ② 우체국보험심사, ③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으로 구성되는데, 등급 하락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친 사업은 우체국금융 미래성장 지원, 우체국보험심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 등급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우체국금융 미래성장 지원사업은 계량지표 점수는 상승(96.2% → 98.5%) 하였으나, 성과관리 적정성 지표에서 B0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함
- 우체국보험심사 사업은 계량지표 점수가 소폭 하락(100.0% → 98.4%) 하였고, 성과관리 적정성 지표에서 B0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관리 부문 득점률 변화]

구분		2023년 : C등급	2024년 : E등급
득점률	총계	78.1%	77.4%
경영 관리	소계	70.5%	73.1%
	계량	81.4%	86.6%
	비계량	60.6%	61.1%
주요 사업	소계	85.5%	82.7%
	계량	97.6%	98.5%
	비계량	70.0%	62.3%

주: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는 확정 전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재)우체국금융개발원

(3) 한국광해광업공단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C등급에서 2024년도 E등급으로 2등급 하락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등급 하락 원인은 경영관리 부문의 점수 하락에 기반함

◦ 경영관리 부문은 크게 ①지배구조 및 리더십, ② 안전 및 책임경영, ③ 재무성과관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지배구조 및 리더십과 재무성과관리의 성과 하락이 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배구조 및 리더십에서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 지표가 가중치 2.5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D+ 등급 에서 D0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소통 비계량도 C 등급에서 D+ 등급으로 하락함
- 재무성과관리에서는 일반관리비 관리 득점률이 91%에서 46%로 45%p 급락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사업 부문은 ① 자원안보 및 자급기반 강화사업, ② 광해관리 사업, ③ 광산 및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으로 구성되는데, 비계량 부문에서는 소폭 개선이 확인되나, 계량 부문의 저조한 득점이 기관 등급 하락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자원안보 및 자급기반 강화사업의 경우 2023년 대비 2024년 계량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하락하고,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D+ 등급으로 유지됨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관리 부문 득점률 변화]

구분		2023년 : C등급	2024년 : E등급
득점률	총계	66.8%	63.5%
경영관리	소계	61.5%	49.2%
	계량	67.7%	50.5%
	비계량	54.4%	47.7%
주요사업	소계	69.1%	69.7%
	계량	83.2%	81.1%
	비계량	52.9%	56.7%

주: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는 확정 전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경영관리 부문 재무성과관리 계량 및 주요사업 부문 계량 득점 하락으로 2023년 C 등급에서 2024년 E 등급으로 2등급 하락

○ 경영관리 부문은 크게 ① 지배구조 및 리더십, ②안전 및 책임경영, ③ 재무성과관리, ④조직 운영 및 관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재무성과관리 계량 득점 저조가 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무성과관리 계량지표 중 일반관리비 관리 득점률이 2023년 62.3%에서 2024년 44.8%로 17.5%p 하락함[4)]
- 재무성과관리 내에서도 일반관리비 관리는 하락했으나 사업수행효율성은 73.0%에서 87.5%로 14.5%p 개선되는 등 지표별 편차가 존재함

4) 재무성과관리 계량 득점을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가 필요하나, 매출액의 약 95%가 정부지원예산(관광진흥개발기금)인 공사의 경우 자체적인 노력으로 매출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

[한국관광공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관리 부문 득점률 변화]

세부지표			유형	가중치	2023년 득점률	2024년 득점률
3. 재무 성과 관리	재무 예산 성과	사업비집행률	계량	4점	95.2%	97.8%
		일반관리비 관리	**계량**	**3점**	**62.3%**	**44.8%**
	효율성 관리	사업수행효율성	계량	4점	73.0%	87.5%

주: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는 확정 전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의 주요사업 부문은 ①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② 국내관광 활성화, ③ 관광서비스 기반 강화,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으로 구성되는데, 주요사업 비계량은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주요사업 일부 계량지표의 득점률이 저조했던 것이 전체 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주요사업 비계량은 '관광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 등급이 2023년 B 등급에서 2024년 B+ 등급으로 상승하였으나, 계량지표 중 '관광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표가 AI 도입 등 관광산업 구조 변화로 신규 고용 증가율이 높지 않아 득점률 2023년 100.0%에서 62.3%로 37.7%p 하락함

[한국관광공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사업 부문 득점률 변화]

세부지표		유형	가중치[1)]	2023년 득점률	2024년 득점률
비계량	외래객 유치 활성화	비계량	8	B	B
	국내관광 활성화	비계량	6	B	B
	관광서비스 기반 강화	**비계량**	**5**	**B**	**B+**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비계량	5	B	B
계량	효율적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성과	계량	7→8	92.8%	100.0%
	MICE 참가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계량	2	97.0%	85.6%
	관광거점도시 외래객 유치 성과	계량	2	100.0%	100.0%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	계량	7	95.1%	100.0%
	관광복지 확대 성과	계량	2→4	100.0%	98.2%
	관광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계량**	**5**	**100.0%**	**62.3%**
	디지털 관광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 성과	계량	3	100.0%	99.9%

주: 1) 세부지표의 가중치 변경이 있음
1.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는 확정 전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7-2. 경영실적평가 결과 후속조치의 변화

가. 현 황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인사상 조치와 예산상 조치 및 개선계획 제출, 성과급 지급이 있음

○ 인사상 조치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와 경고 조치가 있음

- 해임건의 :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5] 중 재임기간 요건[6]을 충족하는 기관장 1명(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였으나 2025년 7월 23일 기관장 자진 사임
- 경영실적 미흡으로 인한 경고조치 : 미흡(D) 등급 9개 기관 중 2024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기관장 4명에 대해 경고조치

[경영실적 미흡에 따른 후속조치]

후속 조치사항	경영실적 미흡		후속조치 대상기관
	등급	경영실적 미흡 기관	
기관장 해임건의 (1)	아주미흡(E)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년 연속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장 경고 (4)	미흡(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고조치 : 사망사고가 발생(승인기준)한 12개 기관[7]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8]

5) 한국광해광업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E 등급 + '24년말까지 6개월 이상 재임하거나, DD등급 + '24년말까지 1년 이상 재임인 경우 해당

7) 2024년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국전력공사(A), 한국도로공사(B), 한국중부발전,(B), 한국토지주택공사(B), 한전KPS(B), 국가철도공단(B), 한국산업단지공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후속 조치사항	추가 조치 기관
기관장 경고조치 (10)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안전관련개선계획 제출 (12)	위 10개 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랜드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 등에 대한 성과급 삭감 등 추가조치가 있음

- 재무위험기관(14개)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전년 대비 손실폭 증가 기관(한국철도공사)의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25% 삭감
- 2024년 당기순손실 발생한 공기업(한국공항공사)의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25% 자율반납 권고

단(B), ㈜한국강원랜드(C), 한국수자원공사(C), 한국철도공사(C), 신용보증기금(C), 한국농어촌공사(C)

8)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 중 '안전 및 재난관리'의 하위지표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이 반영되고 있으나 0.5점에 불과해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실질적 동기로 작용하기 어렵고, 중대재해 발생 기관들의 경영평가 등급을 보면 점수가 전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 또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역시 실제 중대재해 발생과 등급간 연동성이 부족하여 실효성 문제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20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2023년과 비교하여 성과급 관련 조치와 예산상 조치에서 변화가 나타남[9)]

◦ 종합등급 미흡 이하(D·E) 기관에 대한 예산상 조치로 경상경비를 삭감함

- (2023년) D·E등급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 0.5~1% 삭감을 적용
- (2024년) D·E등급 기관 삭감 검토로 변화하여 획일적 삭감에서 탄력적 접근으로 전환

◦ 재무위험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 임원 성과급 삭감률을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함

- (2023년) 재무위험기관 중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100% 삭감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과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
- (2024년) 재무위험기관 중 당기순손실이 '23~'24년 연속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 폭 증가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25% 삭감,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25% 자율반납 권고로 조정

9)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크게 인사상 조치, 예산상 조치 및 개선계획 제출, 성과급 지급으로 구분

8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 분석: 경영실적평가를 중심으로

가. 현 황

❑ 기타공공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운영 체계 개편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73.4%(2024년 기준)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주무부처별 자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평가 기준과 공개 범위에서 부처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1)]

◦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이 중 기타공공기관은 2024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73.4%에 해당하는 243개 기관으로, 공공정책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2)]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었고, 기타공공기관의 비중이 급증함
- 이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직접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 주무부처 중심의 자율적 관리체계하에 운영됨

- 특히 경영실적평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자체 지침 또는 훈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기타공공기관의 가장 최근 경영실적평가는 2023년도 평가로 분석의 대상을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 기타공공기관으로 함

2) 정원 기준은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수입 기준은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자산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유형 구분	분류 기준
공기업	직원 300명 이상, 수입 200억 원 이상, 자산 30억 원 이상 중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 50% 이상
준정부기관	위 기준 충족 +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 50% 미만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주: 2023년 기준, 이후 분류 기준 동일
자료: 공공기관운영법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은 2023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347개) 중 260개 기관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음

- 인력 측면에서도 전체 정규직 임직원 정원 42만 704명 중 기타공공기관 소속 인원이 15만 6,434명으로 37.2%에 해당함

[공공기관 유형별 인력 및 예산 현황(2023년 기준)]

(단위: 억원, 명, %)

유형		기관수	수입·지출	정부지원수입	인원
공기업	시장형	13	2,950,599	25,280	75,027
	준시장형	19	829,877	53,736	73,51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1	2,119,988	444,360	30,890
	위탁집행형	44	1,677,524	398,426	84,837
기타공공기관(a)		260	1,604,830	148,520	156,434
전체(b)		347	9,182,817	1,070,323	420,704
기타공공기관 비중(a/b)		74.9	17.5	13.9	37.2

주: 1. 수입과 지출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함
2.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3. 정부지원수입은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함
4. 인원은 정규직 임직원 정원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공공기관」 바탕으로 재작성

◦ 부처별로 보면, 33개 부처가 기타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37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28개, 국무조정실 25개, 교육부 21개, 보건복지부 20개 순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회 소속 기관 포함)과 이와 관련된 진흥·지원기관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타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음

[소관 기타공공기관이 많은 부처 현황]

부처	기관수	주요 특징
과기부	3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 진흥·지원기관 포함
문체부	28개	문화예술·체육·콘텐츠 분야의 중간지원기관 중심
국무조정실	25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5개 연구기관
교육부	21개	국립대학병원, 교육 관련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20개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 관련 지원기관

❑ 기타공공기관의 이원적 관리체계

◦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기관의 주요 업무와 재정 운영은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관리하며, 전체적인 제도 설계와 정책 방향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경영실적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협의, 임원 인사 등의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 또는 기관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되며, 주무부처가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로 기능함

◦ 이는 제도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주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됨:

- ①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제외
- ②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 법정 절차 미적용
- ③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등의 제도 적용 대상

에서 제외

- ④ 경영공시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다만 2023년부터 경영평가 결과 공시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체계 비교]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관리주체	기재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각 주무부처
경영실적평가	기재부 주관(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주무부처 자체 지침 또는 훈령
임원 임면절차	임원추천위 구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 법정절차	설립근거법 또는 기관 정관에 따라 자율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원칙적 비대상
출자·출연 협의	기재부 사전협의	일부만 적용되며 대부분 비대상
경영공시 의무	의무	2023년부터 경영평가 결과 공시 확대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8.18. 발표) 및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94호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특징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수단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주관 평가와 구분되어 주무부처 주관 하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체계임

○ 이 제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는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의 지침, 훈령, 또는 평가편람에 따라 자체적 평가모형과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됨

- 운영 주체 및 방식: 기획재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와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가 평가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결과의 활용 및 환류도 부처 단위에서 이뤄짐. 이에 따라 평가지표 구성, 가중치 설정, 등급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역시 부처별로 차이가 있음

- 평가 대상 및 규모: 2023년 기준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한 부처는 총 33개이며, 문화체육관광부(41개), 보건복지부(24개), 국무조정실(24개), 교육부(21개) 등은 비교적 평가 대상 기관이 많은 부처에 해당함. 18개의 부처가 5개 미만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중 9개 부처는 단일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지표 체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범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경영관리 범주에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책임, 재무성과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가 포함되며, 주요사업 범주에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실적평가 체계 비교]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법적 근거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주무부처 훈령·지침 등 자체 수립 기준
주관 부처	기획재정부	해당 주무부처
평가지표 및 방식	통일된 모형, 동일 평가등급 체계	부처별 편차 존재
평가결과 공시	의무 공시	2023년부터 공시 의무화
후속조치	성과급 등 제도화	부처별로 상이

나. 주요 쟁점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근거 규정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전체 공공기관의 75%를 차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부처별로 상이함

- 2018년 3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 혁신

에 관한 지침」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으로 통폐합되면서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음

◦ 소관 기타공공기관이 있는 33개 부처 중 26개 부처(78.8%)는 훈령 또는 지침 등 명문화된 근거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법무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유산청,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 6개 부처는 여전히 명시적 근거 없이 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법적 근거 유무]

부처	법적근거 (법률, 훈령, 지침 등)	
과기부(37)	○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7343호) 및 동법시행령
문체부(28)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59호)
국조실(25)	○	「정부출연기관법」(법률 제18189호)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21)	○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503호)
복지부(24)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40호)
국토부(15)	○	「국토교통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안)
산업부(13)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14호)
해수부(15)	○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83호)
중기부(8)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32호)
농식품부(8)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93호)
환경부(7)	○	「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84호)
고용부(7)	○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24호)
특허청(6)	○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특허청훈령 제1018호)
금융위(3)	○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훈령 제82호)
법무부(3)	×	-

부처	법적근거 (법률, 훈령, 지침 등)	
국방부(3)	○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국방부훈령 제1980호)
원안위(3)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목적형)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경우 근거 규정 없음
식약처(4)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136호)
기재부(3)	○	「한국투자공사법」제9조,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45호)
외교부(2)	○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외교부훈령 제147호)
통일부(2)	×	-
행안부(2)	○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27호)
여가부(5)	○	「여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훈령 제116호)
방사청(2)	○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635호)
공정위(1)	×	-
국가보훈처(2)	×	-
관세청(1)	○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관세청훈령 제2301호)
국가유산청(1)	×	-
산림청(3)	○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산림청훈령 제1656호)
기상청(3)	○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기상청 훈령 제928호)
방통위(1)	×	-
소방청(1)	○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323호)
농진청(1)	○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1369호)

주: 1. 법적 근거는 2025. 5.31.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함
2. ( ) 안은 부처별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수로 2023년 지정 기준임

자료: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관련 규정

❑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역할 분리를 통한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는 주무부처 중심의 자율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 체계는 실질적 평가 수행은 평가단이, 절차적 타당성 검토는 평가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추진체계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명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치 근거, 구성인원, 심의·의결 기능 등
경영평가단 설치	실질적 평가수행 주체, 외부 전문가 포함 등 구성
경영실적평가	편람 작성, 성과협약, 평가방식, 위탁 여부 등
경영실적평가의 보고 및 공표	결과 제출 기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홈페이지 공개 여부 등

자료: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심의·의결)와 경영평가단(실질 평가)의 역할을 분리한 이원화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평가등급의 확정, 필요시 기관장 해임 건의, 평가편람의 작성 및 변경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주요 장치로 기능함

[경영평가위원회의 역할]

역할	내용
평가계획 심의 및 편람 작성	경영실적평가 편람 작성 및 변경, 세부지표 등 심의·의결
평가 결과 확정	경영평가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
개선계획(환류)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심의·의결
장관이 정하는 사항	부처 장관이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

자료: 경영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근거 규정이 있는 24개 부처의 경영실적평가 규정 검토 결과[3)]

- 13개 부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7개 부처는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관세청과 같이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단의 실질적 역할까지 수행하는 사례도 존재함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현황]

구분	부처
경영평가위원회 설치(13)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교육부, 기상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경영평가위원회 미설치(7)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평가단 역할 함께 수행(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관세청

자료: 각 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3) 단,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근거 규정이 있는 부처 중 연구기관 성과평가가 대부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무조정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 미설치 부처에 대한 설치 유도와 함께, 위원회와 평가단의 역할이 혼재된 부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리를 통한 이원화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부처별 평가 결과 공개 범위가 상이하여 외부 모니터링 기능이 제약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는 부처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한 부처의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① 종합등급·총점·세부점수까지 모두 공시하는 부처, ② 종합등급만 공시하는 부처, ③ 총점수만 공시하는 부처, ④ 총평만 제시하고 종합등급이나 점수를 제시하지 않는 부처

- 유형 1: 종합등급+총점수를 공시하는 부처(17개). 이들 부처는 기관별 종합등급과 총점을 명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유형 2: 종합등급만 공시하는 부처(9개). 이 경우 상대적 성과 수준은 파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점수나 세부 평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 유형 3: 총점수만 공시하는 부처(1개). 이 경우 총점수를 공시하고 종합등급은 명시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유형 4: 종합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부처(5개). 이 경우 총평 위주의 서술만 존재하며, 기관별 종합등급이나 총점, 세부점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종합결과 공시 범위]

공개 범주	부처
유형1: 종합등급+총점수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1],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특허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유형2: 종합등급만 공시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한국투자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소방청
유형3: 총점수만 공시	국가보훈처(88관광개발(주))
유형4: 종합결과 없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2],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산림청

주: 1) 방위사업청 소관 기타공공기관(2)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운영평가 지침에 따라 3년 주기로 평가함
2) 수출입은행은 평가결과보고서에는 등급이 공시되지 않으나,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함
1.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구체적 사례 분석:

- 금융위원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계량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 "비계량지표 부문 또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기술로 대체되어 있으며, 개별 항목별로 "만점 획득" 등의 표현은 있으나 정량적 수치의 비교는 어려움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관 기관의 평가보고서에서 '개선할 점'과 '잘된 점'을 정성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평가 총점이나 등급은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와 감시 기능을 제한하게 됨[4]

○ 2023년부터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ALIO라 함)에 공시되도록 개선되었으며, 「2025년 공공기관 통합

4) 2024년 경영평가보고서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정성적 의견 외 지표별 평가 총점 및 등급을 제시하는 형태로 개선하였다는 설명임

공시매뉴얼」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평가등급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매뉴얼에 따르면 경영평가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ALIO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5)]
- 그러나 2025년 8월말 기준 243개의 기타공공기관 중 78개 기관(32.1%)의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ALIO에 공시되지 않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 특히 2024년도 평가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한 기관들의 경우 이전에 공시되었던 평가 결과 마저 삭제되어 있어 공시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ALIO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공시 형식을 변경(기존 게시판형, 개정 후 보고서형)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 발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대규모 공시누락이 기술적 오류에 기인한다는 것은 공시시스템 관리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기존 공시자료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접근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이는 공시제도 도입 취지인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공시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부족한 상황임[6)]

- ◦ 최근 3년간(2021~2023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간등급(B, C)에 70-80%의 기관이 집중되고 극단등급(S, D, E)은 4-6%에 불과하여 등급 분포의 집중 현상에 따라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제한적임

---

5) 2023년부터(2023년에 실시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결과부터) 경영평가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시(등록)하여야 함

6) 기타공공기관의 평가 결과 분석을 위해 최근 3년간 부처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취합하였으며, 국가출연연구기관이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23개 부처의 소관 기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함. 분석대상은 모두 6등급 평가체계(S, A, B, C, D, E)를 사용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간등급은 B·C등급, 극단등급은 S·D·E등급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기능은 경영성과의 상대적 우열을 판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데 있음
- 그러나 분석 결과, 기타공공기관의 약 70~80%가 중간등급에 분포하고 있어, 각 부처의 경영실적평가가 대부분의 기관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양상을 보임
- 2021년에는 전체 118개 기관 중 92개 기관(77.8%)이 중간등급(B+C)에 집중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123개 기관 중 86개 기관(69.9%)이, 2023년에는 147개 기관 중 205개 기관(71.4%)이 중간등급에 분포함
- 반면 극단등급(S, D, E)은 4~6%에 불과하여 희소분포를 나타냄

○ 등급 분포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7]을 통해서도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평균 4.023점(표준편차 0.795), 2022년 평균 3.951점(표준편차 0.844), 2023년 평균 3.960점(표준편차 0.894)으로 나타남. 평균값은 3개 연도 모두 약 3.95~4.02 수준으로 6점 척도에서 '양호(B, 4점)' 수준에 근접하여 중간등급 집중 현상을 보여줌
- 3개 연도 모두 표준편차가 1 미만(0.795~0.894)으로서, 6점 척도 기준의 이론적 표준편차 범위(1.41~1.73)[8]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등급분포가 중간등급(B, C)에 집중된 구조로, 실질적인 차등화·변별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시사함

---

7) 경영실적평가에서 등급 분포의 표준편차는 기관들이 얼마나 다양한 평가등급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이를 통해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한 등급에 몰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표준편차가 클수록 등급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함

8) Iacobucci & Churchill(2022)이 제시한 6점 척도 기준의 이론적 표준편차 범위(1.41~1.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2021~2024년도)]

(단위: 개, %, 점)

연도	기관 수	중간등급 (B, C) 비중	극단등급 (S, D, E) 비중	평균	표준편차
2021	118	77.8	4.2	4.023	0.795
2022	123	69.9	5.7	3.951	0.844
2023	147	71.4	6.1	3.960	0.894

자료: 부처별·기관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동 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중간등급(B, C)의 집중도는 약 67~72%로 다수 기관이 중간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낮음. 극단등급(S, D, E)은 전체의 약 13~15%로 기타공공기관(4~6%)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단위: 개, %, 점)

연도	기관 수	중간등급 (B, C) 비중	극단등급 (S, D, E) 비중	평균	표준편차
2021	130	67.7	14.6	3.585	1.006
2022	130	71.5	13.9	3.492	0.971
2023	87	67.8	14.9	3.517	0.993

자료: 2021~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변별력 부족 현상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함

- 첫째, 주무부처가 소관 기관에 대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구조상 관대한 평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 둘째, 기관별 특성과 목적이 상이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 기준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조치의 강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여 엄격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등급 분포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줌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된 기관의 56%가 평가 등급 상승을 보임

◦ 2023년 공공기관 운영 체계 개편에 따라 유형 변경된 25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등급 상승 14개 기관(56%), 등급 유지 9개 기관(36%), 등급 하락 2개 기관(8%)으로 나타남

- 2등급 이상 상승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
- 3등급 이상 상승 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2개 기관으로 총 6개 기관이 2등급 이상 상향한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중에는 사회적 책무 위반에 따른 등급 조정이 이루어져 원등급을 고려할 경우 약 64%의 기타공공기관이 유형변경 이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항만공사는 1등급 하향조치 전 A등급으로 202년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B) 보다 1등급 상향하였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역시 1등급 하향조치 전 B등급으로 2022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D)보다 2등급 상향함

[기타공공기관 유형 변경 전후 결과 변화]

(단위: 개, %)

부처	상승	유지	하락	유형 변경 공공기관
교육부	1	1	-	2
기상청	1	-	-	1
농식품부	-	1	1	2
문체부	3	-	-	3
방통위	1	-	-	1
보훈처	1	-	-	1
산업부	1	1	-	2
소방청	1	-	-	1
식약처	1	-	-	1
여가부	1	1	1	3
특허청	1	-	-	1
해수부	2	5	-	7
합계	14(56.0)	9(36.0)	2(8.0)	25(100.0)

주: 1.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 종합등급(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복지부, 중기부, 산림청 등 일부 부처 소관 기관은 제외함
2. ( )안은 비중을 의미함

자료: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보고서 및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보도자료(2023.6.16. 발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유형 변경에 따른 평가등급 상승 현상이 실제 성과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평가체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기관 유형별 평가기준의 형평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환류체계에서 훈령과 평가편람 간 연계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함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환류체계는 훈령과 평가편람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구성되며, 이 두 기준 간에는 활용 조치 범위 및 적용 강도에서 차이가 존재함

- 훈령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요구, 예산상 제재 등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편람에 명시된 조치는 대부분 성과급 차등 지급,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실무적 지침 수준에 머무름

- 또한 평가편람은 부처 내부자료로서 비공개 문서인 반면, 훈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행정 규범 문서임

◦ 훈령과 평가편람 간 연계성이 부족함

- 훈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환류 조치가 편람에서 구체화되지 않거나, 편람의 실무적 조치가 훈령의 제도적 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예를 들어, 훈령에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편람에서는 해당 조치의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환류 조치 시 절차적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음

◦ 편람이 훈령에서 정한 핵심적인 환류 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상하 연계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훈령에서 정한 기본적 환류 조치가 편람에서 구체적 절차와 기준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연계 의무화, 편람 작성 시 훈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명확화, 이원화된 평가체계 구축, 평가결과 공개범위 표준화, 평가의 변별력 제고, 환류체계의 연계 메커니즘 강화 등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타공공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운영 체계 개편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73.4%(2024년 기준)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주무부처별 자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평가의 법적 근거, 추진체계, 결과 공개 범위 등에서 부처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33개 부처 중 6개 부처는 여전히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도 부처별로 상이하여 외부 모니터링 기능이 제약되는 상황임

◦ 평가 결과 분석에서는 중간등급 집중 현상(70~80%)과 극단등급의 희소성(4~6%)으로 인한 변별력 부족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유형 변경 기관의 56%가 등급 상승을 보여 평가체계 간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가. 현 황

❑ 2025년 2분기 기준, 2024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승인기준)는 31명, 최근 5년간(2020~2024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승인기준)는 173명임[1)2)3)]

◦ 2020년 45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 32명, 2024년 31명으로 소폭 감소 후 정체

◦ 집계 유형별로 2024년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건설발주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21명, 67.7%), 직영 7명(22.6%), 도급 3명(9.7%)이 발생

- 2023년 대비 건설발주에서 5명 감소하였으나, 직영에서 5명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 2024년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공기업에서 22명 발생하여 전체의 7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누적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도 70.5%(12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자를 의미하며, 업무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 발생기준과 산업재해 승인기준에 따라 연도별 사망자 수가 상이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포함하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O) 2분기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함

3)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승인기준)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고 있음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대분류	중분류	공시항목	기준	갱신주기
Ⅱ.ESG운영	S(사회)	2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안전관리현황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 안전사고 사망자수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안전관리등급	정기공시: 연1회(4월말) * 안전관리등급(7월말)

자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특히 준시장형 공기업이 2024년 13명으로 2023년 대비 9명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시장형 공기업은 2023년 대비 8명 감소, 준시장형 공기업은 9명이 증가하였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명 감소, 기타공공기관은 2명 감소함

[연도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5년 누적	증감 (B-A)
공기업		소계	35	27	17	21	22	122	1
		건설발주	32	25	13	18	15	103	△3
		도급	2	1	1	1	2	7	1
		직영	1	1	3	2	5	12	3
	시장형	소계	24	17	8	17	9	75	△8
		건설발주	21	16	7	16	6	66	△10
		도급	2	1	0	1	2	6	1
		직영	1	0	1	0	1	3	1
	준시장형	소계	11	10	9	4	13	47	9
		건설발주	11	9	6	2	9	37	7
		도급	0	0	1	0	0	1	0
		직영	0	1	2	2	4	9	2
준정부기관		소계	7	8	4	6	6	31	△1
		건설발주	7	7	4	6	5	29	△1
		도급	0	1	0	0	0	1	0
		직영	0	0	0	0	1	1	1
	기금관리형	소계	0	0	0	0	1	1	1
		건설발주	0	0	0	0	0	0	0
		도급	0	0	0	0	0	0	0
		직영	0	0	0	0	1	1	1
	위탁집행형	소계	7	8	4	6	5	30	△1
		건설발주	7	7	4	6	5	29	△1
		도급	0	1	0	0	0	1	0
		직영	0	0	0	0	0	0	0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5년 누적	증감 (B-A)
기타공공기관	소계	3	4	5	5	3	20	△2
	건설발주	1	3	2	2	1	9	△1
	도급	0	0	1	3	1	5	△2
	직영	2	1	2	0	1	6	1
전체	소계	45	39	26	32	31	173	△1
	건설발주	40	35	19	26	21	139	△5
	도급	2	2	2	4	3	11	△1
	직영	3	2	5	2	7	21	5

주: 1.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함
2.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3. 공공기관 부설기관 포함
4.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2025년 2분기 자료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승인기준) 최다 발생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많이 발생함

- ○ 한국수자원공사의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6명이며, 같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명, 한국철도공사 3명 발생함
- ○ 시장형 공기업에서는 한국도로공사(4명)와 한국전력공사(3명)가 시장형 공기업 사고사망자(9명)의 77.8%를 차지함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3명)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고사망자(5명)의 60.0%를 차지

[2024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승인기준) 기관]

(단위: 명)

구분	기관별 산업재해 발생(승인) 현황
시장형 공기업(9)	한국도로공사(4), 한국전력공사(3)[2], ㈜강원랜드(1), 한국중부발전(주)(1)[2]
준시장형 공기업(13)	한국수자원공사(6), 한국토지주택공사(4), 한국철도공사(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신용보증기금(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	국가철도공단(3), 한국농어촌공사(1), 한국산업단지공단(1)
기타공공기관(3)	국방과학연구소(1), 중소기업은행(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1)[1]
합계	31

주: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
2) ALIO의 1분기 자료는 한전KPS의 2명 사망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한국중부발전(주)(도급)-한전KPS(직영), 한국전력공사(발주), 한전KPS(직영)이 동일 사망사고로 2분기에는 한전KPS사고사망자(2명)에서 제외됨
1.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함
2.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3. 공공기관 부설기관 포함
4.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2025년 2분기 자료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인 12개 기관은 기관장 경고조치, 안전 관련 개선계획 제출 등 경영실적평가 후속조치가 취해짐

- 경영실적평가 후속조치가 취해진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해당기관은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4]임
- 나머지 2개 기관((주)강원랜드,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 기관장 임명 및 공석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승인기준) 발생의 주요 특징은 건설발주(67.7%, 21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급격한 증가와 직영 사업장에서의 급등락 양상을 보임

4) 한국중부발전(주)(도급)-한전KPS(직영), 한국전력공사(발주), 한전KPS(직영)이 동일 사망사고임

◦ 준시장형 공기업의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3명으로 2023년 4명 대비 9명 증가하여 전체 사고사망자 수 유지의 주요 원인

- 준시장형 공기업의 건설발주에서 7명, 직영에서 2명 증가

◦ 직영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가 2020년 6.7%에서 2024년 22.6%로 급증하였으나, 2022년(19.2%), 2024년(22.6%)에만 높게 나타나는 변동폭이 큰 양상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사망자 발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 건설발주에서는 2023년 26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5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사고사망자의 67.7%를 차지

[집계 유형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중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누적 (평균)
건설발주	40	35	19	26	21	139
(비중)	(88.9)	(89.7)	(73.1)	(81.3)	(67.7)	(80.3)
도급	2	2	2	4	3	11
(비중)	(4.4)	(5.1)	(7.7)	(12.5)	(9.7)	(6.4)
직영	3	2	5	2	7	21
(비중)	(6.7)	(5.1)	(19.2)	(6.3)	(22.6)	(12.1)
합계	45	39	26	32	31	17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함
2.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3. 공공기관 부설기관 포함
4.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2025년 2분기 자료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2020~2024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승인기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많이 발생하여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시장형 공기업 중 최다 발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30명)와 함께 시장형 공기업 누적

사망사고자(75명)의 84.0%를 차지

- ○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가 준시장형 공기업 누적 사망사고자(47명)의 61.7%를 차지
- ○ 준정부기관에서는 위탁집행형에서 30명, 기금관리형에서 1명 발생했으며, 위탁집행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12명)와 국가철도공단(11명)이 위탁집행형 누적 사망사고자(30명)의 76.7%를 차지

[최근 5년 누적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승인기준) 기관]

(단위: 명)

구분	기관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승인기준)
시장형 공기업 (75명)	한국전력공사(33), 한국도로공사(30), 한국중부발전(4), 한국수력원자력(주)(2), 한국가스공사(2), 한국공항공사(2), ㈜강원랜드(1), 인천국제공항공사(1)
준시장형 공기업 (47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 한국철도공사(10), 한국수자원공사(7), 해양환경공단(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명)	신용보증기금(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0명)	한국농어촌공사(12), 국가철도공단(11), 한국환경공단(4), 국립공원공단(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 한국산업단지공단(1)
기타공공기관 (20명)	국방과학연구소(4), 대한석탄공사(2), 새만금개발공사(2), 한국어촌어항공단(2), 한국수산자원공단(2), 분당서울대학교병원(2)[1], 부산항만공사(1), 인천항만공사(1), 중소기업은행(1), 한국국방연구원(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1)[1]
합계	173

주: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
1.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함
2.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3. 공공기관 부설기관 포함
4.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2025년 2분기 자료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 재검토 필요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5)]

- 안전관리등급제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안전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기관이 어떻게 위험 작업현장별로 안전활동 이행(안전수준)하고, 그 결과 산업재해 사고율이 감소했는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부문은 안전역량(350점), 안전수준(350점), 안전성과(300점)으로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
- 사고사망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하위지표의 배점은 100점으로 다른 영역의 득점으로 만회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 미흡함
- 다만, 업무특성상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이 있어 사망사고 감축 성과 관련 지표 배점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안전성과 세부지표 및 배점]

(단위: 점)

범주	안전성과 세부지표	배점
안전성과(300점)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	40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자료: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제 결과보고서

◦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승인기준)한 기관들의 안전관리등급과 실제 사고발생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수자원공사(6명), 한국도로공사(4명), 한국토지주택공사(4명) 등 사고사망자 다 발생 기관들이 모두 3등급(보통)으로 평가됨

5)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입됨(2020년 6월)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2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사고사망자가 2배 증가하였으나 안전관리등급은 3등급을 유지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도 2023년 1명에서 2024년 2명으로 증가했지만 3등급을 유지하는 등 사고 증가와 등급 간 연동성 부족 문제가 나타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안전성과의 하위지표인 '사망사고 감소 성과' 지표에서 정부 시범사업 참여로 등급이 상향 조정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현황]

(단위: 명, 등급)

기관명	사망자수			2024			
	2023	2024	5년간	종합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한국수자원공사	0	6	7	3	3	3	4
한국도로공사	6	4	30	3	3	3	2
한국토지주택공사	2	4	29	3	4	3	2
한국전력공사	9	3	33	3	3	3	2
한국철도공사	2	3	10	3	3	4	3
국가철도공단	1	3	11	3	4	3	3
㈜강원랜드	0	1	1	3	3	3	3
한국중부발전(주)	1	1	4	3	3	3	2
한국농어촌공사	3	1	12	3	3	3	2
한국산업단지공단	0	1	1	3	3	3	3
국방과학연구소	2	1	4	3	4	3	3

주: 1.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함
2.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2025년 2분기 자료를 취합함
3.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이후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현재 재판진행 중)는 대한석탄공사의 2022년 9월 채탄작업장(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사망건 1건임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6)]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건설공사 발주에서 발생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대검찰청의 해설서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는 직영에서 발생한 사고로, 2022년 9월 14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생산부 채탄작업장에서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안전점검 중 직원(장성생산부장) 매몰 사망

- 2022년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기소대상은 기관, 기관장,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임

---

6)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생략)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 8. (생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2025년 8월 1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장성광업소 직원 2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음
- 대한석탄공사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임

○ 한편, 2025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발생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증대

- 2025년 8월 한국철도공사에서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 사망, 5명 중경상을 입음에 따라,[7]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과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25년 2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발생으로 작업자 4명 사망,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8월에는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벌목 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를 위한 조사에 착수함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 8. 22.)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획기적 개선과 기관장 책임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8]

-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경영의 법제화,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 대폭 확대, 안전관리등급제 개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됨

---

7) 한국철도공사 직원 1명과 안전점검 하청업체 직원 6명이 폭우로 인한 경부선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임

8) 2025년 8월 22일 부총리 주재의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안전관리중점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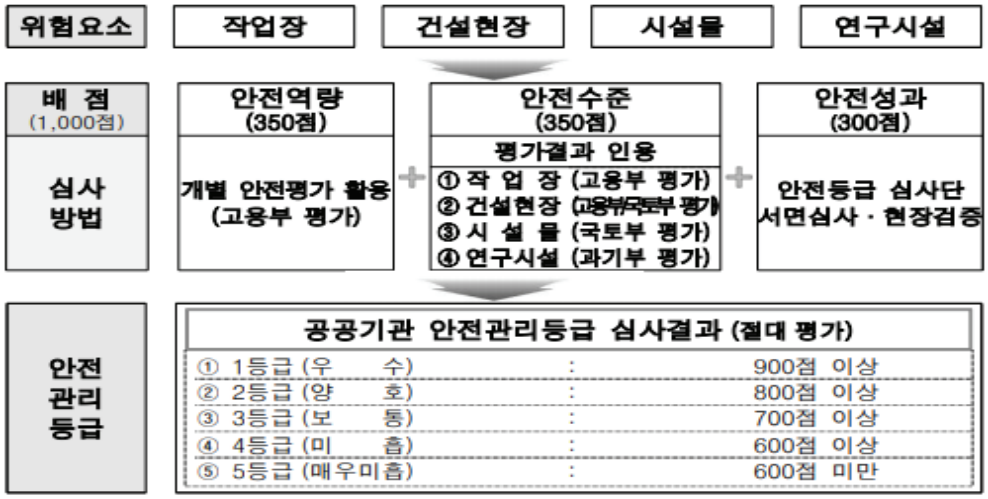
1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분석

가. 현 황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

- ◦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
-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사고율 감소를 목적으로 함
- ◦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 또는 운영하여 종사자 및 시설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심사(2024년 기준 72개 공공기관 심사)
  - 유형별: 공기업(27개), 준정부기관(24개), 기타공공기관(21개)
- ◦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실시 등 후속조치 시행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체계]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는 2등급(양호) 20개(27.8%), 3등급(보통) 51개(70.8%), 4등급(미흡) 1개(1.4%)며, 1등급(우수) 및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음

◦ 2024년도는 2023년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 4개 증가, 미흡이하 기관 4개 감소

◦ 시행 첫 해인 2020년 3등급(보통) 이상(2·3등급) 비중이 66.4%에서 2024년 98.6%로 증가

[종합 안전관리등급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2020년도	98	-	8 (8.2)	57 (58.2)	31 (31.6)	2 (2.0)
2021년도	99	-	11 (11.1)	59 (59.6)	26 (26.3)	3 (3.0)
2022년도	100	-	30 (30.0)	60 (60.0)	9 (9.0)	1 (1.0)
2023년도(A)	90	-	28 (31.1)	58 (64.5)	4 (4.4)	-
2024년도(B)	72	-	20 (27.8)	51 (70.8)	1 (1.4)	-
증감(A-B)	-	-	1 (1.4)	3 (4.1)	△4 (△5.5)	-

주: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의 사유로 '24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18개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보도자료

나. 주요 쟁점

❑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는 평가대상 72개 기관 중 71개 기관이 보통 이상 등급(2·3등급)에 해당하여 상향평준화 양상을 보임

◦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24개) 모두 보통 이상(2·3등급)에 해당

○ 기타공공기관은 심사대상 21개 기관 중 20기관이 보통 이상(2·3등급)에 해당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단위: 개소)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2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11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5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4
3등급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16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9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
4등급	-	-	-	-	새만금개발공사	1

주: 1등급 및 5등급 기관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보도자료

◦ 2023년 대비 2024년도 안전관리등급의 변화가 이루어진 기관은 21개로,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3개, 하락한 기관은 8개 기관임

[2023년 대비 2024년 등급 변화(종합등급)]

(단위: 개소)

등급 상승		등급 하락	
기관명	개소	기관명	개소
3→2등급 상승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DN, 국민연금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9	2→3등급 하락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
4→3등급 상승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주: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의 사유로 '24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18개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4등급 이하(미흡 및 매우미흡)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 1개 기관임

◦ 새만금개발공사는 2022년 5등급(매우미흡)에서 2023년 4등급(미흡)으로 상승했으나, 2024년 동일하게 4등급(미흡) 유지

◦ 2023년 4등급(미흡)이었던 한국에너지공단,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모두 3등급(보통)으로 상승하여 하위등급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 개선이 두드러짐

[2024년 안전관리등급 4등급 이하 기관의 연도별 평가 등급]

(단위: 등급)

기관명	2022	2023	2024
새만금개발공사	5(매우미흡)	4(미흡)	4(미흡)

주: 2022년부터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새만금개발공사는 건설현장 안전수준이 취약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새만금개발공사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준은 D등급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 역량 부문에서 5등급(매우미흡)으로 평가
- 새만금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에도 안전보건경영리더십,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4등급 이하 결과를 받은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관의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예정

[새만금개발공사 세부심사 등급]

(단위: 등급)

종합 등급	기관명	세부 심사기준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종합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 시설	
미흡 4등급	새만금개발공사	5	4	-	D	-	-	2

주: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자료: 기관별 안전관리등급 결과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 재검토 필요

○ 실제 사고 발생이 안전관리등급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안전관리등급제의 예측력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12개 기관 모두가 3등급(보통) 이상을 받아, 실제 사고발생과 안전관리등급 결과 간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됨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고사망자 증가(2023년 2명→2024년 4명)에도 불구하고 3등급(보통)을 유지했으며, 세부지표인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에서 C등급을 받음

- 정부 시범사업('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 사업) 참여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D→C)이 이루어져, 실제 사고 증가와 무관한 요소로 인해 해당 지표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에도 불구하고 사고 다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고사망자 발생 최다기관(승인 기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의 2024년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보면, 지속적 사고 다발과 안전관리 역량간 일치하지 않는 양상이 확인됨
-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발생(승인 기준) 최다 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2024년 안전역량·안전수준 모두 3등급으로 평가받아 지속적 사고 다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5년간 사고 다발 기관 대부분이 안전역량·안전수준에서 3등급을 받아 지속적 사고 패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관들(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예상 가능하나, 이들 기관이 모두 종합등급 3등급을 받는 것은 평가 체계의 변별력 부족을 시사함
- 이는 안전관리등급제가 장기간의 사고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속적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현황]

(단위: 명, 등급)

기관명	사망자수			2024			
	'23	'24	'20~'24	종합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한국수자원공사	0	6	7	3	3	3	4
한국도로공사	6	4	30	3	3	3	2
한국토지주택공사	2	4	29	3	4	3	2
한국전력공사	9	3	33	3	3	3	2
한국철도공사	2	3	10	3	3	4	3
국가철도공단	1	3	11	3	4	3	3
㈜강원랜드	0	1	1	3	3	3	3
한국중부발전(주)	1	1	4	3	3	3	2
한국농어촌공사	3	1	12	3	3	3	2
한국산업단지공단	0	1	1	3	3	3	3
국방과학연구소	2	1	4	3	4	3	3

주: 1. 산업재해 승인을 기준으로 함
2.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2025년 2분기 자료를 취합함
3. 2025년 공공기관 지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자료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의 연계로 인한 안전관리등급의 실효성 문제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는 문제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으며, 동 지표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기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등급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조임

○ 경영실적평가는 평가의 중복 평가 방지 및 평가체계 간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하위지표 중 하나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 문제가 경영실적평가에 전이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함

- 실제 사고 발생과 등급 간 연동성 부족, 평가결과의 상향평준화 등 안전관리등급제의 한계가 경영실적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의 실효성이 제한됨
-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안전관리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점에 불과하여, 기관 입장에서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실질적 동기 부족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정의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산업재해 등 근로자 피해 방지, 사업장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기관은 안전관리등금 심사 결과(기재부) 반영 ※ 나머지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고용부) 결과 반영 ※ 위 평가 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 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주: 안전 및 재난관리의 하위지표는 안전관리등급(0.5점),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평가(비계량 1/1.5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확보위한 노력·성과(계량 0.5점) 등 3개 지표로 구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경고조치 및 안전관련 개선 계획 제출 요구 등 후속조치가 시행됨

◦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종합 등급 또는 위험요서별 안전관리등급이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후속조치 대상으로하여 2025년에는 28개 기관에 안전 자문기관 자문, 경영진 안전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1)]

1)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2024.9.6.)
제22조(사후조치)
①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하위등급을 받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고, 분기별로 추진현황 및 제1항의 개선 필요사항 이행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 또는 진단
나. 경영진 안전 교육 이수 및 전 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프로그램 수립
다. 안전조직 관리자 및 담당자의 안전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 이수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다음 연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전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실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기관들이 안전관리등급 3등급(보통)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등급제 차원의 후속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6명), 한국도로공사(4명) 등 사고사망자 다발생 기관들 중 일부가 3등급(보통, 종합등급)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등급제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없음에도 4등급(미흡)으로 후속조치 시행

○ 경영실적평가의 재난 및 안전 지표 중대재해 발생 시 0점 부여가 가능한 강력한 패널티 조항을 두고 있으나, ①중대재해, ②안전법령상 의무위반, ③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삼중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구조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공공기관이 검찰에 기소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여[2], 실제 패널티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평상시에는 안전관리등급의 낮은 배점(0.5점)으로 인한 유인 효과 부족,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까다로운 패널티 적용 요건으로 인해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 압력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상황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가 공공기관의 실질적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 정비, 실제 사고발생에 대한 반영, 후속조치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며, 경영실적평가와의 연계 구조를 재검토하여 안전관리 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체계 구축이 필요함[3]

---

2) 2022년 이후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대한석탄공사의 2022년 9월 채탄작업장(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사망건 1건으로, 2025년 8월 1심 판결에서 무죄 및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음

3) 이에 정부는 2025년 8월 22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통해 안전경영 법제화, 경영평가 내 안전관리 비중 대폭 확대, 안전관리등급제 개편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1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 분석

가. 현 황

❑ 노동이사제[1]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운영중인 제도

◦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기업 구성원의 한축인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임

❑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1명을 노동이사(비상임이사)로 임명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공기업) 및 제26조제3항(준정부기관)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임

❑ 기타공공기관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없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음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근로자이사제라고도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구분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	제25조제3항(공기업) 제26조제3항(준정부기관)
추천방식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추천대상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근로자	
이사정수 및 임원유형	1명 선출,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현행 이사의 선임 절차와 동일	
임기	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현행 이사의 임기와 동일)	제28조제1항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노동이사의 자격요건, 겸직 조항, 보수 등 관련 세부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

- ○ 노동이사에 선출되면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 혹은 고충처리위원 등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함
- ○ 노동이사는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인정함
- ○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사내직원이 겸직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가 지급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구분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노동이사 자격요건	노동조합 조합원,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탈퇴 필요	제47조의4제2항
노동이사 겸직 조항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	제47조의10
노동이사 보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음	제47조의11

자료:「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비상임이사) 선임 현황(2025.8.11.)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기관은 14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시장형 공기업은 14개 기관 모두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준시장형 공기업), 2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준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부동산원만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한국연구재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임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현황]

(단위: 개)

기관유형	선임 여부	기관수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선임 완료	14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선임 완료	16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 한국마사회,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선임 대기중	1	한국부동산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선임 완료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상위법 개정 대기중	2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임 완료	3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석유관리원, 국립생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재정정보원, 국가철도공단
	재선임 대기중	1	한국국제협력단
	상위법 개정 대기중	5	한국산업인력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임 절차 지연중	5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도입된 노동이사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노동이사 선임 필요

○ 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에 이사 정원 등이 명시되어 노동이사 도입을 위해 비상임이사정원 조정이 필요함

- 기금관리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2], 국민연금공단[3]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4], 국민건강보험공단[5], 건강보험심사평가원[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8]은 현재까지 관계 법령 개정이 지연되어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음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민연금법」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6)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 비상임이사 6명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관계법령 개정 필요에 따른 노동이사 미선임 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지연사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상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국민연금공단	상위법 「국민연금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 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은 2년 연속 노동이사 선임이 지연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전년도 임원추천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노동이사를 선출하지 못하였고, 당해 내규 제정 등을 위해 노사협의 진행중임

[2년 연속 노동이사 미선임 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지연사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년 7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노동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 후보자 추천이 없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및 공모절차 추진 예정
	한국장학재단	2024년: 경영진(기관장) 신규 임명('23.1월) 및 노동조합 집행부 변동(신규 선출, '23.7월)을 고려하였으며, 이후 임기가 도래된 임원이 없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 2025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내규 제정 등 노사 협의절차 진행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 간 도입 협의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완료 후 선임 절차 진행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반 규정 개정 완료 후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 진행중
	한국연구재단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제반 규정 개정 완료하였으나, '24년까지 임기 만료 임원이 전무. 임기 만료된 임원에 대한 연임여부 통보 즉시, 노동이사 선임 등 제반 절차 추진 예정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직무 유형 중 사무직이 38명으로 가장 많음

○ 기술직 26명, 발전직 3명, 연구직 3명 등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직무유형 현황(2025.8.)]

(단위: 명)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사무직	6	4	9	19	38
기술직	5	10	-	11	26
발전직	3	-	-	-	3
연구직	-	-	-	3	3
종합직	-	-	1	-	1
평가직	-	-	-	1	1
행정직	-	1	-	-	1
일근	-	1	-	-	1
총합계	14	16	10	34	74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보직은 차장급이 19명으로 가장 많음

○ 과장급 13명, 팀장급 9명(파트장 팀장 포함), 부장급 4명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보직 현황(2025.8.)]

(단위: 명)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차장	5	6	1	7	19
과장	6	4	-	3	13
팀장	1	1	4	2	8
파트장(팀장)	-	-	-	1	1
부장	-	1	-	3	4
선임차장	-	-	1	-	1
선임부장	1	-	-	-	1
대리	-	-	-	1	1

(단위: 명)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경영지도실장	-	-	-	1	1
경영지원역	-	-	1	-	1
기관사	-	1	-	-	1
기장	-	1	-	-	1
부팀장	-	-	1	-	1
사무소장	-	-	-	1	1
사업소장	-	1	-	-	1
선임위원	1	-	-	-	1
선임조사위원	-	-	-	1	1
수석연구원	-	-	-	1	1
연구원	-	-	-	1	1
책임연구원	-	-	-	2	2
연구위원	-	-	-	2	2
전문위원	-	-	1	1	2
소장	-	-	-	1	1
수석	-	-	-	2	2
수석팀장	-	-	-	1	1
임금피크전문직	-	1	-	-	1
지사장	-	-	1	-	1
차석검사원	-	-	-	1	1
기타	-	-	-	2	2
총합계	14	16	10	34	74

주: 기타는 별정직, 임금피크 대상임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성별은 남성 68명, 여성 6명으로 남성 비중이 높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성별 현황(2025.8)]

(단위: 명)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남	14	16	9	29	68
여	-	-	1	5	6
합계	14	16	10	34	74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노동이사 평균 근속연수는 시장형 공기업이 28년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것으로 파악됨

○ 평균근속연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3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3년, 준시장형 공기업 21년임

[공기업 · 준정부기관 노동이사 근속연수 현황]

(단위: 년)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평균근속연수	28	21	23	23	23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선임 직전 조합원 여부 및 노조 특성 중 복수노조&1노조 조합원이었던 노동이사는 32명, 단수노조 조합원이었던 노동이사는 29명임

○ 노조 있으나 비조합원이었던 노동이사는 10명임

[공기업 · 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선임 직전 조합원 현황(2025.8)]

(단위: 명)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노조 없음	-	-	-	2	2
노조 있으나 비조합원	-	-	2	8	10
단수노조 & 조합원	4	9	4	12	29
복수노조 & 1노조 조합원	10	7	4	11	32
기타	-	-	-	1	1
합계	14	16	10	34	74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63곳이 과반수 노조의 추천을 통해 선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의 기관은 전직원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임하였음

○ 기타의 경우 노조 추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경우 등임

[공기업 · 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선출방식 현황]

(단위: 개)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전직원 투표	1	1	-	3	5
과반수 노조의 추천	13	14	9	27	63
기타	-	1	1	4	6
합계	14	16	10	34	74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이사회 개최 주기는 월 1회가 53곳으로 가장 많고 격월 1회, 기타가 10곳임

○ 기타의 경우 월 10회, 비정기 개최 등 개최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이사회 개최주기 현황]

(단위: 개)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월 1회	13	14	8	18	53
격월 1회	-	1	-	9	10
분기별 1회	-	1	-	-	1
기타	1	-	2	7	10
합계	14	16	10	34	74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대규모 기타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3항(공기업)[9] 및 제26조3항(준정부기관)[10]에 따라 현재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선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노동이사 의무 선출 대상은 아님

○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으로 조문화할 때 공공기관 유형 가운데 공기업(제25조)과 준정부기관(제26조)만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 임원 관련 조항은 조문화하지 않음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명시적인 의무 조항은 없어 기관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음

❑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확대 의제는 2025년 123대 국정과제 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혁신 과제로 제시되어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외 기타공공기관으로 노동이사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기획재정부) 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18번 과제)

❑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중 직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모두 정원이 1,000명 이상임[11)]
- 총수입액은 2024년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25조 8,045만원, 한국산업은행 44조 5,212억원, 중소기업은행 67조 2,094억원임
- 자산규모는(고유계정) 2024년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133조 4,166만원, 한국산업은행 372조 5,811억원, 중소기업은행 472조 2,198억원임

11) 서울특별시의 경우 정원이 1,000명이 넘는 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2명 선임하도록 조례에 명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이사 1명

[은행형 공공기관 정원·총수입·자산규모(2024)]

(단위, 명, 억원)

공공기관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한국수출입은행	1,322.54	258,045	1,334,166
한국산업은행	3,423	445,212	3,725,811
중소기업은행	13,599	672,094	4,722,198

주: 2024년 임직원(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정원이며, 자산규모는 고유사업 자산 계정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한편,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50~3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정원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선출하고 있음[12)]
-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원 50명~100명 이상 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출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50명 이상,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은 100명 이상임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설치대상
서울특별시	정원 300명 이상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정원 100명 이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정원 50명 이상

자료: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32p.표 재인용. 한국노동연구원

12)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이사 1명

❑ 기타공공기관 중 병원 유형의 공공기관도 인원규모가 현원 기준으로 1,572~7,665명 수준으로 병원 인원규모가 적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 중 정원이 300명 이상의 병원 유형 공공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13],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임

[공공기관(병원) 정원·현원 현황(2024)]

(단위, 명)

공공기관	정원	현원	정원-현원 차이
서울대학교병원	8,495	7,665	830
부산대학교병원	6,981	5,902	1,079
경북대학교병원	5,539	4,705	834
전남대학교병원	5,523	4,769	754
충남대학교병원	5,070	4,153	917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116	3,374	742
전북대학교병원	3,192	2,824	368
충북대학교병원	2,674	2,216	458
제주대학교병원	2,016	1,660	357
강원대학교병원	1,905	1,572	333

주: 정원은 2024년 임직원(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정원, 현원은 2024년 임직원(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현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제된 기관 중 일부는 정원 요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며, 공공기관 중 직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

13)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함

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지정 해제함[14]

- 구체적으로는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정원 기준(300명)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준정부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
-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유 중 정원 요건(300명)이 아닌 총수입액 200억원 이하, 자산규모 30억원 미만 등의 사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요건에 준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기업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므로, 정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해제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으로 검토 필요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제된 기관]

기관 유형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280.5), 부산항만공사(274)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182), 울산항만공사(12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54), 한국언론진흥재단(2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535),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5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42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415), 한국보육진흥원(367), 서민금융진흥원(349), 한국수산자원공단(347), 한국교육학술정보원(337), 한국농업기술진흥원(3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332), 한국해양수산연수원(3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91), 시청자미디어재단(285), 한국보건복지인재원(274), 한국임업진흥원(26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6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58.5), 한국특허전략개발원(245) 창업진흥원(235), 국제방송교류재단(227),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2023.1.1.)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됨
(정원) 50명 이상 → 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기관 유형	기타공공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2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97), 한국디자인진흥원(186), 한국과학창의재단(181.8), 한국노인인력개발원(18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7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69),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5) 한국기상산업기술원(16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53), 독립기념관(14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9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98), 한국건강가정진흥원(83), 정보통신산업진흥원(51)

주: 1. ( ) 안의 숫자는 2024년 임직원(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정원임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명확한 지침 개정을 통해 기관별 상이한 노동이사 지원제도 및 제도운영형태 개선 필요

❑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시설, 인력, 사내 정보망 이용의 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3항(공기업)[15] 및 제26조3항(준정부기관)[16]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는 비상임이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지위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해당 지침 내 노동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침 및 제도운영방안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현재 기관별 상이한 방식으로 노동이사제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활동비, 교통비 여비 지원 여부 등 기관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노동이사 관련 활동 지원 규정을 수립한 기관은 35개 기관이며, 관련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기관은 39개로 기관별 규정 수립 유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17)]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현황]

(단위: 명)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노동이사 활동 지원 관련 규정(지침 등) 유무	있다	7	8	2	18	35
	없다	7	8	8	16	39
합계		14	16	10	34	74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노동이사 활동비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침에 따른 실비 지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11에 따르면 노동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며,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만 지급할 수 있음

◦ 다음 기관은 노동이사 선임 이후 회의참석수당·여비·교통비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으로, 실비발생요인이 없거나 관련 비용 지급에 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임

- 노동이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관은 현업 업무 수행시 출장비가 지급되므로 노동이사로서의 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일부 기관의 경우 본사와 노동이사의 사무실 위치가 동일하여 출장에 의한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

1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7조의14(위임사항)에 따르면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이사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규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 내규 수립이 의무는 아님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여비·교통비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기관유형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1)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전KDN㈜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국립생태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아래 기관은 노동이사에게 활동비(직무수행경비) 지급 없이 이사회 참석 수당지급(회의참석비[18]·여비·교통비 등)를 지급한 기관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회의참석비[19]·여비·교통비(본사: 서울)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회의참석비[20]·여비·교통비(본사: 서울)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회의참석비[21]·여비·교통비(본사: 경북 김천)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경영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사회 참석 시 여비·교통비를 포함하여 회의 참석여비(본사: 전북 완주)[22]를 지급[23]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월 20만원 회의참석수당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부산)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24]

18) 비상임이사에게 지급

19) 회의참석수당 대면 참석시 회당 30만원, 서면 참석 시 10만원(이사회 1년에 6~8회)

20) 회의참석수당 회당 50만원(이사회 1년 보통 6회)

21) 회의참석수당 회당 50만원(이사회 격월로 개최)

22) 회의참석수당 회당 30만원(이사회 격월로 개최)

23)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이사회 운영요령에 따라 경영활동비와 회의참석여비로 용어 정의

24) 회당 20만원 연 240만원 한도(25.8월 이사회 참석수당부터 지급)

[노동이사에게 회의참석비·여비·교통비 실비 지급 공공기관 현황(활동비 지급 無)]

(단위: 개)

기관유형	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2)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아래 기관은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참석 수당지급(여비·교통비 등) 없이 활동비(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한 기관임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분당)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되지만, 본사에서 이사회가 진행되어 여비·교통비 실비 발생액이 없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사회 참석수당(여비 교통비)을 지급하지 않고 월 4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경비(활동비)[25]를 지급하고 있음

[이사회 여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기관유형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1)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아래 기관은 노동이사가 현업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로서 월 보수를 수령하면서, 이사회 업무도 병행하며 활동비와 여비, 교통비(이사회 외 업무) 등이 지원되는 기관으로 여비·교통비 외에 활동비(직무수행경비)[26]가 지급되지 않는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월 5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인천)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25) 월 4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경비

26)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지 않음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월 5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서울)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 한국마사회의 경우 월 5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과천)는 이사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별도로 지급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월 3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 활동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제주도)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 기술보증기금은 월 25만원 범위 내로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부산)는 별도로 지급됨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서울)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월 50만원 범위 내 활동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원주)는 이사 임무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지급됨
- 국가철도공단은 월 50만원 범위 내로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대전)는 별도로 지급됨
- 한국환경공단은 월 50만원 범위 내로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인천)는 별도로 지급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월 20만원 범위 내로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여비·교통비(본사: 나주)는 별도로 지급됨
- 한국소비자원은 월 20만원 범위 내로 직무수행경비가 지원되며, 현업과 노동이사 자격으로 출장 시 여비·교통비(본사: 진천)는 별도로 지급

[노동이사가 현업을 수행하면서 여비·교통비 및 활동비를 모두 지급받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기관유형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	기술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한국관광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소비자원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노동이사 선임 기관 중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지원 지침 수립 기관과 미수립 기관 간 노동이사제도 운영 방침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노동이사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노동이사 관련 지침에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27], 관련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지침」[28]을 준용하는 지침 미수립기관에 비해 근로조건 등이 보다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음
- 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관 간 노동이사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점검하고, 지침 미수립 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7) 「한국관광공사 노동이사제 운영지침」 2023.9.5
제9조(근로조건) ①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② 노동이사의 근로 시간 내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업무 : 노사간 갈등 예방을 위한 조합원 면담 등
2. 월간업무 : 근로자 경영참여 통로 보장을 위한 이사회 참가
③ 노동이사는 주 1회(8시간, 연간 총 416시간 이내/매주 수요일) 지정된 장소(본사 교육동 1층 노동이사실)에서 근무하며, 매주 수요일 원 소속 부서의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동 가능하다.
④ 노동이사의 휴가는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노동이사 업무수행 관련 출장은 이사회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⑤ 노동이사의 근무평정은 역량평가 평균이상 그룹의 평균을 부여한다.

28)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지침」 제47조의10(근로시간의 산정)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3) 노동이사 이사회 의결 현황 분석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한 기관은 1개로 노동이사의 적극적인 안건 상정 활동이 필요함

○ 전체 노동이사 채용 기관 중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한 사례는 부의 안건을 제출한 사례 1건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이사회 안건제출 현황(2025.8.)]

(단위: 건)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제출 사례	있다	-	-	-	1	1
	없다	14	16	10	33	73
합계		14	16	10	34	74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노동이사가 부의한 안건을 보면 이사회 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분석 후 이사회 기능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동이사로서의 특화된 안건 상정이 아닌 연례적 의결 성격의 부의 안건 상정안을 제출하였음

[노동이사 부의안건 행사 현황]

기관유형	기관명	안건 현황 및 노동이사 부의 안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1. 노동이사 부의 안건 : '24년도 6차 이사회 보고안건 1호(이사회 운영 평가결과) 2) 부의 결과 : 자체평가결과를 분석하여 '25년도 이사회 기능 활성화 계획에 반영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관 운영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의견 제시 사례가 많음

○ 전체 74개 기관 중 59개 기관은 노동이사의 이사회 반대 의결 활동이 없어 이사회에서 보다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이사회 반대 의결 현황(2025.8.)]

(단위: 개)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노동이사가 특정 안건에 반대한 사례	있다	5	3	2	5	15
	없다	9	13	8	29	59
합계		14	16	10	34	74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노동이사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15개 기관의 반대 의견 건수는 25건임[29)]

- 반대 의견에도 원안 그대로 가결된 건이 16건이며,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된 의견으로 수정가결된 건이 2건, 부결된 건이 7건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이사회 반대 의결 건수 현황(2025.8.)]

(단위: 개)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
노동이사가 특정 안건에 반대한 건수	기관	5	3	2	5	15
	건수	7	7	2	9	25
	원안가결	5	2	2	6	16
	수정가결	1	2	0	0	2
	부결	1	3	0	3	7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9) 이사회가 월 1회 개최되는 기관이 53개로 해당 기관은 3년 간 1건 이상 이사회 안건이 제시되었다면 천 건 이상의 상당한 안건이 제출되었음에 비해 반대 의견 제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노동이사가 개진한 반대 의견 사례를 보면 경영에 관한 재무적 관점에서의 의견 개진, 기업 경영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대체로 비상임이사로서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 개진이 주임

- ①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요구, ② 국립공원공단 직원 징계 경감을 위한 처분에 대한 반대 의견 ③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직통폐합 및 주4.5일제에 관한 의견 제시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이사 선임 등 관련 내용 보완 의견 제시 등의 사례는 노동이사로서의 관련 사안에 부합하는 사례임
- 이 외에 노동이사는 한국공항공사(주차 타워 재무타당성 검토 필요), 한국동서발전㈜ (모회사의 과도한 배당 요구 반대), 한국서부발전㈜ 및 한국남동발전㈜ (재무타당성 검토 필요) 등 기업경영 및 재무와 관련된 의견을 주로 제시함

○ 또한, 노동이사가 개진한 반대 의견은 16건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2건은 일부 수정 반영되었으며, 7건은 부결되었음

- 노동이사 의견이 반영된 사례는 한국전력기술(주) 디지털 트윈 분야 지적재산권 현물출자 관련 안건 보완 요청이 받아들여져 재상정을 전제로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사회 운영규정 내 노동이사 선임 관련 내용 보완 제안이 받아들여져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김해 청주공항 주차장 빌딩 사업 안건은 노동이사를 포함 이사회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 유통전담기관 지정 공모 추진 사안은 노동이사를 포함 비상임이사 전원 반대로 부결 후 재상정 가결됨
- ㈜강원랜드의 경우 「메인타워 및 마운틴콘도 기존동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안)」 안건에 대해 노동이사가 복합리조트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노동이사의 의견이 의결 결과로 수용되진 않았음[30]

30) ㈜강원랜드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수정의결 되었으나 노동이사가 개진한 의견에 따른 결과는 아니었으며, 경영제언으로 반영되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수립함

[노동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기관별 주요 현황]

기관유형	기관명	안건 현황 및 노동이사 반대 사유(부의 안건)	의결 결과
시장형 공기업 (5)	㈜강원랜드	1. 안건 현황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및 마운틴콘도 기존동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복합리조트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하에 추진 필요 ※ 노동이사 반대의견 의결결과로 불수용, 제언사항으로 이행함	수정가결
	한국공항 공사	1. 안건 현황 : 김해, 청주공항 주차장(빌딩) 신축 사업 계획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재무적 타당성 재검토 필요	부결 (이사회 전원 반대)
	한국동서 발전㈜	1. 안건 현황 : 제24기 이익잉여금 처분(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모회사의 과도한 배당 요구	원안 가결
	한국서부 발전㈜	1. 안건 현황 : 한국에너지공대 5차 분담금 출연(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재무적 부담 가중	원안 가결
	한국남동 발전㈜	1. 안건 현황 : 노동이사 반대 안건: 의결 제31호 2023년 중간배당(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중간배당으로 인한 발전자회사 재무부담 증가	원안 가결
준시장형 공기업 (3)	한국조폐 공사	1. 안건 현황 :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개정안 중 일부(강등) 세부사항의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 추가 검토 필요	수정가결
	한국전력 기술㈜	1. 안건 현황 : 디지털 트윈 분야 지식재산권 현물출자(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과거사례 환류 및 연구소기업의 수익성 검토 등 안건내용 보완 필요에 따른 재상정 요구	부결
	한국토지 주택공사	1. 안건 현황 :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입주예약자 지원방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입주예약자간 형평성 문제 등	원안 가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한국자산 관리공사	1. 안건 현황 : '위탁개발사업 운영기준' 일부개정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위탁개발사업이 상시적 사업인 만큼 기준이 아닌 계속적 규범인 내규로 제정될 필요성이 있어 반대 의견 제출	원안 가결
	기술보증기금	1. 안건 현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요구	원안 가결

기관유형	기관명	안건 현황 및 노동이사 반대 사유(부의 안건)	의결 결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한국교통 안전공단	1. 안건 현황 :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징수 계획(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수수료를 무료화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제공 검토 필요	원안 가결
	한국석유 관리원	1. 안건 현황 : 수소 유통전담기관 지정 공모 추진(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경제성에 대한 분석 등 신중한 검토 이후 추진 필요 (내용 보완하여 2024년 제117차 이사회 안건(수소 유통전담기관 지정 공모 지원 추진(안)) 상정 후 가결)	부결 (비상임이사 전원 반대)
	국립공원 공단	1. 안건 현황 : 직원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 직원을 대변하여 징계 경감을 위한 처분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원안 가결
	한국국토 정보공사	1. 안건 현황: 정원 4,137명 확정, 홍보처 및 안전관리처 부사장 직속으로 이동, 2개 지역본부 및 11개 지사 통합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조직통폐합으로 얻는 비용절감 효과는 적음. 주4.5일 근무 등을 실시하면 절감액이 많으니 이러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할 필요	원안 가결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1. 안건 현황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 2. 노동이사 반대 사유 :'노동이사' 선임 등 보완 필요	부결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상장 공기업의 노동이사 지위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상 기준 확립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선임함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3항(공기업)[31] 및 제26조3항(준정부기관)[32]에 따라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함

❑ 상장 공기업은 「상법」상 노동이사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하며, 법률상 지위는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 중 하나임

○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이며, 상장된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임

[공공기관 상장 공기업 현황]

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법」[33]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중 하나로 등기해야 함

○ 비상임이라는 점에서 상근을 요건으로 하는 상법상 사내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 중 하나의 지위로 규정할 수 있음

○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제도취지, 결격사유, 선임의무 등이 상이하며 노동이사 지위 해석에 따라 상법상 선임의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차이]

구분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제도 취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
결격 사유	결격 사유 규정 없음	상법·관련 법령에서 엄격한 결격 사유 규정 (최대주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선임 의무	선임 의무 규정 없음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3인 이상이고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는 사외이사로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선임.

❑ 상법 및 관련법 해석 여부에 따라 상장 공기업의 노동이사의 지위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상법」에 따르면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상장 공기업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비상무이사로 규정할 수 있음[34]

- 7개 상장 공기업 모두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피용자가 노동이사로 선임되었음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의 해석 여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6개 상장 공기업 노동이사는 상법상 사외이사로 분류될 수도 있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될 수도 있음

34)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고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노동이사는 상법상 사외이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자본시장법 특례조항 적용에 따른 상장 공기업의 노동이사 지위 해석]

구분	상법상 지위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밖의 법률에 공공기관운영법이 포함되면 상장 공기업 노동이사는 상법상 사외이사로 분류될 수 있음[35)]

[공공기관운영법 포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특례 적용에 따른 상장공기업의 노동이사 지위 해석]

구분	상법상 지위
	사외이사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 현재 상장 공기업별 노동이사 상법상 등기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모두 상법상 사외이사로 등기하였음

35) 한국전력공사가 법무부 질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상장 공기업의 노동이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법상 사외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재(2025.8) 노동이사의 상법상 등기 현황]

구분	상법상 지위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

❑ 동일 상장 공기업임에도 법률 해석 여부에 따라 특정 기관의 노동이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지위를 적용하고, 그 외의 기관은 기타비상무이사 지위를 적용하는 혼선이 발생하므로 공공기관운영법에 상장 공기업 노동이사의 상법상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상법」 개정법률(시행일 2026.7.23.)에 따르면, 향후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36]할 예정이므로, 노동이사의 사외이사 혹은 기타비상무이사 지위 적용에 따라 독립이사에 노동이사가 포함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36)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7.23.)

12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분석

가. 현 황

❑ 정부는 최근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 양립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 부모 맞돌봄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등
- ◦ 근로환경 유연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 등
- ◦ 긴급돌봄 지원 및 기업 부담 경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단기 육아휴직,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 등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현행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1] 등에도 명시되어 있음

- ◦ 육아휴직 사용자 수, 출산휴가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 수, 유연근무 현황(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가족돌봄 휴가·휴직 사용자 수 등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4. 5. 10.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항목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함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확대,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운영, 가족친화인증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임신·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운영, 근무지 전보 시 임신·육아 중인 직원 우선 고려,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검토 방향을 반영하여 2024. 6. 5.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동 지침은 2025년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공공기관이 임신·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운영,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

◦ 본래 공공기관은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으나, 출산축하금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복 지출 가능하도록 개정

◦ 본래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출산축하금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주요 쟁점

❑ [남성육아휴직]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는 각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지침에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낮은 수준임

◦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26.9%로, 2024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약 31.6%)의 약 85.1% 수준

[2024년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공공기관 재직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사용자 수	24,428	17,863	6,565	132,535	90,706	41,829
사용률	100.0	73.1	26.9	100.0	68.4	31.6

자료: 고용노동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5개 공공기관 중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0.0% 미만인 기관은 총 13개임

◦ 사용률이 저조한 13개 기관 모두 2023년에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10.0% 미만이었음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0%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3년 대비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0.7%p 하락함. 다만, 공단은 육아휴직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설명함(출산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8.5%)
- 대학병원 및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10.0% 미만인 13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 %p)

기관명	2024				2023	차이 (C-D)
	임직원 정원	육아휴직 사용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C=B/[A+B])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D)	
		여성 (A)	남성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957	663	49	6.9	6.4	0.5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116	270	23	7.8	4.7	3.1
노사발전재단	300	25	2	7.4	4.2	3.2
부산대학교병원	6,981	703	40	5.4	4.1	1.3
서울대학교병원	8,495	605	65	9.7	7.3	2.4
전남대학교병원	5,523	399	35	8.1	4.9	3.2
중소기업은행	13,599	1339	52	3.7	3.2	0.5
충남대학교병원	5,070	417	34	7.5	5.8	1.7
충북대학교병원	2,674	172	17	9.0	6.7	2.3
한국무역보험공사	833	33	3	8.3	2.3	6.0
한국보육진흥원	367	34	2	5.6	2.2	3.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47	541	50	8.5	9.2	△0.7
한국산업은행	3,423	196	21	9.7	8.3	1.4

주: 1. 2024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함
2. 인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점검하고, 각 기관은 제도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용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해당 공공기관은 사용률 저조 원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 잔존 및 직원들의 관심 부족(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성 근로자들의 휴직 신청률 저조(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은행), 급여 차이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장려 영상 게재, 제도 안내 확대 등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임

❑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는 각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관련 제도 운영 실적이 없음

◦ [출산휴가] 2024년 임직원이 300명 이상인 155개 공공기관은 모두 연도 중 출산휴가 실적이 1건 이상 있었으며, 노사발전재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을 제외하면 모두 연내 배우자출산휴가 실적이 1건 이상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함

-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에도 배우자출산휴가 실적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제] 2024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5개 공공기관 중 연도 중 임신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이 1개, 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26개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임신기 단축 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음
- 2024년 육아기 단축 근무제 실적이 없는 26개 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대학교병원 등 17개 기관은 2023년에도 단축 근무 실적이 없었음

[2024년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
임신기 단축 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 (1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5)
육아기 단축 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 (26개)	국토안전관리원(1,09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06), 예술의전당(379),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46), 전북대학교병원(3,1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458), 충북대학교병원(2,674), 코레일관광개발㈜(1,304), 코레일로지스㈜(54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3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337), 한국동서발전㈜(2,59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4), 한국부동산원(1,183), 한국산업인력공단(1,882), 한국수자원공사(6,37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404), 한국수출입은행(1,323), 한국연구재단(626), 한국전력거래소(524), 한국조폐공사(1,4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415), 한전MCS㈜(4,361),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1,172)

주: 1. 2024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함
2. 인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괄호 안은 2024년 임직원 정원 수를 나타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2024년 임직원 정원 300명 이상인 155개 기관 중 연도 중 유연근무별 사용자가 없는 기관 수는 시간선택제 9개, 탄력근무제 9개, 재량근무제 146개, 원격근무제 40개 등임

- 시간선택는 전환형과 채용형으로 구분되며,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집약근무형·근무시간선택형으로 운영됨. 재량근무제는 단일 유형이며, 원격근무제는 스마트워크근무형과 재택근무형으로 구분됨

[2024년 유연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
시간선택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9개)	(재)우체국시설관리단(2,27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0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46), 예술의전당(37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90), 한국교육학술정보원(337), 한국원자력의학원(1,378), 한국장애인개발원(385), 한국콘텐츠진흥원(535)
탄력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9개)	경북대학교병원(5,539), 경상국립대학교병원(4,116), 국립중앙의료원(1,814), 서울대학교병원(8,495),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0), 전남대학교병원(5,523), 충남대학교병원(5,070), 충북대학교병원(2,674), 한국원자력의학원(1,378)
재량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146개)	㈜공영홈쇼핑(382), 기초과학연구원(443), 신용보증기금(2,928), 예금보험공사(843), 한국개발연구원(474), 한국도로공사서비스㈜(5,27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44), 한국서부발전㈜(2,8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365) 등 9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원격근무제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40개)	㈜강원랜드(3,689), ㈜공영홈쇼핑(382), 경북대학교병원(5,539), 경상국립대학교병원(4,116), 국립생태원(623), 국립중앙의료원(1,814), 그랜드코리아레저㈜(1,771), 기초과학연구원(443), 노사발전재단(30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06), 부산대학교병원(6,981), 서민금융진흥원(349), 서울대학교병원(8,495),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0), 예술의전당(37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90), 전남대학교병원(5,523), 전북대학교병원(3,19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65), 제주대학교병원(2,016), 주식회사 에스알(700), 주택관리공단㈜(2,769), 중소기업은행(13,599), 충남대학교병원(5,070), 충북대학교병원(2,674), 코레일관광개발㈜(1,304), 코레일네트웍스㈜(1,680), 한국국방연구원(510), 한국농업기술진흥원(332), 한국도로공사서비스㈜(5,27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89), 한국보육진흥원(367), 한국사회보장정보원(751), 한국산업기술시험원(90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631), 한국원자력의학원(1,378), 한국장애인개발원(3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1,474), 한전MCS㈜(4,361),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1,172)

주: 1. 2024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함
2. 인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괄호 안은 2024년 임직원 정원 수를 나타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2024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5개 공공기관 중 연도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이 1개, 가족돌봄휴직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37개

[2024년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사용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관명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1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458)
가족돌봄휴직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 (37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06), 서민금융진흥원(349), 신용보증기금(2,928), 예술의전당(379), 전남대학교병원(5,5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65), 주식회사 에스알(7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434), 충북대학교병원(2,674), 코레일로지스㈜(543), 한국가스안전공사(1,7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3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5), 한국국방연구원(510), 한국국제협력단(6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639), 한국농업기술진흥원(33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9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4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230), 한국석유관리원(449), 한국소방산업기술원(32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453), 한국수자원공사(6,377), 한국수출입은행(1,3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4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1,474), 한국장학재단(522), 한국투자공사(3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75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544), 한국환경산업기술원(662),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1,1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631), 한국토지주택공사(8,872), 한국해양수산연수원(305)

주: 1. 2024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함
2. 인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괄호 안은 2024년 임직원 정원 수를 나타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 · 가정 양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도의 경우 활용 유인 부족, 기관의 업무 환경과의 적합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 근무제의 경우 급여 감소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 유인이 부족하며, 유급 육아시간제도 등과 같은 대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병원형 공공기관 등은 현장 근무 중심의 기관 특성상 원격근무제 활용 필요성이 낮아 사용 실적이 부재하였다는 입장임

❑ 정부는 공공기관 일 · 가정 양립 제도가 근무환경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여건과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3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분석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 이라 한다)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대육성법”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을 추진

- ○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대상자를 채용
-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 및 졸업 대상자를 채용[1)]

[이전지역인재와 비수도권 지역인재채용 간 비교]

채용 형태	채용 대상 기관	지역인재 대상	근거 법률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 공공기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주: 2024년 공공기관 9개가 지정해제되어 이전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은 116개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지방대학육성법」
제13조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간 상이함

○ 「혁신도시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연도별로 18~30% 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해야 함[2)]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3)]에 규정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22년 이후 30% 이상을 채용해야 함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연차별 18~30%로 의무화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2018년 이전 이전한 공공기관		2019년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해당연도	비율	해당연도	비율
2018년	18	1년차	18
2019년	21	2년차	21
2020년	24	3년차	24
2021년	27	4년차	27
2022년 이후	30	5년차	30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1에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 「지방대육성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되어 2024.8.14.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함[4)]

❑ 이전지역인재는 이전지역 규정에 따라 권역별로 채용

◦ 이전지역의 범위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해 대구·경북, 울산·경남, 충청권 등으로 나뉨

-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졸업 예정)한 사람이 지원 가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2제6항 이전지역범위]

이전 지역	이전지역범위	법적규정
공동혁신도시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제1호
대구 혹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제2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제3호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제5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2025년 기준)은 116개

◦ 권역별로 부산 12개, 대구 9개, 전라남도·광주 13개, 울산 9개, 강원도 10개, 충청북도 11개, 전라북도 6개, 경상북도 7개, 경상남도 10개, 제주도 2개, 충청남도 2개, 세종시 19개, 대전 8개

- 2023년 말 127개 공공기관 중 지정해제된 9개 공공기관[5)]과 부처 소속

4) 2024.2.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조문이 추가되었음

5)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23년 지정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4년 지정해제)

기관 2개[6]를 제외한 116개 공공기관이 대상

❑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유형별 이전지역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2,165명으로 2023년 2,165명 대비 362명 증가(20.1%)하였음

◦ 공기업의 2024년 이전지역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1,200명으로, 2023년 대비 341명 증가(39.7%)하였으며 이 중 준시장형 공기업은 2024년 728명으로 전년 대비 171명 증가(30.7%)하였음

◦ 준정부기관의 2024년 이전지역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728명으로, 2023년 대비 41명 증가(5.9%)하였으며 이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4년 547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4.1%)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이전지역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237명으로, 2023년 대비 20명 감소(△7.6%)하였음

[공공기관 유형별 이전지역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2020~2024)]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1,159	1,064	1,000	859	1,200	341	39.7
시장형	604	506	346	302	472	170	56.3
준시장형	555	558	654	557	728	171	30.7
준정부기관	681	973	888	687	728	41	5.9
기금관리형	186	212	209	162	181	19	11.7
위탁집행형	495	761	679	525	547	22	4.1
기타공공기관	214	266	319	257	237	△20	△7.6
은행형	0	0	0	0	0	0	-
기타	214	266	319	257	237	△20	△7.6
전체	2,055	2,303	2,207	1,803	2,165	362	20.1

주: 공공기관 부설기관 12개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 2024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2,671명으로 2023년 13,375명 대비 704명 감소(△5.3%)

◦ 공기업의 2024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3,754명으로, 2023년 대비 851명 증가(29.3%)하였으며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2024년 1,552명으로 전년 대비 515명 증가(49.7%)하였음

◦ 준정부기관의 2024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3,855명으로, 2023년 대비 240명 증가(6.6%)하였으며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4년 842명으로 전년 대비 122명 증가(17.0%)

◦ 기타공공기관의 2024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는 5,062명으로, 2023년 대비 1,795명 감소(△26.2%)하였으며 이 중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은 2024년 4,876명으로 전년 대비 1,824명 감소(△27.2%)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2020~2024)]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증감률 (B-A)/A
공기업	4,517	3,524	3,317	2,903	3,754	851	29.3
시장형	2,049	1,660	1,157	1,037	1,552	515	49.7
준시장형	2,468	1,864	2,160	1,866	2,202	336	18.0
준정부기관	4,144	4,598	4,481	3,615	3,855	240	6.6
기금관리형	789	936	943	720	842	122	17.0
위탁집행형	3,355	3,662	3,538	2,895	3,013	118	4.1
기타공공기관	7,827	8,118	8,182	6,858	5,062	△1,795	△26.2
은행형	97	140	181	157	186	29	18.5
기타	7,730	7,978	8,001	6,701	4,876	△1,824	△27.2
전체	16,487	16,240	15,979	13,375	12,671	△704	△5.3

주: 공공기관 부설기관 12개 포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퇴사율은 전체 채용인재 퇴사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2018~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14.0%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22.9%에 비해 8.9%p 낮음

◦ 2018~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5.3%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3.8%에 비해 8.5%p 낮음

◦ 2018~2024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2.9%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8.4%에 비해 5.5%p 낮음

◦ 2018~2024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11.2%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5.1%에 비해 3.9%p 낮음

◦ 2018~2024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2.5%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5.8%에 비해 3.3%p 낮음

◦ 2018~2024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8.6%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4.4%에 비해 5.8%p 낮음

◦ 2018~2024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한 지역인재 대비 퇴사한 지역인재 비중은 6.3%로, 전체 채용인재 대비 퇴사한 채용인재 비중인 10.8%에 비해 4.5%p 낮음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소재 대학 이전지역인재채용 퇴사율 비중(2018~2024)]

(단위: 명, %)

지역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전체 채용 인재 (A)	채용 지역 인재 (B)	2018~2024 채용한 인재				
				퇴사한 채용 인재 (C)	퇴사한 지역 인재 (D)	퇴사율		
						비중 (E=C/A)	비중 (F=D/B)	차이 (E-F)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568	178	130	25	22.9	14.0	8.9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232	357	307	19	13.8	5.3	8.5
대구	신용보증기금	1,090.5	239.5	92	7	8.4	2.9	5.5
경북	한국도로공사	1,765	357	267	40	15.1	11.2	3.9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7,494	959	433	24	5.8	2.5	3.3
전북	국민연금공단	2,285	326	328	28	14.4	8.6	5.8
충청권	한국가스안전공사	628	174	68	11	10.8	6.3	4.5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 인재 채용 관련하여 지역인재 선발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소재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계류중인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채용범위와 채용비율 확대 등에 관해 논의

- 이전지역 비수도권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대학원)으로 진학하였을 때에도 이전지역인재로 혜택을 부여하며, 40~50%의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이에 미달시 채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혁신도시시책 이전에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 관련「혁신도시법」계류의안]

제안일자	발의자	주요 내용
2024.6.7.	강대식 의원 등 11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
2024.8.13.	전재수 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2024.9.3.	김태호 의원 등 10인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2025.2.26.	문진석 의원 등 11인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에 지역출신 채용 의무 부과, 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계류중인「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채용 범위 확대 등에 관해 논의

-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된 지방인재채용 범위를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진학한 사람들까지 확대하도록 논의 중
- 또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논의 중임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관련「지방대육성법」계류의안]

제안일자	발의자	주요 내용
2024.6.28.	이종배의원 등 10인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
2024.11.29.	한병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지원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권역별 의무화 대상 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채용 규모가 적은 권역은 타 권역과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통합 채용이 가능한 대구·경북(526명), 충청권(760명), 울산·경남(420명), 광주·전남(749명)에 비해 강원(233명), 부산(331명), 전북(76명), 제주(25명)의 채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 전라북도는 전체 의무화 대상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76명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작으므로 권역 통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권역별 이전지역인재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비중(2024)]

(단위: 명, %)

지역	대구·경북	울산·경남	충청권	부산	광주·전남	전북	제주	강원	합계
규모	526	420	760	331	749	76	25	233	3,120
권역별 비중	16.9	13.5	24.4	10.6	24.0	2.4	0.8	7.5	100

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2024년 지역·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을 활용하여 재작성

◦ 권역 통합은 또한 특정 대학 출신의 지역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 중 상위 2~4개 대학의 채용 비중이 전체 71.2~83%임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소재 대학 이전지역인재채용 비중(2018~2024)]

(단위: 개, 명, %)

지역	권역별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규모	채용규모 상위대학		
			대학수	규모	비중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178	2	143	80.3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357	2	272	76.2
대구	신용보증기금	239.5	2	170.5	71.2
경북	한국도로공사	357	2	272	76.2
광주 · 전남	한국전력공사	758	2	583	76.9
전북	국민연금공단	326	2	251.5	77.1
충청권	한국가스안전공사	167	4	122	73.1
강원	한국관광공사	53	2	44	83

주: 한국전력공사는 고졸 미포함 채용규모, 고졸 포함시 959명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분석

가. 현 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 중임

- ○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의무고용률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함
- ○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은 명단을 공표함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19~2024)]

(단위: %)

구분		2019~2021	2022~2023	2024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4	3.6	3.8
	비공무원	3.4	3.6	3.8
공공기관		3.4	3.6	3.8
민간기업		3.1	3.1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평균 4.06%로, 2024년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3.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3.46%에서 4.06%로 0.60%p 증가하여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4.42%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준정부기관 4.3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31%, 시장형 공기업 4.18%, 준시장형 공기업 3.90%, 기타공공기관 3.84% 순으로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은 2024년 3.84%로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3.8%)을 충족하였으나, 다른 공공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증가폭을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1.22%p로 가장 큰 개선을 보였으며, 시장형 공기업 0.65%p,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0.37%p 순으로 증가한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0.13%p 감소하여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2020~2024)]

(단위: 명, %, %p)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B)	증감 (B-A)
공기업		의무고용인원	5,080	5,117	5,445	5,390	5,762	682
		고용인원	5,716	5,643	5,834	6,070	6,137	421
		고용률	3.81	3.74	3.84	4.04	4.04	0.23
	시장형	의무고용인원	2,219	2,287	2,387	2,363	2,889	670
		고용인원	2,308	2,364	2,477	2,585	3,183	875
		고용률	3.53	3.5	3.72	3.93	4.18	0.65
	준시장형	의무고용인원	2,861	2,830	3,058	3,027	2,873	12
		고용인원	3,408	3,279	3,357	3,485	2,954	△454
		고용률	4.03	3.93	3.94	4.13	3.9	△0.13
준정부기관		의무고용인원	4,487	4,356	4,654	4,241	4,469	△18
		고용인원	5,416	5,657	5,785	5,100	5,193	△223
		고용률	4.06	4.36	4.43	4.3	4.39	0.33
	기금관리형	의무고용인원	1,007	1,039	1,084	1,071	1,165	158
		고용인원	1,221	1,179	1,294	1,202	1,327	106
		고용률	4.1	3.83	4.27	4.02	4.31	0.21
	위탁집행형	의무고용인원	3,480	3,317	3,570	3,170	3,304	△176
		고용인원	4,195	4,478	4,491	3,898	3,866	△329
		고용률	4.05	4.53	4.47	4.4	4.42	0.37
기타공공기관		의무고용인원	5,382	5,852	6,254	6,469	5,824	442
		고용인원	4,225	6,069	6,183	6,582	6,002	1,777
		고용률	2.62	3.47	3.50	3.59	3.84	1.22
전체		의무고용인원	14,949	15,325	16,353	16,100	16,055	1,106
		고용인원	15,357	17,369	17,802	17,752	17,332	1,975
		고용률	3.46	3.81	3.88	3.93	4.06	0.60

주: 1.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에 따름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각 연도말 기준임
3.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은 중증2배수제 적용
4. 장애인고용률은 구분별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을 구분별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주요 쟁점

❑ 2024년말 기준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99개 기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개, 기타공공기관 121개 기관이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 2024년 말 장애인의무고용률이 0%인 공공기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4개 기관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2024)]

(연도말 기준, 단위: %)

유형		기관명
공기업	시장형(1)	한국전력공사(3.44)
	준시장형(8)	㈜한국가스기술공사(3.21), 그랜드코리아레저(주)(3.29), 한국광해광업공단(3.14), 한국수자원공사(3.58),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3.61), 한국조폐공사(3.71), 한국토지주택공사(3.57), 해양환경공단(2.76)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8)	한국국토정보공사(2.59), 한국산업단지공단(3.38), 한국산업인력공단(3.21), 한국승강기안전공단(3.15), 한국인터넷진흥원(3.61), 한국재정정보원(2.61), 한국전기안전공사(2.88), 한국환경산업기술원(3.53)
기타공공기관(8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0.0), 영상물등급위원회(0.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0.0), 한국항로표지기술원(0.0)**
		(재)한국통계정보원(0.88), 기초과학연구원(0.31), 세종학당재단(0.66), 한국건강가정진흥원(0.6), 한국기상산업기술원(0.66)
		(재)예술경영지원센터(1.19),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1.34), 국립해양박물관(1.79), 국방과학연구소(1.48), 국방기술품질원(1.39)[1], 국악방송(1.32), 국제식물검역인증원(1.37), 대한석탄공사(1.93), 대한체육회(1.47), 무역안보관리원(1.5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15), 신용보증재단중앙회(1.8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0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1.79),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1.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34), 한국나노기술원(1.57), 한국노동연구원(1.36),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1.85), 한국문화정보원(1.19),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1.49), 한국원산지정보원(1.82), 한국원자력안전재단(1.09), 한국원자력의학원(1.1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03), 한국지식재산보호원(1.0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92), 한국행정연구원(1.9)

(연도말 기준, 단위: %)

유형	기관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2.57), 88관광개발(주)(2.04), 경북대학교병원(2.22), 공간정보품질관리원(2.6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74), 국립중앙의료원(2.82), 동북아역사재단(2.78), 서울대학교병원(2.98), 영화진흥위원회(2.08),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78), 전남대학교병원(2.62), 전북대학교병원(2.63), 전쟁기념사업회(2.14), 태권도진흥재단(2.0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78), 한국국제교류재단(2.76), 한국발명진흥회(2.2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2.99), 한국산업은행(2), 한국수산자원공단(2.48), 한국수출입은행(2.57),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84), 한국해양과학기술원(2.14), 한국해양진흥공사(2.75), 한전MCS(주)(2.87),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43)
	경상국립대학교병원(3.35), 국립해양생물자원관(3.4), 국제방송교류재단(3.14), 대한법률구조공단(3.51), 부산대학교병원(3.21), 부산대학교치과병원(3.36), 서민금융진흥원(3.23), 에너지경제연구원(3.17), 예술의전당(3.46), 제주대학교병원(3.13), 중소기업은행(3.55), 충남대학교병원(3.07), 충북대학교병원(3.3), 코레일네트웍스(주)(3.49), 한국로봇산업진흥원(3.11), 한국학중앙연구원(3.26)

주: 1)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포함한 수치임(국방기술품질원(1.82), 국방기술진흥연구소(0.90)
1. 연도말 기준
2. 2025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준은 고용의무인원의 충족 여부
4.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기초로 하여 기관의 신고자료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법정 장애인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37개 기관이며,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는 장애인고용을 하고 있지 않음

○ 기관유형별로는 기타공공기관이 34개, 시장형 공기업 1개,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가 포함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는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이 전무한 실정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는 장애인 채용을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없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기관·기업 공표'에는 포함되지 않음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2020~2024)]

(연도말 기준, 단위: %)

유형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평균
공기업	시장형(1)	한국전력공사	3.27	3.12	3.57	3.46	3.44	3.37
	준시장형(1)	㈜한국가스기술공사	2.26	2.65	3.04	3.15	3.21	2.86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1)	한국국토정보공사	2.71	2.73	2.76	2.58	2.59	2.67
기타 공공기관 (3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0	0	0	0	0	0.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0	2.2	0	1.43	1.19	0.96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95	2.88	2.75	2.62	2.57	2.75
		한국통계정보원	0	0	0.88	0.79	0.88	0.51
		경북대학교병원	1.84	2.18	2.22	2.19	2.22	2.13
		국립중앙의료원	2.64	3.08	2.54	2.63	2.82	2.74
		국방과학연구소	1.56	1.49	1.51	1.53	1.48	1.51
		국방기술품질원	1.1	0.98	1.26	1.56	1.39	1.26
		기초과학연구원	0.43	1.07	0.43	0.91	0.31	0.63
		대한체육회	2.45	2.88	1.94	1.51	1.47	2.05
		부산대학교병원	3.01	2.68	2.85	2.94	3.21	2.94
		서울대학교병원	2.06	2.16	2.58	2.69	2.98	2.49
		세종학당재단	0.91	1.59	1.18	0.34	0.66	0.94
		전남대학교병원	2.39	2.27	2.3	2.2	2.62	2.36
		전북대학교병원	2.35	2.43	2.81	2.63	2.63	2.57
		제주대학교병원	3.08	2.66	3.52	3.07	3.13	3.09
		중소기업은행	3.09	3.38	3.44	3.48	3.55	3.39
		충남대학교병원	1.49	2.97	2.81	2.92	3.07	2.65
		충북대학교병원	1.47	2.24	2.48	2.28	3.3	2.35
		태권도진흥재단	0	0	1.16	2.13	2.08	1.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97	0.96	1.69	0.95	1.34	1.18
		한국국제교류재단	1.34	2.45	2.65	2.7	2.76	2.38
		한국나노기술원	1.71	1.64	1.61	1.53	1.57	1.61
		한국문화정보원	1.3	0	0	0	1.19	0.5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31	2.17	1.53	1.55	2.02	1.92
		한국산업은행	2.07	1.96	2.04	1.94	2	2.0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0.62	0.53	2.06	0.53	1.49	1.05
		한국수출입은행	2.78	2.27	2.33	2.39	2.57	2.4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26	1.51	1.37	1.64	2.06	1.77
		한국원자력안전재단	0	1.15	1.11	1.09	1.09	0.89
		한국원자력의학원	0.9	0.9	0.87	0.76	1.11	0.9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3	1.16	1.22	1.36	2.14	1.44
		한전MCS(주)	2.94	2.94	3.21	2.78	2.87	2.95
		한전원자력연료	2.37	2.07	2.34	2.25	2.43	2.29

주: 1. 2020~2021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4%, 2022~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6%, 2024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8%

2. 2025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3.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준은 고용의무인원의 충족 여부

4.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기초로 하여 기관의 신고자료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을 공표하고 있음[1)]

- 2024년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기관·기업 공표'는 2023년 기준 불이행 기관에 대한 것으로 2023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을 공표
- 2024년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 총 3개 기관임
- 재단법인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기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됨

[2024년도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기관(공공기관)]

(단위: 명, %)

기관명	상시근로자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46	5	1	0.8
재단법인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89	3	1	1.1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44	5	4	2.77

자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78호

❑ 2024년말 기준 143개 공공기관이 205억 9,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전년 대비 13억 1,600만원 증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달되는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액을 산정함[2)]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

1)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기업 공표는 2023년도 기준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표로, ①공표 대상임을 사전 예고하고 ②이행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노력을 기울인 곳은 제외하여, ③최종 대상을 확정함. 공공기관의 사전예고 기준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3.6% 미만(전년도 월평균 의무고용률의 100%)

2) 월 단위로 산정하므로 장애인고용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였으며(7억 6,900만원), 뒤이어 시장형 공기업(3억 9,000만원), 기타공공기관(2억 4,700만원) 순임

- 준시장형 공기업(△5,000만원)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900만원)은 소폭 감소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B)	증감액 (B-A)
공기업		4,579	3,231	3,298	2,158	2,498	341
	시장형	1,539	1,032	695	837	1,227	390
	준시장형	3,040	2,199	2,602	1,321	1,271	△50
준정부기관		3,206	1,160	1,656	2,132	2,863	730
	기금관리형	665	179	253	218	179	△39
	위탁집행형	2,542	982	1,403	1,915	2,684	769
기타공공기관		14,842	13,611	15,721	14,983	15,229	247
전체		22,628	18,003	20,674	19,273	20,590	1,317

주: 1.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각 연도말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말 기준 가장 많이 납부한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0억 5,400만원을 납부

-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전남대학교병원(9억 9,100만원), 경북대학교병원(6억 9,600만원), 전북대학교병원(5억 4,800만원), 충북대학교병원(2억 9,600만원), 충남대학교병원(2억 3,300만원), 부산대학교병원(1억 8,300만원), 제주대학교병원(1억 800만원) 등 국립대학병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9억 5,7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 9,000만원), 국립암센터(1억 1,000만원) 등을 납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애인고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가 11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부담금이 전체 공기업 부담금의 46.6%를 차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94.9%를 차지)

[2024년도 기관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납부 기관수	납부액	기관명(금액)
공기업		18	2,498	-
	시장형	4	1,227	한국전력공사(1,165), 한국공항공사(37), ㈜강원랜드(23), 한국서부발전(2)
	준시장형	14	1,271	한국수자원공사(325), (주)한국가스기술공사(22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197), 한국철도공사(1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103), 한국광해광업공단(78), 한국토지주택공사(77), 한국마사회(61), 해양환경공단(5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 한전KPS(주)(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6), 한국조폐공사(2), 주식회사 에스알(1)
준정부기관		20	2,863	-
	기금관리형	4	179	신용보증기금(9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8), 한국무역보험공사(1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7)
	위탁집행형	16	2,684	한국국토정보공사(82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677), 한국전기안전공사(512), (재)우체국물류지원단(213), 한국승강기안전공단(142), 한국산업인력공단(78), 한국재정정보원(70), (재)우체국금융개발원(6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32), 한국인터넷진흥원(24), 한국국제협력단(13), 한국관광공사(12), 한국환경공단(7), 한국연구재단(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5), 한국환경산업기술원(1)
기타공공기관		105	15,229	서울대학교병원(2,054), 국방과학연구소(1,465), 전남대학교병원(991), 한국원자력의학원(957), 한국산업은행(941), 경북대학교병원(696), 기초과학연구원(6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593), 전북대학교병원(548), 국방기술품질원(510)[1], 중소기업은행(470), 한전MCS(주)(458), (재)우체국시설관리단(427), 충북대학교병원(296), 국립중앙의료원(290),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52), 충남대학교병원(23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29), 한국수출입은행(2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17), 코레일테크(주)(200), 부산대학교병원(18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6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14), 국립암센터(110), 제주대학교병원(108), 대한체육회(104) 등
전체		143	20,590	-

주: 1)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265)의 부담액이 포함됨
1. 연도말 기준
2. 2025년 1월 지정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누적액은 1,011억 6,800만원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이 126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함

◦ 동기간 누적 납부액 10억원 이상인 25개 공공기관이 전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74.4% 차지하여, 소수의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누적납부액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임

◦ 서울대학교병원이 5년 누적 126억 6,300만원(12.5%) 납부하여 가장 많이 납부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7곳이 5년 누적 납부액 10억원 이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의료분야의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시사함

◦ 국방과학연구소(5년 누적 60억 1,400만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부담금 납부가 높아, 전문기술 분야의 장애인고용 한계를 시사함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20년 5억 8,100만원→'24년 7,700만원)와 ㈜강원랜드('20년 2억 7,100만원→'24년 2,300만원) 등 일부 기관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크게 감소하여 장애인고용 개선 성과를 보였으나, 한국전력공사('23년 4억 1,700만원→'24년 11억 6,500만원)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1년 5,600만원→'24년 6억 7,700만원) 등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급증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누적납부액 10억원 이상 공공기관]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유형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누적액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748	2,694	2,803	2,364	2,054	12,663
국방과학연구소	기타공공기관	1,032	994	1,242	1,280	1,465	6,014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58	704	1,041	1,061	991	4,355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854	689	882	889	957	4,271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008	781	789	789	696	4,062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846	611	720	774	941	3,892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유형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누적액
한국전력공사	시장형공기업	940	792	342	417	1,165	3,65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477	573	691	770	593	3,104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공기업	581	739	1,087	582	77	3,067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502	420	500	561	827	2,809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53	565	515	454	233	2,721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54	430	491	486	645	2,506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09	585	396	446	296	2,232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공기업	626	703	350	190	325	2,194
국방기술품질원[1)]	기타공공기관	370	404	459	412	510	2,154
전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03	328	301	412	548	1,89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444	56	270	412	677	1,858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집행형	397	102	318	473	512	1,802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628	31	305	203	470	1,638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공기업	542	289	464	46	132	1,472
한전MCS(주)	기타공공기관	-	237	257	390	458	1,342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기타공공기관	134	168	235	307	427	1,270
(주)강원랜드	시장형공기업	271	230	233	370	23	1,127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66	191	303	257	183	1,100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171	165	214	215	252	1,017
소계(A)		15,513	13,481	15,208	14,558	15,458	74,218
전체 공공기관 납부액(B)		22,628	18,003	20,674	19,273	20,590	101,168
비중(A/B)		68.6	74.9	73.6	75.5	75.1	73.4

주: 1) 국방기술품질원은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담금(5년 누적액 1,197백만원) 포함
1. 5년 누적납부액 큰 순위로 정렬(신고금액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관 중 수지차 보전기관[3]의 경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가 수지차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41개 기관은 지출예산에서 수입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2억 6,900만원이며 장애인고용률 미이행으로 인해 국가의 비용 보전이 이루어짐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일부기관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법 위반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관 자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음

[수지차 보전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20~2024)]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누적액
국민체육진흥공단	-	-	9	7	7	23
국립생태원	17	-	-	-	-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12	-	-	-	26
한국가스안전공사	147	18	13	55	-	233
한국국제협력단	46	-	-	-	13	58
한국도로교통공단	-	7	-	-	-	7
한국산업인력공단	-	-	-	4	78	82
한국소비자원	-	-	-	5	-	5
한국인터넷진흥원	53	22	17	57	24	17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4	53	75	12	32	2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3	43	-	26	5	96
한국환경공단	-	-	-	-	7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1	1
게임물관리위원회	-	-	-	-	5	5

3) 수지차 보전기관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출연 또는 보조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지차 보전기관인 공공기관은 56개 기관임(총 62개 기관 중 비공공기관 6개 제외)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누적액
국가유산진흥원	7	10	7	4	-	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	7	11	-	3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3	-	19	19	4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9	53	64	29	82	5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6	6	1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3	30	12	45
대한법률구조공단	33	17	3	19	47	119
독립기념관	-	5	6	-	-	11
동북아역사재단	2	7	3	-	2	15
예술의전당	6	-	0	-	1	8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33	7	5	13	23	81
전쟁기념사업회	-	-	-	-	5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24	21	27	5	9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4	-	-	-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4	-	-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3	-	-	-	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27	4	-	3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16	3	-	-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3	39	103	127	99	40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	-	-	-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	4	20	23	-	56
한국임업진흥원	-	-	2	-	-	2
한국저작권위원회	21	10	-	-	-	31
한국학중앙연구원	7	-	-	-	6	1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	36	41	5	-	98
한국환경보전원	-	-	17	1	-	18
항공안전기술원	21	39	9	-	-	70
합계	597	448	459	484	479	2,269

주: 1. 2025년 1월에 지정된 공공기관 및 수지차 보전기관을 기준으로 함
2. 각 연도말 기준
3. 부존재의 경우 고용의무 비대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자료 부존재 의미
4. 단위 조정에 따른 단수 차이 발생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15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명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함) 제24조의2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임명 목표 수립 및 이행 의무를 규정하면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연차별 보고서는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2025년 보고서가 가장 최근의 보고서임

[공공기관운영법 상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상의 여성임원 임명 노력 의무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 이라 함)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여성이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 데 제도적, 사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제34조),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할 의무(제43조)를 규정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상 여성 임원 선임 관련 규정]

구분	규정 내용
제9조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3.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이 되도록 노력
제34조 (임원선임의 원칙)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장애인·지방인재·여성·청년 등이 임원 직위에 선임되는데 제도적, 사실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임원 구성 시에 다양한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양성평등실현 평가

○ 매년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의 평가지표로서 양성평등실현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하위지표에서 비계량으로 평가하며, 일자리 창출,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노력 등의 지표와 함께 공기업 3점, 준정부기관 1점의 가중치 부여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Ⅰ. 경영관리 범주	
2. 안전 및 책임경영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④ 여성임원 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및 이행계획 적정성, 목표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 * 임원 : 본부직제상 기관장 이사 감사 관리자 :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25.1.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165조의20에서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

◦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최소 1인의 여성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중 4개의 공기업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자본시장법 상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금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주요 쟁점

❑ 2020~2025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임[1)]

◦ 2025년 기준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의 집계가 가능한 86개 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14.8%로 경영지침에서 제시하는 20% 목표를 상당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2022년 22.1%를 정점으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전년대비 5.1%p 하락 후 2025년 0.7%p 감소하여 하락폭은 완화되었으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1) 본 분석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장 최근 제출한 보고서는 매년 3월에 기획재정부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2025년 3월임. 따라서 보고서 발간 후에 추가적으로 임명되는 여성임원의 경우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2022년 대비 2025년 여성임원 비율은 7.3%p 하락하여, 과거 수년 간의 개선 성과가 단기간에 상실됨
- 다만, 2025년 하락폭(0.7%p)은 2024년(5.1%p)에 비해 완화되어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단위: 명, %, %p)

연도	기관수	총임원수	여성임원수	여성비율	전년 대비 증감
2020	87	937	183	19.5	-
2021	87	951	195	20.5	1.0
2022	88	969	214	22.1	1.6
2023	88	947	195	20.6	△1.5
2024	86	920	143	15.5	△5.1
2025	86	951	141	14.8	△0.7

주: 1. 여성임원은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에서 집계하였으며, 현원 기준임
2.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기준 8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62개 기관(72.1%)이 20% 목표에 미달하여, 대다수 기관이 양성평등한 임원구성에 미흡한 성과를 보임[2)]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각각 7.1%와 8.7%에 불과하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9.4%, 위탁집행형 19.2%)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 미달성 기관 비중도 시장형 공기업 92.9%(13개/14개), 준시장형 공기업 88.2%(15개/17개)로 매우 높은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55.8%(24개/4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83.3%(10개/12개)로 상

2) 2025년 1월 공공기관 지정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8개 기관이나 한국수목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를 미제출하여, 8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를 분석함

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임

[여성임원 비율 20% 이상 목표 미준수 공공기관 현황(2025년 기준)]

(단위: 개, %)

유형	기관수 (A)	여성임원 비율	여성임원 비율 20% 미만 기관수(B)	여성임원 비율 20% 미만 기관 비중(B/A)
시장형공기업	14	7.1	13	92.9
준시장형 공기업	17	8.7	15	88.2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43	19.4	24	55.8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12	19.2	10	83.3
전체(공기업·준정부기관)	86[1)]	14.8	62	72.1

주: 1) 한국수목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25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보고서 미제출로 집계되지 않음
1. 여성임원은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에서 집계하였으며, 현원 기준임
2.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여성임원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은 기관은 17개로, 전체 86개 기관의 19.8%에 해당함

○ 기관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의 여성임원 부재율이 42.9%(6개/14개)로 가장 높으며, 특히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관련 공기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준시장형 공기업도 23.5%(4개/17개)가 여성임원을 두지 않고 있음
- 준정부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여전히 기금관리형 3개 기관(7.0%), 위탁집행형 4개 기관(33.3%)이 여성임원을 전혀 임명하지 않고 있음

[여성임원 부재 기관 현황(2025년 기준)]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기관명
공기업 (10)	시장형	6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준시장형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 기관 (7)	기금관리형	3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 1.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여성임원은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에서 집계하였으며, 현원 기준임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여성임원을 전혀 두지 않은 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1개에서 2023년 8개, 2024년 14개, 2025년에도 17개 기관으로 지속적 증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연도별 여성임원 부재기관 추이]

(단위: 개)

연도	기관수	기관명
2020	3	㈜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2021	3	국립공원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1)]
2022	1	한국중부발전
2023	8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안전관리원
2024	14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1)], 한국조폐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1)],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	17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 1) 해당 기관들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 제출 후 여성임원을 임명한 기관임
1.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여성임원은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에서 집계하였으며, 현원 기준임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여성임원이 부재한 17개 기관을 과거 현황과 비교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여성임원 부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중부발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여성임원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년 연속,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8개 기관이 2년 연속 여성임원 부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연속적 여성임원 부재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4년 연속 부재 (2022~2025년)	한국중부발전 등 1개 기관
3년 연속 부재 (2023~2025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
2년 연속 부재 (2024~2025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개 기관

주: 1.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여성임원은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에서 집계하였으며, 현원 기준임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기준,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지침상 목표인 20%에 미달하는 기관은 39개 기관임

-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있으나 20%에 미달하는 기관은 유형별로 시장형 공기업 7개, 준시장형 공기업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개임
- 여성임원이 전혀 없는 17개 기관과 합쳐 총 56개 기관(66.3%)이 지침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임원이 존재하나 20% 미만인 기관(2025년 기준)]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기관명
공기업 (17)	시장형	7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1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22)	기금관리형	3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19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주: 1) 2025년 3.30일 여성임원 1명이 추가 임명됨에 따라 임원 13명 중 여성임원 3명으로 23.1% 충족
1.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여성임원 부재 기관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2025.3.14.)를 바탕으로 재작성

❑ 상임직 여성임원의 제한적 참여와 비상임직 편중 문제

○ 여성임원의 직급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비상임직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 참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25년 기준, 전체 8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기관장이 여성인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개 기관(2.3%)에 불과함

○ 여성임원 141명 중 기관장직을 포함한 상임직에 임명된 여성은 18명으로 12.8%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87.2%에 해당하는 123명은 비상임직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여성임원 임명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보다는 외부 자문 역할에 치중되어 있음을 시사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임원의 직급별 분포(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합계
인원	2	16	123	141
(비중)	(1.4)	(11.3)	(87.2)	(100.0)

주: 1.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여성임원은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에서 집계하였으며, 현원 기준임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직급별로 전체 임원 대비 여성임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 참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 기관장직의 여성비율은 2.4%에 불과하며, 일상적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여성비율도 5.0%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반면,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여성비율은 22.3%로 상임직 대비 4배 이상 높아 여성임원 임명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여성임원의 87.2%가 비상임직에 집중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하며,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한 경영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임원 대비 여성임원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임원 수	여성임원 수	여성임원 비율
기관장	82	2	2.4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318	16	5.0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551	123	22.3

주: 1. 2025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2. 여성임원은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보고서에서 집계하였으며, 현원 기준임
자료: 기관별 「2025년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연차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경우 여성 이사를 두고 있으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제20조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개 공기업임

◦ 4개 공기업 모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두고 있어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여성 구성 비율 자체는 낮음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이사회의 여성인원이 2명으로 그 비율이 각각 14.3%(한국가스공사), 18.2%(한국지역난방공사)임
-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 중 여성이 1명으로 자본시장법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여성이사 비중이 각각 7.1%로 매우 낮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적용을 받는 공기업 이사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구분	이사회 구성		
		남성	여성	전체
㈜강원랜드	인원	13	1	14
	비중	92.9	7.1	100.0
한국전력공사	인원	13	1	14
	비중	92.9	7.1	100.0
한국가스공사	인원	12	2	14
	비중	85.7	14.3	100.0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원	9	2	11
	비중	81.8	18.2	100.0

주: 자본 또는 자산 기준은 2024년말 기준
자료: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 공공기관 주요 구매 실적 현황 분석

가. 현 황

❑ 정부는 민간과의 상생·협력 기능 강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대응, 장애인고용 촉진 등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사항을 개별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1]은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 중임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제품 구매 실적 관리는 담당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음

-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의해 환경부에서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음[2]
- 중증장애인생선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음[3]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이하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음[4)]
-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음[5)]

[공공기관 구매 관련 주요 현황]

구분	법령	구매 실적 관리 부처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환경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획재정부

❑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8,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5년 누적 구매액은 3조 8,889억원임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임[6)]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실적 점검)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공기업의 경우 2024년 구매액은 4,860억원이며 전체 녹색제품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은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2조 3,044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59.3%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은 2024년 구매액이 2,602억원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1조 1,652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30%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음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4,282	4,293	4,675	4,934	4,860	23,044	59.3
시장형	1,028	1,149	1,302	1,460	1,620	6,559	16.9
준시장형	3,254	3,144	3,373	3,474	3,239	16,484	42.4
준정부기관	1,957	1,937	2,397	2,759	2,602	11,652	30.0
기금관리형	232	292	344	446	396	1,710	4.4
위탁집행형	1,725	1,645	2,053	2,313	2,206	9,942	25.6
기타공공기관	611	768	988	998	828	4,193	10.8
전체	6,851	6,997	8,060	8,691	8,290	38,889	10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 및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3,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5년 누적 구매액은 1조 4,928억원임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7)]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공기업의 경우 2024년 구매액은 1,767억원이며 전체 생산품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은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8,568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57.4%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음

-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최근 5년 간 전체 구매액 중 32.5%를 구매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은 2024년 구매액이 933억원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4,048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27.1%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1,789	1,560	1,600	1,852	1,767	8,568	57.4
시장형	1,100	834	859	1,011	1,045	4,849	32.5
준시장형	689	726	741	841	722	3,719	24.9
준정부기관	727	792	789	807	933	4,048	27.1
기금관리형	82	74	92	89	91	427	2.9
위탁집행형	645	718	697	718	843	3,620	24.3
기타공공기관	380	411	501	498	523	2,312	15.5
전체	2,895	2,763	2,891	3,156	3,223	14,928	10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40조 3,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5년 누적 구매액은 202조 1,652억원임

◦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자[8]가 생산한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해야 함[9)]

◦ 공기업의 경우 2024년 구매액은 25조 3,422억원이며 전체 생산품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129조 2,287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63.9%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음

-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최근 5년 간 전체 구매액 중 36.7%를 구매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은 2024년 구매액이 8조 9,202억원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42조 2,676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20.9%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음

-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최근 5년 간 전체 구매액 중 19.6%를 구매하고 있음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234,089	261,664	268,028	275,085	253,422	1,292,287	63.9
시장형	140,107	154,941	148,536	150,548	148,723	742,855	36.7
준시장형	93,981	106,723	119,492	124,538	104,699	549,432	27.2
준정부기관	77,070	85,292	80,358	90,755	89,202	422,676	20.9
기금관리형	4,426	4,807	5,570	5,294	5,330	25,427	1.3
위탁집행형	72,644	80,485	74,788	85,460	83,872	397,249	19.6
기타공공기관	55,132	62,396	62,802	65,581	60,779	306,689	15.2
전체	366,290	409,351	411,188	431,421	403,403	2,021,653	10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혁신제품은 ①「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②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③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임[10)]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2,675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5년 누적 구매액은 1조 2,772억원임

○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11)]

- 혁신제품 지정 및 목표 설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절차를 운영·관리하고 있음[12)]

---

10)「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1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기획재정부 훈령 제726호「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기업의 경우 2024년 구매액은 1,816억원이며 전체 혁신제품 구매액 중 차지하는 구매비중이 높은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9,977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78.1%를 공기업이 구매하고 있음

-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최근 5년 간 전체 구매액 중 60%를 구매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은 2024년 구매액이 859억원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구매액이 2,795억원으로 전체 구매액 중 21.9%를 준정부기관이 구매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혁신제품 구매 실적 현황(2020~2024)]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 5년간 누적	
						금액	비중
공기업	1,845	2,149	2,371	1,796	1,816	9,977	78.1
시장형	1,359	1,519	1,899	1,394	1,488	7,659	60.0
준시장형	487	629	472	402	328	2,318	18.2
준정부기관	211	380	536	810	859	2,795	21.9
기금관리형	8	23	54	163	89	338	2.6
위탁집행형	203	357	482	646	770	2,457	19.2
전체	2,057	2,529	2,907	2,605	2,675	12,772	100.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심의대상) ①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쟁점

(1) 구매실적 미달 공공기관 실적 목표 달성 필요

❑ 2024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총 117개로 해당 기관은 구매계획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13]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함[14]
- 시장형 공기업 3개, 준시장형 공기업 7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개, 기타공공기관 91개 기관이 구매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음

---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기관 녹색제품 2024년 구매이행계획 미달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액	실제 구매액	계획 대비 구매비율
시장형 공기업 (3)	한국공항공사	5,579	5,075	91
	한국지역난방공사	5,550	4,393	79
	(주)강원랜드	2,960	1,088	37
준시장형 공기업 (7)	한전KPS(주)	3,788	3,643	96
	주택도시보증공사	979	920	94
	한국토지주택공사	299,529	260,907	87
	대한석탄공사	55	40	73
	(주)에스알	348	228	6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8	103	65
	한전KDN(주)	2,607	1,343	5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	국민연금공단	2,592	2,526	97
	기술보증기금	1,068	704	6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	한국소비자원	103	102	99
	우체국물류지원단	134	132	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700	3,405	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91	518	88
	한국전력거래소	724	633	8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84	504	8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28	278	85
	한국관광공사	252	211	8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56	225	63
	한국전기안전공사	2,088	1,209	58
	한국가스안전공사	2,685	1,253	47
	한국산업인력공단	5,400	2,464	46
	한국국토정보공사	1,008	224	22
기타공공기관 (91)	시청자미디어재단 외 90개 기타공공기관	52,925	25,061	47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구매 목표를 미달한 91개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1분기) 자료 및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 3년 연속 구매실적을 미달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2022년 46.5%, 2023년 85.9%, 2024년 94%), 우체국물류지원단(2022년 88.9%, 2023년 52.3%, 2024년 99%), 한국국토정보공사(2022년 82.2%, 2023년 44.0%, 2024년 22%)로 해당 기관은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녹색제품 연례적 구매비율 미달 기관 현황]

(단위: %)

구분	공공기관	구매이행 계획액 대비 구매비율		
		2022	2023	2024
준시장형 공기업 (1)	주택도시보증공사	46.5	85.9	9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우체국물류지원단	88.9	52.3	99
	한국국토정보공사	82.2	44.0	2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구매계획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음[15)]

◦ 구매계획 미달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5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83개 등 총 93개로 나타남

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2024년 총 구매액의 1% 미달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	실제 구매액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시장형 공기업 (2)	한국가스공사	403,539	2,285	0.57
	한국석유공사	48,274	200	0.41
준시장형 공기업 (5)	한국조폐공사	68,126	504	0.68
	한국광해광업공단	32,831	2,285	0.64
	해양환경공단	78,971	561	0.64
	주식회사 에스알	41,885	184	0.44
	주택도시보증공사	56,532	242	0.4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한국관광공사	99,804	561	0.56
	국가철도공단	909,479	3,355	0.3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12,970	1,200	0.29
기타공공기관 (83)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외 82개 기타공공기관	5,206,510	12,497	0.24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구매 목표를 미달한 83개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 5년 연속 구매실적을 미달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020년 0.65%, 2021년 0.12%, 2022년 0.12%, 2023년 0.56%, 2024년 0.4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년 0.16%, 2021년 0.24%, 2022년 0.07%, 2023년 0.2%, 2024년 0.29%)임
- 4년 연속 구매실적을 미달한 기관은 한국조폐공사(2021년 0.64%, 2022년 0.34%, 2023년 0.82%, 2024년 0.68%), 해양환경공단(2021년 0.92%, 2022년 0.77%, 2023년 0.67%, 2024년 0.64%), 한국가스공사(2021년 0.97%, 2022년 0.89%, 2023년 0.79%, 2024년 0.57%)로 해당 기관은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연례적 구매비율 미달 기관 현황]

(단위: %)

구분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형 공기업 (2)	한국석유공사	0.65	0.12	0.12	0.56	0.41
	한국가스공사	-	0.97	0.89	0.79	0.57
준시장형 공기업 (2)	한국조폐공사	-	0.64	0.34	0.82	0.68
	해양환경공단	-	0.92	0.77	0.67	0.6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16	0.24	0.07	0.2	0.2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 대다수 공공기관이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달성하였지만, 기타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은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구매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16)]

◦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나노기술원(46.6%), 국제방송교류단(45.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45.2%), 새만금개발공사(33.9%)은 구매실적목표를 미달하였음

◦ 특히 새만금개발공사의 경우 구매실적이 2023년 42.9%에서 2024년 33.9%로 하락하였으며 2년 연속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음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2024년 총 구매액의 50% 미달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	실제 구매액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기타공공기관 (4)	한국나노기술원	13,632	6,346	46.6
	국제방송교류재단	24,871	11,246	45.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760	795	45.2
	새만금개발공사	38,218	12,952	33.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88개 중 22개 기관은 혁신제품 구매 실적을 미달성하였으므로, 목표 미달 기관은 구매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연간 총 물품구매액의 1.7% 이상[17]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경영평가[18]에 반영하고 있음

○ 구매계획 미달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3개, 준시장형 공기업 9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개임

17) 혁신구매목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매년 변경되어 혁신구매목표 달성률 지표로 경영평가편람에 반영되며 2024년의 경우 기관별 2022년 연간 총 물품구매액의 1.7%임

18)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노력 및 성과' 항목 예시 중 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제품 구매 등)는 '혁신구매목표 달성률'로 평가하고 있음

[공공기관 혁신제품 2024년 총 구매액의 1.7% 미달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공공기관	혁신기업제품		
		총 구매액 (2024)	실제 구매액 (2024)	총 구매액(2022) 대비 구매비율
시장형 공기업 (3)	(주)강원랜드	95,048	726	1.25
	한국지역난방공사	83,208	327	0.38
	한국가스공사	148,507	367	0.29
준시장형 공기업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66	14	0.8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589	54	0.75
	한국토지주택공사	1,003,010	8,334	0.7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6,568	30	0.33
	한국조폐공사	68,658	278	0.31
	주택도시보증공사	4,547	20	0.27
	주식회사 에스알	20,783	40	0.27
	한국광해광업공단	3,055	32	0.2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51,971	41	0.0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국민연금공단	30,717	176	0.7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9)	한국고용정보원	8,103	142	1.4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0,161	103	1.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882	188	0.6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37,235	855	0.4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42	30	0.42
	국가철도공단	580,968	1,163	0.34
	한국국토정보공사	9,109	61	0.23
	한국관광공사	7,644	3	0.04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858	0	0.00

주: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산정 내 총 구매액은 2022년 총구매액이 기준임(경영평가 지표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 3년 연속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22년 0.08%, 2023년 0%, 2024년 0.8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22년 0.06%, 2023년 0.01%, 2024년 0.7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22년 0.01%, 2023년 0.44%, 2024년 0.44%), 한국조폐공사(2022년 0%, 2023년 0.09%, 2024년 0.31%), ㈜에스알(2022년 0.23%, 2023년 0%, 2024년 0.27%), 한국광해광업공단(2022년 0.69%, 2023년 0.22%, 2024년 0.25%)로 해당 기관은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혁신제품 3년 연속 구매액 미달 기관 현황]

(단위: %)

구분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2022	2023	2024
준시장형 공기업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08	0	0.8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06	0.01	0.75
	한국조폐공사	0	0.09	0.31
	주식회사 에스알	0.23	0	0.27
	한국광해광업공단	0.69	0.22	0.2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01	0.44	0.4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2025년 2분기) 자료

(2) 혁신제품·녹색제품 구매계획 기타공공기관 이행 확대 필요

❑ 공공기관 제품 구매 관련법에 따르면, 관련법 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함

[공공기관 구매 관련 이행 대상 기관]

구분	법령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정의)**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혁신제품	**「기획재정부 훈령 제727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 법에 근거해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19]과 중소기업제품[20]은 관련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녹색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21]

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혁신제품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지표를 산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은 법령에 규정된 혁신제품 구매 평가대상임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행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혁신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 관련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실적을 소관 부처가 평가하고 있는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논의하여 지표 개정 작업 수행 중임[22)]

❑ 한편, 녹색제품 관련하여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부처 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련 경영평가 지표가 누락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처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구매 이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련 경영평가 지표가 반영

---

21)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에 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있으며(0.2점), 기타공공기관은 개별부처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여 실적평가항목 및 배점은 부처별 상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22)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실적을 소관 부처가 평가하도록 2025.9월 중 정부업무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올해 실적부터 평가할 예정임

되지 않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 기획재정부 소관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부처 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같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 부처 평가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는 평가에 해당 지표가 산입되어 있음
- ○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대상 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가 누락되어 해당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기관 평가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기관운영평가(3년 주기)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기관 평가 기준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지표가 미포함됨
  - 향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기관 평가 기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가 추가 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 국방기술품질원의 평가 지표에 반영이 필요

[부처 기관운영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경영평가 지표가 누락된 기타공공기관]

(단위: 개)

부처	해당 기타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녹색제품 구매 품목 확대 필요

❑ 공공기관[23]의 품목별 녹색제품 미구매 사유를 살펴보면, 구매 품목 및 제품 사양의 부족, 인식 및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중 2024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117개로 시장형 공기업 3개, 준시장형 공기업 7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개, 기타공공기관 91개 기관이 구매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음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담당자들은 구매 품목 및 제품 사양의 부족에 대한 미진함을 1순위 사유로 선택하여,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제품 사양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24]

◦ 전 분야에서 녹색제품 주요 품목별 미구매 사유로 품목 및 사양의 다양성 부족을 1순위 원인으로 제시함

- 특히 사무/교육/영상/가전 분야에서 녹색제품 품목 및 사양의 다양성 부족에 관해 4,676건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전자/정보/통신 부문 2,134건, 토목/건축 부문 1,165건 등 품목 확대에 관한 수요가 높음

◦ 사무/교육/영상/가전 분야(1,152건), 섬유/ 고무 /위생/ 여가 부문(392건)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 부족

2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등을 포함

24) 조사방법·기간: 에코스퀘어(ecosq.or.kr) 집계(2025.2월~4월), 조사대상: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담당자(3,482개 기관, 중복 응답 포함), 품목별 2024년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이 3%이상 저조한 경우 미구매 사유 조사

[녹색제품 주요 품목별 미구매 사유]

(단위: 건)

구분	사무/ 교육/ 영상/가전	전자/ 정보/ 통신	토목/ 건축	섬유/ 고무 /위생/ 여가	전기/ 시험/ 계측	기계/ 설비	그 외	합계
품목 및 사양의 다양성 부족	4,676	2,134	1,165	867	346	135	273	9,596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	-
구매계획 변경	1,035	597	324	184	112	24	112	2,388
	3순위	2순위	2순위	6순위	2순위	5순위	-	-
인식 및 신뢰도 부족	1,152	349	134	392	66	15	22	2,130
	2순위	5순위	6순위	2순위	5순위	7순위	-	-
정부권장 정책간의 상충	854	391	317	227	68	30	97	1,984
	5순위	4순위	3순위	4순위	4순위	3순위	-	-
불편한 구매 방법	716	326	170	352	52	26	75	1,717
	6순위	6순위	4순위	3순위	6순위	4순위	-	-
높은 가격	456	229	92	95	43	18	44	977
	7순위	7순위	7순위	8순위	7순위	6순위	-	-
낮은 품질	259	91	44	113	14	5	16	542
	8순위	8순위	8순위	7순위	8순위	8순위	-	-
기타	901	451	162	213	78	34	50	1,889
	4순위	3순위	5순위	5순위	3순위	2순위	-	-
합계	10,049	4,568	2,408	2,443	779	287	689	21,223

주: 그 외 품목은 화학/소방/안전, 도로 시설/용품, 차량/운반, 원부자재/기타, 식음료/서비스/에너지 등임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 따라서,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의무 구매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구매 품목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는 녹색제품에 관한 관리를 총괄하며,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중 환경표지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탄소제품에 대한 인증/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25]

- ◦ 환경부는 구매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적정한 품목 확대가 없으면, 지속적 구매계획 미이행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품목 확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제품 수요 다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강화하여, 녹색제품 중 환경표지제품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 부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저탄소제품의 경우 2020년 7월 녹색제품으로 편입되어 관련 제품에 관한 홍보를 확대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5) 녹색제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제품으로 분류되며, 해당 제품은 환경산업기술원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인증됨
환경표지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저탄소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우수재활용(GR)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17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가. 현 황

❑ 2023년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25조[1]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김원 예산분석관 (florone@assembly.go.kr, 6788-4685)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형 혁신도시[2] 건설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3] 제18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도별 배치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

-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409개 중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34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4]에 근거한 기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됨[5]
-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인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최종 153개로 조정됨
- 본 분석은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정부 소속기관 44개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폐합기관[6] 등 3개 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1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함[7]

---

2)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함

3) 이후 2023.6.9.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4) ① 중앙행정기관, ②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③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④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⑤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⑥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

5)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2016.

6)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광해광업공단(2021.9.)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2020.12.)

7) 이 중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에 각각 부산 및 세종으로 이전하여 분석 대상(106개)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2022년, 2024년에 각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에 106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되었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77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19개, 그 외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이 10개임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연도	이전 기관			개수
	혁신도시(77)	세종특별자치시(19)	개별 이전(10)	
2010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오송)	2
2011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1
2013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개발연구원	-	9
2014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53

(단위: 개)

연도	이전 기관			개수
	혁신도시(77)	세종특별자치시(19)	개별 이전(10)	
2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 한국장학재단(대구)	23
20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수력원자력㈜(경주)	4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공원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8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재외동포재단(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3
20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	-	3
합계				106

주: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각 2022년, 2024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재외동포재단은 2024.6.4. 해산함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재명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계획

○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2025.8.)에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51번)’이 포함되어 있음

- 2025년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한 뒤, 2027년 이후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 건설을 통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후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

구분	내용
국정 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추진전략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과제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국토부·산업부)
주요내용	ㅇ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전 절차에 신속 착수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 -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즉시 실시('25.下), 추진체계 신속 구축 - 연구·공론화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 수립('26) - 청사 임차·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27~) -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교육·의료·정주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 캠퍼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나. 주요 쟁점

❑ 2025년 1월 기준,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총 154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46.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23개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25개), 경기도(24개), 대전광역시(22개)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서울 (123)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5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10
	기타 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영홈쇼핑,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항공박물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외동포협력센터, 무역안보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8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보전원, 한식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부산 (20)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2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15
대구 (14)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2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7
인천 (7)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1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5
광주 (3)	기타 공공기관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3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대전 (22)	공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4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4
	기타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테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한국통계정보원	14
울산 (9)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2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4
	기타 공공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
세종 (25)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
	기타 공공기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2
경기 (24)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2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기타 공공기관	88관광개발㈜, 국립암센터, 국방전직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19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충북 (14)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3
	기타 공공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치산기술협회	11
충남 (6)	공기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2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1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념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전북 (10)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3
	기타 공공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7
전남 (16)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3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5
	기타 공공기관	한전MCS㈜,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8
경북 (10)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3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기타 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과학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5
경남 (12)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기타 공공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7

(단위: 개)

지역	기관유형	기관명	개수
강원 (12)	공기업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2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기타 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4
제주 (4)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1
	기타 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2
합계			331

주: 본점 소재지는 2025년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함

- 이 중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음

○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에서는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상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은 2025년 8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안)에 포함되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 공론화,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

- (용역명)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 (용역목적)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책의 미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완 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 (용역기간) 2023.11.~2025.10.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8)]

- 이와 더불어 부산 외 지역에 소재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방안도 검토 중임

[부산 외 지역에 소재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현소재지	기관명
서울특별시 (4개)	해양환경공단(공기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타공공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기타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2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준정부기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기타공공기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로, 2022년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이 포함되었으나, 집권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실제 추진된 바는 없음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발췌)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교통부)	ㅇ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교통부)	ㅇ 이해관계자(지자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료: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7.

❑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이와 관련하여, 2025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심의·의결하였음

18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현황

가. 현 황

❑ 임금피크제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임[1)]

-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 정년을 종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
  - 직급별 정년이 상이하여 일부 직급만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
  -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전 직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2)]
- ○ 위와 같은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임금피크제의 도입 형태는 크게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두 가지로 구분됨

- ○ 정년연장형은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함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1)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5.6.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임금피크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 등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정년보장형은 현재 정년이 60세 또는 60세 이상인 기관이 정년 연장없이 기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함

❑ 임금피크제의 당초 목적은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음

◦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매뉴얼에서도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

-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 안정과 노후 생활에 도움
- 청년구직자에게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일자리를 제공
-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훈련된 인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가능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를 받았으나 현재 시점까지 도입을 하지 않았거나 제도는 있어도 2020.1.1.~2025.6.30.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인원이 없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임금피크제 미도입 및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관]

구분	기관명
임금피크제 미도입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전MCS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 부재 (2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악방송,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무역안보관리원, 세종학당재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주: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 부재의 경우 2020.1.1.~2025.6.30.까지를 기준으로 검토함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임금피크제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과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을 바탕으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음

○ 피크임금 감액률의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내에 적용되는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의 평균으로 도출함

- 예를 들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 피크임금 대비 5%를 감액하고 2년차에 피크임금 대비 10%를 감액하기에 감액률의 평균인 7.5%의 감액률로 계산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감액률 현황]

기관명	임금피크제 기간	피크임금 감액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년 (1)	10% 이하 (19)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주식회사 에스알, 학교법인한국폴리텍(2급 이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년 (6)	
국가생명윤리정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코레일관광개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3년 (10)	
방송문화진흥회, 한국재정정보원	3년 초과 (2)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1년 (4)	11~20% (17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급 이상)	1년 6개월 (1)	
㈜공영홈쇼핑,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무역안보관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업연구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에너지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년 (89)	

기관명	임금피크제 기간	피크임금 감액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기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학의약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2년 (89)	11~20% (17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급 이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년 6개월 (2)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철도공단(2급 이상), 국립공원공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생태원, 국립암센터, 그랜드코리아레저㈜, 노사발전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책임급),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건설기술교육원, (재)축산환경관리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학교법인한국폴리텍(3급이하), 한국고용정보원(3급 이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2급 이상),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상하수도	3년 (73)	

기관명	임금피크제 기간	피크임금 감액률
협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은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년 (73)	11~20% (17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사무직), 한국기술교육대학교(6급 이하), 한국수자원공사(2급 이상)	3년 초과 (3)	
국립해양박물관, 국토안전관리원(3급 이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2급 이상),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환경보전원,	1년 (8)	21~30% (7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원랜드, 88관광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악방송, 국토안전관리원(2급 이상), 근로복지공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세종학당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인천항만공사, 전쟁기념사업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정년연장형),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급이하), 한국수자원공사(3급이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투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2년 (40)	
수협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2급 이상), 창업진흥원(미래설계형),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부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양환경공단	3년 (19)	
한국고용노동교육원(3급 이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부서장 이상)	3년 초과 (3)	

기관명	임금피크제 기간	피크임금 감액률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수력원자력(청원경찰),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급 이상)	1년 (17)	31~40% (52)
공무원연금공단, 군인공제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예술의전당,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일반직), 한국전력거래소(일반직),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지역난방공사(5급 이하), 한국철도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DN, 한전KPS	2년 (23)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종합직),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일반직),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3급 이하)	3년 (11)	
한국전력거래소(별정직)	3년 초과 (1)	
코레일테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급 이상, 업무직),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중부발전(청원경찰),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1년 (9)	41~50% (2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예금보험공사(사무서무직, 별정직), 한국가스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부발전(일반직), 한국지역난방공사(4급), 한국토지주택공사	2년 (12)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3년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3급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	1년 (3)	50% 초과 (5)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년 (2)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은행형 공공기관[3]의 경우로 한정하여 검토해본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인원의 비율이 높은 기관들도 파악됨

◦ 2024년 말 기준 임직원 수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인원의 비율이 8%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은행형 공공기관의 현황은 12개 기관임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임금피크제 인원 비율이 8% 이상인 기관 현황]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12.1	11.6	10.0	9.3	8.1	5.9
기술보증기금	10.7	12.8	12.6	11.8	10.9	11.0
신용보증기금	10.1	10.2	10.0	9.7	8.3	6.3
우체국물류지원단	9.0	8.9	9.8	10.7	12.0	9.1
축산물품질평가원	1.8	2.9	4.8	6.8	9.5	9.7
한국관광공사	6.2	6.9	8.5	9.4	9.6	9.1
한국교통안전공단	8.7	9.4	8.4	6.7	8.3	11.5
한국농어촌공사	10.2	9.1	8.5	9.1	9.3	1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7	5.7	6.6	8.9	9.6	9.4
한국전력공사	11.5	10.5	9.0	8.8	9.9	8.0
한국전력기술(주)	5.7	6.7	8.4	10.2	10.1	9.1
한국토지주택공사	7.5	9.2	10.4	10.2	9.4	6.2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및 알리오(ALIO)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해당 기관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거나 무보직으로 조정함

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거나 무보직으로 조정한 기관 현황]

구분	직무 또는 직책 조정 여부
기술보증기금	임금피크제 편입 시 별도 직무(영업점 사후관리, 혁신형 기업인증 등 16개 직무)를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음
신용보증기금	임금피크제 편입 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여 임금피크직원 담당 별도 직무(신용조사·상시관리, 컨설팅 등 28개 직무)수행
우체국물류지원단	사무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마지막 연차의 경우 '별도직군'으로 분류되며 '경영지도실장'이라는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별도의 직무를 부여함
축산물품질평가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2년차부터의 직원을 별도직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별도직군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별도의 직급 및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국관광공사	임금피크 2년차의 경우 별도직무(현업 제외)를 수행하고 임금피크 3년차의 경우 직급을 반납함
한국교통안전공단	별도 직무(자격시험 운영관리, 시설물 관리점검 등 28개 직무) 운영관리 및 배치
한국농어촌공사	보직자의 경우 임금피크 2년차부터 보직 미부여(별도 직무, 현장 지원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진입 전 보직에서 제외(팀원 근무)
한국전력공사	간부 직위의 경우 별도직무(배전선로 순시, 현업지도·지원 등)를 수행
한국전력기술(주)	임금피크제 적용 2년차의 경우, 무보직으로 조정(별도 직무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직원의 경우 별도직무(안전·품질 실태점검, 공동주택 컨설팅 등) 부여 및 수행

○ 현원 중 8% 이상의 인원이 무보직 또는 임금피크제 인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직무로 이동되어 수행하는 것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19 공공기관 지침 위반 대출 제도 운영 문제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규정할 것
  - 주택융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 ○ LTV 및 근저당 설정 여부는 대출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였는지와 대출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
- ○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의 경우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마련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규정함
- ○ 관리비 대납 여부는 관리비를 입주민이 아닌 기관이 대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박지민 예산분석관(cow25c@assembly.go.kr, 6788-3731)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table>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td></tr>
<tr><td>주택융자금
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r><td>LTV 적용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td><td>제46조제7항: 공공기관이 제4항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td></tr>
<tr><td>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지원 여부</td><td>제46조제7항 :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td></tr>
<tr><td>관리비 대납 여부</td><td>제46조제8항 :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관련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주택융자금 신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14개 공공기관은 2022~2024.7.31까지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12개 공공기관은 2025.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대출 당시 한은 금리	기관의 대출 금리	대출 직원 수	대출 총 규모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24.7.31. 기준	'25.7.31. 기준
국립공원공단	3.46~5.47	2.00	40	1,791,500	미개선	미개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3.46~5.47	2.00	32	1,689,073	미개선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4.55~5.47	4.02~4.16	6	720,000	미개선	미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3.46~5.47	1.50~2.50	78	10,195,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공항공사	4.53~5.04	2.60~3.10	81	4,200,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광해광업공단	3.46~5.47	2.43~3.89	142	10,537,263	미개선	미개선
한국부동산원	3.46~5.47	2.20	62	8,283,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3.46~5.47	1.15~3.70	133	15,081,256	미개선	미개선
한국수자원공사	3.46~5.47	1.33~4.43	143	12,230,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자산관리공사	3.46~5.47	3.30~6.70	73	8,455,828	미개선	미개선
한국조폐공사	3.46~5.47	2.50	237	10,502,500	미개선	미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3.46~5.64	인정과세~4.82	513	42,823,120	미개선	미개선
한국산업은행	3.46~5.47	2.36~5.40	102	6,933,220	미개선	개선 (2025.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4.82	3.00	1	35,000	미개선	제도 폐지

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에 대해서 주택융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명, ㎡, 천원)

기관명	대출 직원 수	구입 당시 주택 면적	대출 총 규모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24.7.31. 기준	'25.7.31.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	20	91~157	1,819,950	미개선	미개선
한국도로공사	5	88~122	337,000	미개선	개선 ('241231)
한국자산관리공사	1	105.5	70,000	미개선	개선

주: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3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1인당 7천만원을 초과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10개 공공기관은 2025.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1인당 7천만원 초과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출 직원 수	대출 당시 1인당 한도	대출 총 규모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24.7.31. 기준	'25.7.31. 기준
기술보증기금	2	100,000	200,000	미개선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5	130,000	650,000	미개선	미개선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11	100,000	873,000	미개선	미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64	150,000/200,000	9,781,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광해광업공단	72	100,000	6,919,200	미개선	미개선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95	100,000	8,984,090	미개선	미개선
한국부동산원	59	140,000	8,159,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98	150,000	13,859,740	미개선	미개선
한국자산관리공사	64	160,000	8,080,828	미개선	미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377	98,000	36,680,470	미개선	미개선
한국도로공사	90	75,000	6,747,500	미개선	개선 ('24.12.31)
한국농어촌공사	86	120,000	8,988,500	미개선	개선 ('25.2.28)
한국산업은행	48	100,000	4,795,920	미개선	개선 (2025.6)

주: 1인당 7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관련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2022년 이후 공공기관 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18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14개 공공기관은 2025.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대출 당시 한은 금리	기관의 대출 금리	대출 직원 수	대출 총 규모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24.7.31. 기준	'25.7.31. 기준
기술보증기금	3.46~5.47	3.50	259	7,509,5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3.91~5.47	3.00	177	4,267,150	미개선	미개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09~4.19	3.00	174	4,925,600	미개선	미개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46~5.47	2.00	78	3,643,848	미개선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4.06~5.47	3.50~5.02	311	8,747,840	미개선	미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4.05	2.50	49	960,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공항공사	3.46~5.47	2.60~3.10	179	4,460,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관광공사	3.46~4.36	2.50	184	6,113,592	미개선	미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3.10~5.64	2.00	787	16,155,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부동산원	3.46~5.47	2.30~5.09	273	7,667,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조폐공사	3.46~5.47	4.00	244	4,245,860	미개선	개선 (2024.말)
한국석유공사	3.46~5.47	2.50	896	28,160,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수자원공사	3.46~5.47	2.50	2,197	67,322,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수출입은행	4.06~5.04	3.00~4.91	90	1,772,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언론진흥재단	4.05~5.47	1.75~3.50	55	1,100,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46~4.68	2.50	298	5,693,333	미개선	개선 (2024.말)
한국농어촌공사	3.46~5.47	2.50	1,148	29,572,140	미개선	개선 ('25.1.1)
한국산업은행	3.46~5.47	2.46~5.21	881	24,281,550	미개선	개선 (2025.6)

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8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에도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8개 공공기관은 2025.7.31. 현재에도 여전히 관련 대출제도가 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았음

[1인당 2천만원 초과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 기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출 직원 수	대출 당시 1인당 한도	대출 총 규모	제도 개선 여부 (개선일)	
				'24.7.31. 기준	'25.7.31. 기준
기술보증기금	230	100,000	7,354,000	미개선	미개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11	80,000	4,508,000	미개선	미개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2	70,000	3,815,436	미개선	미개선
신용보증기금	271	50,000	13,212,630	미개선	미개선
한국부동산원	381	30,000	11,401,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산업은행	626	40,000	21,164,370	미개선	미개선
한국석유공사	513	50,000	21,780,000	미개선	미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177	30,000	4,267,150	미개선	미개선

주: 1인당 2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경우만 개선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대출 시 LTV 및 근저당 적용 여부, 예산 및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 여부 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규정한 내용을 위배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28개 공공기관은 지침 개정 이후 현재까지 사내 대출 시 LTV 비율 지침을 위배한 사례가 있음

◦ 30개 공공기관은 지침 개정 이후 현재까지 사내 대출 시 근저당을 미설정한 사례가 있음

◦ 13개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가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은 기관이 소유한 인턴 기숙사의 관리비를 기관이 대납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병원은 해외 초청 객원의사에게 간헐적으로 소유한 숙소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기관이 대납한 사례임

[주택융자금·생활안정대출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배한 사례가 있는 기관]

구분	공공기관
LTV 적용 위배 사례 (28)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일부, 2024년까지 미적용),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2023년까지 미적용),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자원공사(2023년까지 미적용),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2022년까지 미적용), 한전KDS(2023년까지 미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일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3년까지 미적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2022년까지 미적용), 한국농어촌공사(2024년까지 미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2025년부터 대출 중단), 한국전력거래소(2023년까지 미적용)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체육산업개발㈜(2023년까지 미적용)
근저당 설정 위배 사례 (30)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일부, 2024년까지 미적용), 한국석유공사(일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일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부동산원(일부) 한전KDN(주) (2022년까지 미적용), 한전KDS(2023년까지 미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일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일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3년까지 미적용), 한국수자원공사(2023년까지 미적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일부) 한국관광공사(2022년까지 미적용), 한국농어촌공사(일부, 2024년까지 미적용), 한국전력거래소(2023년까지 미적용)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체육산업개발㈜(2023년까지 미적용), 한국투자공사(일부)
관리비 대납 위배 사례 (13)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임차, 선수단 숙소 일부 대납)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선수단 숙소), 한국조폐공사(일부 기관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일부 기관 부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임차, 2024년까지 일부 물건 기관 납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22년까지 기관 납입) **(기타)** 국립암센터(임차, 일부), 국립중앙의료원(임차), 중소기업은행(임차, 일부) 한국수출입은행(임차, 2022년 11월까지 일부 물건 기관 납입), 서울대학교병원(소유, 일부), 충북대학교병원(소유, 일부), 전남대학교병원(소유, 일부)

주: 관리비 대납 여부 중 '소유'는 소유 사택 관리비를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사례이며, '임차'는 임차한 사택 관리비를 기관이 부담하는 사례이며, 일부는 '일부'는 일부 물건에서 관리비를 기관이 대납하는 사례임

❑ 이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는 한편 관련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 공공기관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가. 현 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1] 등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

-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위(이상 지침 제30조제1항의 징계시효가 5년인 행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이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할 것

❑ 「국가공무원법」 제80조[2]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3] 등에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징계시효가 5년인 행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⑩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

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6조 및 제68조[4]에서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할 것을 명시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지침 제26조에 따른 징계 관련 인사관리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평가 시 최하위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해당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최근 5년간(2020.1.1.~2025.6.30.) 해당 기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약 9억 5,245만원임
- 국방과학연구소는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및 채용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16명 전원에게 A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으로 3억 9,248만원을 지급하였음

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8조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기술(주)은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1명에게 S등급을 부여하고 2,20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1명에게도 1,599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5)]
- 이 밖에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각각 8,727만원, 6,203만원, 5,783만원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최하위 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기관명	성과등급	지급액
재산 관련 비위	건축공간연구원	B등급 1명	-
	식품안전정보원	S등급 2명, C등급 1명	-
	신용보증기금	B등급 3명	3,464
	중소기업은행	3등급 5명	34,475
	중소벤처기업연구원	B등급 1명	1,9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B등급 1명, C등급 1명	12,460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B등급 1명, D등급 1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A등급 1명	-
	한국은행	B등급 2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D등급 1명	1,724
	한국전력기술(주)	S등급 1명	22,01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S등급 1명, B등급 1명	1,058
성 관련 비위	국가철도공단	B등급 1명	-
	국방과학연구소	A+등급 1명	25,166
	국토연구원	B등급 2명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B등급 1명	3,288
	기술보증기금	B등급 4명, 퇴직 1명	20,16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B등급 2명	-
	식품안전정보원	C등급 1명	-
	신용보증기금	A등급 3명, B등급 4명, C등급 1명	34,651
	에너지경제연구원	B등급 1명	4,178

5) 한국전력기술(주)은 성과연봉지급 규정을 개정(2023.12.29.)하여 현재는 성과 등급과 무관하게 관련 징계자들에게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성과평가 관련 내부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원)

구분	기관명	성과등급	지급액
성 관련 비위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S등급 1명, A등급 1명, B등급 1명	3,708
	주택관리공단	C등급 1명, D등급 2명	17,239
	중소기업은행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3명	41,778
	코레일테크	B등급 2명, D등급 1명	4,9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등급 1명	6,001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C등급 1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등급 3명	7,851
	한국산업인력공단	B등급 3명	-
	한국세라믹기술원	D등급 1명	20,909
	한국자산관리공사	B등급 1명	1,722
	한국전력기술(주)	B등급 1명	15,993
	한국주택금융공사	C등급 1명	1,550
	한전MCS	A등급 2명, B등급 1명, C등급 1명, D등급 1명	5,388
음주운전 관련 비위	국가철도공단	B등급 1명	-
	국방과학연구소	S등급 1명, A+등급 4명, A등급 7명	282,561
	기술보증기금	S등급 2명, B등급 3명, 퇴직 1명	41,865
	신용보증기금	A등급 1명, B등급 2명, C등급 2명	19,715
	중소기업은행	2등급 1명, 3등급 1명	11,022
	한국고용정보원	다등급 1명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B등급 1명, C등급 1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B등급 1명, C등급 1명	-
	한국세라믹기술원	D등급 4명	50,658
	한국인터넷진흥원	B등급 1명, C등급 1명	12,063
	한전MCS	B등급 2명, C등급 1명, D등급 1명, 평가 미확정 4명	1,750
채용 관련 비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C등급 2명	21,358
	국방과학연구소	S+등급 1명, S등급 1명, A+등급 1명	84,75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B등급 1명	1,90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B등급 1명, C등급 2명	16,399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A등급 1명, B등급 1명	55,35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B등급 1명	88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S등급 1명, B등급 1명	3,641
	해양환경공단	A등급 1명, B등급 1명	56,925
합계			952,447

주: 1. 2020.1.1.~2025.6.30. 기준으로 작성
2. 성과급의 범위에는 경영평가 성과급뿐만 아니라 내부평가급도 포함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한 징계 과정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159개임

- 331개의 공공기관 및 11개의 주요 유관기관[6] 중 183개의 기관은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음
- 반면, 공기업의 경우 19개의 기관에서, 준정부기관의 경우 30개의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243개의 기관 중 102개의 기관에서 해당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특히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세 곳 모두 해당 규정이 부재함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내부규정이 부재한 기관 현황]

유형		공공기관명
공기업 (19)	시장형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30)	기금관리형 (5)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0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통계정보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전직교육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유형	공공기관명
기타공공기관 (10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무역안보관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만공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새만금개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스포츠윤리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자동차손해배상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항공안전기술원
주요 유관기관 (8)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주: 2025.6.30.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내부규정이 없는 기관 중 48개 기관은 재산 관련 징계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규정의 부재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음

- 공공기관 중 재산 관련 징계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순임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20년 이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재산 관련 비위를 이유로 48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5년 6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각각 38명, 17명의 직원

이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나 내부규정의 부재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하지 않음

[재산관련 징계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기관 현황]

(단위: 명)

기관명	재산 관련 징계자 수	기관명	재산 관련 징계자 수
(주)강원랜드	4	한국도로교통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한국방송공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7
국방과학연구소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국방전직교육원	2	한국산업은행	1
국토안전관리원	1	한국석유공사	1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	한국수력원자력(주)	1
대한석탄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4
대한적십자사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새만금개발공사	2	한국원자력의학원	4
스포츠윤리센터	3	한국은행	5
신용보증기금	2	한국자산관리공사	2
중소기업은행	11	한국장애인개발원	1
코레일유통(주)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전력공사	38
한국공항공사	2	한국중부발전(주)	3
한국교육방송공사	4	한국철도공사	6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	48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환경공단	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한국남동발전	6	한전KDN(주)	3
한국농어촌공사	9	한전MCS(주)	1
한국도로공사	10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

주: 1. 2020.1.1.~2025.6.30. 기준 징계 내용 등이 확정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
2. 2025.6.30. 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부 공공기관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였음

◦ 최근 5년간(2020.1.1.~2025.6.30.) 해당 기관들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처분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약 15억 7,789만원임

◦ 해당 기관들은 정직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정직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비율을 지급도록 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음

◦ 중소기업은행은 2020년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28명의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 중 총 4억 9,641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정직 처분자들에게 각각 2억 4,983만원, 1억 8,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음

[정직 처분자에 대한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인원	지급액	현행 관련 내부규정
군인공제회	3	15,538	월봉 6분의1 지급
수협중앙회	4	18,427	기본급의 30% 지급
한국교직원공제회	4	41,616	통상임금의 50% 지급
한국은행	3	34,398	정직기간 중 본봉과 직책급 합계액의 60% 지급
국립울진해양과학관	1	388	성과급만 지급
국립중앙의료원	12	42,336	보수의 3분의1 지급
국방과학연구소	5	69,920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지급
국토연구원	1	971	보수의 3분의1 지급
기초과학연구원	1	2,012	평균임금의 3분의1 지급
독립기념관	2	6,893	임금의 2분의1 지급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	5,552	보수의 3분의1 지급
신용보증기금	6	71,110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관련 위법행위, 음주운전, 채용비위 외의 사유로 인한 정직의 경우에는 기준급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
예술의전당	4	4,572	연봉월액의 2분의1 지급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인원	지급액	현행 관련 내부규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3,597	기본급의 3분의1 지급
전북대학교병원	8	16,726	보수의 3분의1 지급
제주대학교병원	2	9,048	본봉의 2분의1 지급
주택관리공단	9	42,751	본봉 및 가족수당만 지급
중소기업은행	28	496,413	1) 팀장급 이하 및 계약직원 : 본봉의 60% 범위 내 지급, 1년간 상여금의 정직기간 불지급 2) 지점장급 이상 : 월 기본급 60% 지급, 월 직무급 불지급 1년간 평가성과급의 정직기간 불지급 3) 임금피크직원 : (일반직원) 정직기간동안 매월 기본급여의 2% 해당액 지급 및 1년간 직무평가급여의 정직기간 불지급, (개별 근로계약 직원) 정직기간동안 매월 기본급여의 4% 해당액 지급 및 1년간 직무평가급여의 정직기간 불지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	11,595	기본급의 3분의1 지급
충북대학교병원	4	25,000	봉급의 2분의1 지급
코레일네트웍스(주)	20	35,965	기본급의 2분의1을 지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4,793	급여의 3분의1 지급
한국과학창의재단	4	44,978	월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하고 당해연도 경영평가성과급 및 성과급은 전액 감하여 지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22,551	보수의 2분의1 지급
한국국토정보공사	8	23,810	보수의 3분의1 지급
한국나노기술원	1	7,713	보수의 3분의1 지급
한국노동연구원	1	2,546	보수의 3분의1 지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6	37,484	기본급의 2분의1 지급
한국도로교통공단	5	16,957	보수월액의 3분의1 지급
한국동서발전	14	180,000	근무기간 일할계산 지급, 성과급의 경우 정직기간이 1~3개월의 경우 40%, 4~6개월의 경우 50%를 감액한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한국문학번역원	1	923	월급여의 2분의1 지급
한국부동산원	1	3,352	기본급의 70% 지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6,401	월 보수의 3분의1 지급
한국인터넷진흥원	2	4,678	본봉의 3분의1 범위 내 지급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인원	지급액	현행 관련 내부규정
한국철도공사	77	249,835	개인적 비위행위로 정직된 경우 0%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50% 지급
한국콘텐츠진흥원	3	15,072	월봉의 50% 지급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1,974	보수의 3분의1 지급
합계	264	1,577,895	

주: 2020.1.1. ~ 2025.6.30.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8개 기관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지 않았음

◦ 중소기업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8개 기관은 2022년 이후 성 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모든 징계위원회에서 위원 성별의 구성이 편중되었음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총 8회의 성 비위 관련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8회 모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 성 비위 관련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별 구성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징계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객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성별 구성이 편중된 기관 현황]

(단위: 건, %)

기관명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미만이었던 횟수(A)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횟수(B)	비율(A/B) ×100
경북대학교병원	1	1	100.0
국가유산진흥원	1	5	20.0
국립생태원	2	6	33.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3	33.3
그랜드코리아레저㈜	1	3	3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1	100.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1	100.0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1	1	100.0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1	1	100.0
중소기업은행	8	8	100.0
충남대학교병원	1	1	100.0
충북대학교병원	1	1	100.0
코레일네트웍스	2	3	66.7
한국가스공사	2	3	66.7
한국고용정보원	1	1	100.0
한국공항공사	1	4	2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1	100.0
한국남부발전	1	1	1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	100.0
한국도로공사	1	8	12.5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	4	25.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1	100.0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1	1	100.0
한국발명진흥회	1	2	5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2	5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1	100.0

(단위: 건, %)

기관명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미만이었던 횟수(A)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횟수(B)	비율(A/B) ×1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10	2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2	100.0
한국석유공사	1	3	33.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3	33.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2	50.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	2	50.0
한국체육산업개발㈜	3	4	75.0
한국콘텐츠진흥원	1	2	50.0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	1	100.0
한국한의약진흥원	1	1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3	66.7
한국환경공단	1	7	14.3

주: 1. 2022.1.1.~2025.6.30. 동안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기준으로 작성(재심 등 포함)
2. 해당 기간동안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1 이상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5.06.30.까지 내부 규정을 개정한 경우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들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발간일	2025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세일포커스(tel 02·2275·6894)

ISSN 3091-9509

ⓒ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8-002040-10
ISSN	3091-950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